

남북대화유경험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록(95-Ⅱ)  
(제16차 ~ 제26차)

1995. 12

통 일 원  
남 북 회 담 사 무 국



# 목 차

1. 제16차 회의 (1995. 6. 20) .....	3
* 주제 : 김정일 공식등장시 우리의 대응방향	
2. 제17차 회의 (1995. 7. 11) .....	25
* 주제 : ① 제2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취할 바람직한 입장	
② 대북쌀지원과 관련한 홍보대책	
③ 8.15 광복 50주년을 전후한 종교단체들의 남북공동행사 추진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	
④ 북측이 유엔군사령부 불인정 내지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 포 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향	
3. 제18차 회의 (1995. 7. 25) .....	51
* 주제 : ① 제3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취할 바람직한 입장	
② 귀순인사(홍금수) 초청 설명회	
4. 제19차 회의 (1995. 8. 17) .....	93
* 주제 : 제3차 북경회담 무기연기에 따른 대북조치방향	
5. 제20차 회의 (1995. 8. 29) .....	105
* 주제 :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결과 (강윤관 경수로기획단 부장 초청설명 및 토론)	
6. 제21차 회의 (1995. 9. 12) .....	121
* 주제 : 제3차 북경회담 추진방향	
7. 제22차 회의 (1995. 9. 26) .....	147
* 주제 : 북한의 농업실태와 식량부족현황 (이민복 전 북한 농업연구사 초청설명 및 토론)	

8. 제23차 회의 (1995. 10. 17) .....	163
* 주제 : ① 북한의 『10.10』 동향 검토	
② 북경 쌀협상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총체적 평가	
③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기조 재정립문제	
9. 제24차 회의 (1995. 11. 21) .....	187
* 주제 : '95년도 남북관계 총체적 평가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기조 재정립 문제	
10. 제25차 회의 (1995. 12. 5) .....	207
* 주제 : ① 미·북협상구도를 남·북협상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② 대북우회전략 추진방안	
③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급격한 태도변화 가능성	
④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복귀현상이 북한에 미칠 영향	
11. 제26차 회의 (1995. 12. 12) .....	229
* 주제 : ① 평화체제 구축문제	
② 내년도 총선정국과 관련 우리 내부의 혼란을 노린 북한의 예상 되는 대남책략	
③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지원문제	

# 1. 제16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김정일 공식등장시 우리의 대응방향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6. 20(화) 15:00~18:0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김정일 공식등장시 우리의 대응방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5명) : 정홍진, 강인덕, 송한호, 최문현, 송용섭, 차영구,  
이영호,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조덕송,  
김동환,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김정일의 공식등장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남북회담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게시되었습니다.

국장 : 아시다시피 경수로문제가 넘어야 할 산들은 많겠지만 제네바 합의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북한이 식량사정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게 됨으로써 북경에서 남북간에 쌀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70년대이후 우리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대북정책이 그와 같은 정세의 변화 속에서 어느 부분을 조정하고 어느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놓고 정부내에서 통일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예측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잘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문제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측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분명히 예측되는 부분은 김정일이 새로운 통치권자로 공식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상의 통치권자로 군림하고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등장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김정일이 공식등장을 하는 사건, 그 사건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3세 고령의 김일성이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측되었으나 김일성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올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김일성 사망이 우리 내부적으로 조문사절 파견논쟁이라는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정부, 통일원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공식등장을 했을 때 같은 문제로, 김일성은 6.25 전범자이기 때문에 조문사절 파견이 부정적인 것이었다고 치고, 김정일은 6.25 전범자가 아



나라는 전제하에서 민족공동체 회복의 동반자 관계, 기본합의서 정신 등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로 볼 때 김정일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의식에 다른 나라가 축하사절을 보내는 경우 우리 내부에서도 축하사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 그리고 각계에서 축하전문을 보내겠다, 축하사절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우리가 겪은 교훈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김정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북적 측면 또는 대내적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부장 : 회의진행은 정홍진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격의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 위원장 : 토론순서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분야 위원순으로 말씀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3분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인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덕 위원 :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정일의 등장은 2가지 가능성을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할 것인가, 또 하나는 당총비서만 맡고 국가주석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총비서는 맡고 국가주석은 다른 사람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총비서만 맡는다면 실질적인 수령이지만 노동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의 대남전략이 지금과 같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축하사절단을 보내거나 코멘트를 할 때 구미에 당기는 소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가 코멘트를 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간단한 코멘트가 좋겠고, 정부대표단은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 대 당입니다. 집권당이나 야당에서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겠다고 할 때 막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저로서는 김정일의 대남전략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당대표 등 개별적인 접촉이나 축하문의 발송에 대해서까지 막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은 막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 강위원님의 말씀이 원칙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만, 우선 김정일이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차지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주석이 된다면 상호 존재를 남북한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의사는 전달해야 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더구나 야당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당은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면 될 것이고, 종교인들도 무슨 일로 가든지 간에 놔두는 것이 더 대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의 쌀문제의 경우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다가 자꾸 티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태연스럽게 그러한 사실만 인정하고 간단하게 희망적인 문장만 하나 넣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구 위원 : 김정일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군사관계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고, 다른 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리가 대북대화를 구걸하고 국제적 여건, 특히 북미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이 두가지에 우리가 잡혀있는 것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우리를 식민지주구로 몰아가고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듯한 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대북관계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북방외교를 통해서 러시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사절단이 우리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적대국인 한국과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것에서 소외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기본적인 발상과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김정일 등장한 후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외 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북한에다 취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첫번째로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식으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미·북관계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관계없이 관계진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내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북한의 절박한 국내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한·미관계만 걸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탈냉전의 국가정책이 정착되어 있고 우리는 대북관계에 관한 한 냉전의 기본정책속에서 한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는 탈냉전의 정책과 우리가 현재 처한 냉전정책의 갈등이 구조적 갈등이고 원천적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정책을 조정하거나 인식을 바꾸든지 해야만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예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생겨서 국교정상화는 아니지만 외교적인 일상접촉을 계속하면서 충분히 정부레벨의 이야기가 마음대로 오고 갈 때, 이것은 미·북 평화협정, 미·북관계 정상화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간단하게 보아 넘길 수가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시간이 문제이지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언젠가는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막으면서 우리보다 조금 뒤에 와 달라고 소위 북한이 말하는 구걸을 해야 합니까? 미국, 일본에게 구걸하고 북한에게 대화하자고 구걸하면 우리는 거지가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조정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치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일본의 뒷다리를 잡고 계속 끌려가면서 KEDO에 돈만 댈 것이냐 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봉착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은 김정일이 등장하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박차고 나가든지, 아니면 대북관계에 관한 과거 독일의 『동방정책』(Ostpolitik) 같이, 제2의 『7.7선언』을 내놓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박차고 나가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면 한·미간에 군사부문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정부 레벨에서 요구하는 것이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시대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북한은 더이상 한국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멀지 않아 북한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국내적인 여건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정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인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이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태도도 변함이 없고 한·미동맹의 체제도 변함이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존가능성, 위협으로서의 북한의 의미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을 말씀드려 봅니다.

김인덕 위원 :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용이한 환경은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이 만들어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김정일이 김일성 1주기가 끝나면 등장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본다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행동하기 쉬운 상황은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한에 대한 화해협력하는 제스처를 공식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고, 남한 정부에 대한 고립화전략을 변경시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를 고립화시키는 길은 조금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행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정부가 움직이기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부로서 행동할 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김정일에게 축하사절단을 보낼 수 있느냐? 저는 못 보낸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건조하고(Dry) 사무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통일전선의 전략적 운영을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

는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 우후죽순으로 가겠다고 할텐데 막을 수 있는 것이냐?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 가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판문점을 넘어가면 우리의 관할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접촉승인형식으로 간다고 할 때, 더구나 야당에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틀림없이 야당에서 간다는 소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막으면 막은 대로 문제가 생기고 안 막으면 안 막은 대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는 소수의 대표단이 정부와 협조해서 가게하면 된다고 봅니다. 단, 여당은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총비서로 임명될 때는 우리 당 대표가 한마디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주석이 된다면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가 행동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김정일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주석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송 위원 : 우선 국내의 내부사정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조문사절 파동문제가 야당에서 나와서 북한으로서는 두고두고 써먹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주석직에 먼저 취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시각에서 여야간 또는 특정인물의 주장과 정부노선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조문파동까지도 함께 씻어내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강위원님께서서는 축하문을 보내더라도 야당을 보내고 여당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내사정 등도 고려하고, 또 국내사정을 언급한 까닭은 언론이 앞장서지만 국민여론도 등에 업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조문파동의 문제도 해소시킨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공동결의를 해서 축하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고, 북한의 개별적인 전술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에 제의를 해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축하사절단을 평양에 보냄으로써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타임지 등 김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보면 임기중에 남북정상회

담을 열어서 구멍을 크게 뚫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주변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주석직에 취임을 한다면 국회는 국회대로 하도록 하고 정부로서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든지 해서 “김정일 주석의 취임으로 북한체제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까지 합의해 놓고 유감스럽게 갑작스러운 김일성 주석의 유고로 회담이 연기되었음을 북한측으로부터 우리는 통보받은 바 있다. 이 통보는 아직도 유효하며 우리측은 김정일 주석의 취임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기를 희망 또는 기대한다.”는 정도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던져 불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호 위원 : 우선 김일성 사망시 조문파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을 것이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분단과 6.25전쟁에 대해서 김일성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김정일이 주석직, 총비서직에 오른 공식적인 등장을 할 경우에도 김일성체제를 김정일이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하기에는 국민감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재야, 야당에서 축하한다고 할 경우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다고 하면 정부가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북한이 축하사절을 보낸 적도 없을 뿐더러 북한이 아직도 우리와 대화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 사절을 보낸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좀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환 위원 : 후계정권이 공식적으로 등장할 경우 예상되는 대남교란술책은 큰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 사람을 초청하는 형식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승인할 것이냐 아니냐가 당면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 입장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후계정권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는 정권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대화상대방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정통성은 없는 정권입니다. 김일성이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개념에서 김정일이 되든 누가 되든 제대로 우리가 승복할만한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체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무엇 때문에 비정통적인 정권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 주어야 하느냐? 현실적으로 암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든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축하를 해 가면서 한다면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야단체·정당·인사에 개별적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정부는 개인적인 일로 돌려 버리고,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에서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으로 본다고 하는 입장은 계속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문문제 때문에 우리 앞이 가로막혀서 풀리지 않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만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조문을 했으면 대화가 되고 조문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되느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조문을 하지 않았어도 대화를 합니다. 그 보다 더한 일을 했어도 필요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도 북한에서 필요치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가령 김정일이 총비서, 주석이 되든지간에 정부입장에서는 승인하는 절차는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언급하시는 것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등장해서 나오는 태도를 봐 가면서 상대할만 하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정상회담, 남북회담이 급합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축하라는 것은 축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석된 것을 우리는 인지한다(take note of) 그리고 김일성이 죽기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생산적인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한 문장만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김동환 위원 : 국제법에서 정부가 하나 나타날 때 승인절차가 명시적인 승인과

사실상의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승인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태도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할 때 만나게 되면 사실상 승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든 누군가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위원이 말씀하신 상황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정부가 발언하기 좋은 환경은 북한에서 상당기간 절대로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 질문도 하고 관심도 가질텐데 정부가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단체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각 단체가 가겠다고 할 때 막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통일원에서 접촉승인을 하는 형식으로 용인하는 방식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송한호 위원 :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쓴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약점의 노정으로 생각해서 더욱 저돌적으로 나오고 더욱 비타협적으로 나오는 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인데, 김정일의 취임을 축하하고 축하사절단을 보낸다, 민간단체가 가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남북대화 촉진의 요인이 되기 보다는 북한으로서는 통일전선전술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아무 논평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논평을 하는데, 논평을 할 때는 오히려 취임을 계기로 해서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다같이 협력해 나가자든가 또는 북한의 주민에 대한 자유라든가 권리향상이 좀더 있어야 된다는 정도



로 우리가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요구할 것을 포함시키는 논평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사절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망하고 정통성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하나를 허용한다면 친북적인 세력들이 너도나도 들어간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붓물이 터지고 우리 내부는 수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물론 우리 체제가 자신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남적 대정책이 없어야 한다든가 남북대화에 나와야 된다든가 하는 강한 전제조건을 내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제에 대한 태도 표명이 있을 때 우리는 민간단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사실상 불허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대화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서두른다고 북한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상 북한이 현재 처한 당면과제는 체제유지와 안전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회담 등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의에 대해서 북한이 오해하게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화성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실효성 있는 대화를 제의해야지 서두르고 구걸하는 식의 인상을 주게 되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대화제의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상필 위원 : 우선 이러한 것이 의제로 나왔다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우리 체제가 북한에 대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을 과시한다거나 또는 형의 입장에서 양보하는 입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있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겠다하는 몇가지 이유로 북한에 가는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관계는 적대관계입니다. 적대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북한은 우리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간다

면 우리 정부는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번째 서로 상대방을 인정한다 할 때는 호혜원칙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암살기도까지 했는데 축하한다는 것은 호혜원칙에 반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언젠가는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차원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에 천명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가면 못가는 것입니다. 사례별로 할 것 같으면 항상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러한 입장을 정부가 정확하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구종서 위원 : 김정일이든지 누가 통치권자가 되든지 정부차원에서는 갈 필요도 없고 언어차원에서도 일체 태도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미수교국이고 적대국가이고 친선적인 것이 전혀 없는 상대의 집권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야 말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구할 경우에는 말을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송위원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기여하는 정권, 과거의 테러행위 등 국민을 못살게 하는 정권이었지만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에 그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 가고자 할 때는 이번이 기회입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보내면 어떻겠느냐. 10만이고 백만이고 다 보내면 북한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리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론제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가면 마음대로 취재가 되지 않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을 북한에 던짐으로써 북한의 인심을 잃게 만드는 것이 남북대결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모택동이 썼던 백가쟁명 백화제방(百家爭鳴 百花齊放)의 기회를 두고 누가 가서 무엇을 하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몇만이라도 다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접하겠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대접을 해 주겠느냐, 자유로운 통행이 인정되었느냐.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불평불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평양축전 때도 그랬어야 된다고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제권을 북한에 주어서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보내 주니까 신변보장 등을 잘 해라 해서 우리가 대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는 문제는 사실 정부가 수습하고 통제하기는 어렵고 시민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일성의 조문은 우리 국민정서에 없는 것입니다. 친북적인, 환상적인 일부가 하는 것이지 상당부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친북적인 행동은 남한 국민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봉식 위원 : 기본적으로 외교는 외교, 대결이면 대결입니다. 상호간에 필요가 합치될 때 회담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필요가 어느 일방이라도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언론이 유도를 해서인지, 정부의 태도가 왔다갔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어떠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끔 교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추호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내부에서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데 언론에 의해 춤을 추어서 상당한 국민들이 북한은 같은 동족으로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안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로 착각을 유도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전선전술이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때로는 북한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코멘트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북

한이 우리에게 제의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경계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김정일이 등장을 할 경우에는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들어선 사실은 인정하고, 그 정권이 과거와는 달리 진정한 민족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 라는 코멘트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을 때, 북한은 분명히 자기들의 체제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 역제의를 해서 누구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산가족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초청해 다오.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여든 간에, 북한이 받아들여기를 기대해서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엉뚱한 제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송응섭 위원 : 북한이 망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 중에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남혁명전략 포기, 통일전선전술 포기, 우리를 인정하고 공식대화를 하자고 해도 안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공식문서상으로 표현만 안했지 우리의 통일전략은 흡수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대전략은 흡수통일, 전술적으로는 보낼 사람 보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일이 등장하면 기본합의서에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인정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기본합의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중적으로 흡수통일이라는 대전략을 가지고 전술적으로 시행착오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니까 우리도 이론적으로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적 접근을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득환 위원 : 저는 김정일 공식등장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김정일 공식등장시라고 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표현이 하나 있고 등장이후의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2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등장시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 뿐만이 아니고 등장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김정일이 공식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김일성이 했던 것을 답습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와서 쌀문제 등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분야만 본다면 몇가지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차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을 못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김일성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도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들 하신 범위 안에서는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아무리 제스처라고 해도 제 의견은 정도가 아닌 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도로 하고 다만 메시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등장이후에 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뚜렷한 것이 아니냐. 길게 보고 이러한 것을 바꿔라 하는 우리의 정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몇가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에너지, 외화부족에 대해서 기본정책을 집중시키고 있고 자유무역지대를 일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일본, 미국에게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가 과제입니다.

섬유업계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하지만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북한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해서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도 벌써 폐업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부족, 상관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것을 정부가 해줄 의무가 있다면 베트남에 나가는 것을 북한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몇가지 변화되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림을 그려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위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현실에 접근시키는 정부와 경제계와 국민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업계 사람들과 회의를 해 보니까 통일, 통일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통일준비교육이 전무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무국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문헌 위원 : 독일은 전쟁도 없었고, 정상회담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정상회담을 한 호네커, 크렌스가 통일후에는 범인으로 확정돼서 처벌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범인으로 확정된 것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할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천여명 정도 되는데 살인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문제는 적어도 통일된 후의 장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벽돌을 어디에다 놓느냐 하는 심정으로 정책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6.25, KAL기 폭파, 아웅산테러 기타 여러가지 비난을 하고 있는 대상의 우두머리가 공식적으로 취임했다고 했을때 우리가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석이 되어도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만한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전제하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지 기본정책, 체제성격의 변화가 없는 김일성 통치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다만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의미부여를 한다면 김일성 애도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김정일 시대가 출범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인격이 김정일 인격으로 바뀐 것뿐이지 단절이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석이건 총비서건 취임이 되었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북수정당하에서 자유총선거로 국가원수가 선출되었을 때만이 축하의 대상이지 북한과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은 어떤 경우에도 축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에 무기연기한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북한

이 우리에게 통보해 오기전에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김정일 취임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정사실을 인정하는 냉정하고 중립적인 자세 외에는 태도를 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상 절대 북한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환영한다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을 내다보고 과연 법률적, 도덕적으로나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봐서 환영할만한 사람인지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나왔을 경우, 김정일이 주석으로 취임했을 경우는 정부 대변인, 통일원 대변인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총비서만 된다면 집권여당인 민자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에 코멘트하는 식으로 격하시키고, 그 내용은 구위원과 송위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북한의 주석, 총비서가 누가 되든지 우리는 관심없다, 우리 관심은 북한이 책임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고 북한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유와 인권도 보장해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러한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우 위원 : 가능성면에서 주석문제와 총비서문제가 있고, 그 주석도 김정일이 맡느냐, 안맡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맡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이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초청은 없겠지만 정당·사회단체, 개별적인 인사에게 초청장을 보낼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당 총비서에 취임할 때에는 48년 남북연석회의 방식까지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경수로, 쌀문제가 있고 이러한 흐름에 배치되지 않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취할 입장은 최위원, 송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정당·사회단체, 개별적 인사와 여당에 대해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막을 경우 그 자체가 부풀어져서 쌀문제 등 오늘날의 흐름에 역행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개별적인 사람들이 제3

국을 통해서 들어간다는지 할 때는 막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통일원에서는 대북접촉 승인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만일 총비서문제를 계기로 해서 48년 연석회의 형식까지 꾸민다고 한다면 그때는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저의를 크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정당·사회단체를 포함해서 개별적 인사의 초청이 문제인데, 그 경우에도 대표단이라든지, 가령 국회는 정부차원처럼 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보고 다만 여당이 초청대상에 들어갔을 때는 여당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등장이후의 문제는 지금이나 공식등장이후나 같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정홍진 위원장 : 대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방향이 사무국에서 정리하기 쉬운 정도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덕송 위원 : 이러한 모임일수록 난상토론이 필요합니다. 송위원님께서 이중 플레이를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정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전술은 그때그때 바뀌더라도 대북기본전략을 세워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이 이중 플레이 얘기를 한 것은 전술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보자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사에 달린 문제인데 북한에서 정당·사회단체 대표격으로 초청을 하든 또는 개별적 인사앞으로 초청장을 보내든 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 정주영 회장, 문선명씨 등 돈을 벌자는 욕심으로, 포교를 해



보자는 욕심으로 영웅심리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갔다오기만 하면 공식·비 공식적으로 하는 소리가 북한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약’을 먹고 읍니다. 그리고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북한이 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들에 대해서 극진한 대접과 호의를 베풀어서 선전선동을 가미해서 ‘약’을 먹여서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별적 초대 내지 정당·사회단체 대표 등이 임의성을 띠고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수사적인 의미에서 국회회담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 조문파동이 벌어졌으므로 국회차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어 본다라는 수사 정도로 북한에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상회담 관계나 남북기본합의서로 북한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경협활성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일원측에서 적절한 시기를 봐서 제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정상회담문제까지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우리의 정치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화배경 내지 대북유화책 배경론으로 대충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만만히 남북대화에 응해 오고 정상회담에 응해 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대남전략에 써먹을 것이고, 그리고 양쪽에 역점을 두면 두었지 남한에 대해서 역점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시하면서도 왜 우리측에서 주도를 해 보려고 하느냐. 7.4 공동성명때부터 보면 대체적으로 깨기는 북한이 깨지만 뭔가 성사가 되어서 주도를 해온 것은 우리측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성과였지만 85년도에 고향방문단의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전술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남한에 응해 오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축적을 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나 국민들로부터도 북한이 난제를 피부어 대지만 남한은 항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을 하거나 발언을 한다 라는 인식도 심어주고 또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서 남한까지 전국토에 걸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하자는 전략전술

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기간 남한과는 냉각기간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뭔가 축적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적의 방향을, 김정일이 등장한다면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남북기본합의서쪽으로 돌리자는 방향에서 김정일 등장을 계기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플레이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여러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 김정일 등장시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시간이 만약 주어지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사무국에 제시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토론을 마감하겠습니다.

기획부장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제17차 회의

### < 목 차 >

#### 1. 일반사항

#### 2. 회 의 록

- \* 주제 : ① 제2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취할 바  
람직한 입장
- ② 대북쌀지원과 관련한 홍보대책
- ③ 8.15광복 50주년을 전후한 종교단체들  
의 남북공동행사 추진문제에 대한 바  
람직한 대응방향
- ④ 북측이 유엔군사령부 불인정 내지 정  
전협정 당사자 지위 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향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7. 11(화) 16:00~18:5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 다. 주 제 : ① 제2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취할 바람직한 입장  
② 대북 쌀지원과 관련한 홍보대책(방향과 방법)  
③ 8.15광복 50주년을 전후한 종교단체들의 남북공동행사 추진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  
④ 북측이 유엔군사령부 불인정 내지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 포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5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최문현, 곽희정, 송응섭, 차영구, 이영호, 김기환, 신봉식, 유득환, 조덕송, 이경숙,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홍보협력관,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비상임자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은 4가지입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쌀문제, 종교단체의 8.15 행사, 정전협정문제입니다. 특히 2차 북경접촉에서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정서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토의안건에 대한 내용은 각 위원들께서 의견을 정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쌀지원 문제와 홍보 대책을 하나로 묶고, 8.15행사 대처문제,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 대처문제 순서로 말씀해 주시고, 쌀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으면 연구하신 분야만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쌀문제가 경제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분야의 자문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정치, 군사, 사회문화분야 위원순서로 말씀을 하되 순서에 관계 없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중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신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봉식 위원 : 사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몇 %가 진정으로 이번과 같은 쌀지원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정서는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무상으로 주느냐, 또 군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쌀지원을 하는 것이 잘했다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의 심정이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고 북경접촉 대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행사는 북한에서 한두개만 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홍보할 때 있는 그대로를 생생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득환 위원 : 우선 1차 쌀지원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혼란 등에 대해서 생각

해 보면 첫째는 우리가 쌀협상을 할 때 일본의 쌀제공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하게 먼저 하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두번째는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절차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심지어는 국민들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정부내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난 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쌀지원이 너무 감상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는 북한에 변화가 올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는 홍보가 안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경수로, 쌀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남북문제를 중요시할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부족한 서민층에서는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회담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분명하게 당국자간 협의나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계속 지원하면 우리의 경제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 협상때에는 유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협상을 통해서 다른 접근을 하려는 것 보다는 쌀지원의 핵심이 무엇이나에만 모든 협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그것을 계기로 정상회담 추진 등 다른 것을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홍보대책에 있어서는 홍보의 대상이 50대 이후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하고 특히 북한에 살다 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홍보대상이 30대부터 40대까지입니다. 그들은 50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홍보는 각별히 부분별로, 기술적으로 해야만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지, 그렇지 않고 패키지(Package)로 똑같은 식의 홍보를 가지고서는 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덕송 위원 : 언론계에 전달되는 반응들은 첫째 너무 서둘렀다, 두번째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기관이 아닌 부처가 대표가 되어서 접촉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통일원은 무엇하는 기관이나 하는 회의론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2차 회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로서는 잘했건 못했건 북한과의 약속에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북한처럼 위약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향과 방법은 심층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1차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초조감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광범위하게 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것이 쟁문제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쾌하게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여론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개방적인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종교행사에 관해서는 이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잡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유엔사를 불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 한·미의 입장은 절대로 이것을 거부하고, 정전위가 실질적인 사멸을 한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구종서 위원 : 북한에 대한 모든 제공행위는 기본원칙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원칙은 평화통일과 조기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제공이 평화통일과 조기통일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을 계기로 우리측에서 대화를 구걸하거나 더구나 정상회담을 해 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체면,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의 쌀협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불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인공기계양 사건과 관련해서 선장에게 사전에 지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선장은 목숨을 걸고 인공기계양을 거부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배짱을 부릴 수 있게끔 죽더라도 항거하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으면 합니다.



지난번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합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가. 차기회담에서 발표를 안하기로 하는 합의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발표를 안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전제위에서 합의가 되면 진실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행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교단체의 행사를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행사가 이념적인 것에 걸리지만 전제조건을 걸 것도 없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오고자 하는 북한 사람들은 다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받는 것은 개방사회의 강점이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만 모이는 판문점은 가능한 한 피하고 평양이나 서울 등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 문제는 쌍방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라고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남북대결은 휴전선을 주축으로 한 힘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계없이 전 전선을 판문점경비까지도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맡는 것까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케네디가 후르시초프와 맞대결할 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고 한 말처럼 해야만 전쟁이 안나고 무력충돌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도 끌려다니고 약세를 보이고 군사적으로 약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발표자가 말하기를 전반적으로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60%정도 약세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비는 북한의 2-3배 쓰는데 군사적으로 너무 기죽는 태도를 북한에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유엔사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경숙 위원 : 쌀문제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주선한 우리측 대표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라는데 의아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왜 KOTRA가 나서는가, 사업상 교섭을 한다면 KOTRA가 나서지만 무상으로 한다

면 남북관계의 선례에 의해서 당국이 하든지 아니면 적십자사가 나섰어야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섭측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남북관계 전례를 참고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분명히 붙이면서 천만명을 평양부터 개성까지 동원하면서 선전까지는 못했더라도 백지포대에다가 그냥 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꼭 했어야 하는가. 주면서 구걸하고 제발 받아주십사 애걸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기 게양사건도 대한민국에서 15만톤이면 금액으로 따지나 정성으로 따지나 적은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인 자세를 감수하면서 국기를 내려야 했나,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나. 상하의 지시체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랬지만 회항해서 돌아왔다면 국민들의 자존심은 그렇게 짓밟히는 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받을 만큼 급박한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일본에서 받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일본에 길을 터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애걸복걸해서 갖다주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때는 안받는다면 안주는 것이고, 받으려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우리가 당당했으면 합니다.

회의의 비공개 문체도 반드시 쌀지원을 하면서 무슨 비밀이 많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동포애적 차원에서 주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구걸하면서 남북대화를 하자고 해봐야 성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방은 더욱 강하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면에서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전하지만 태도만은 분명히 주고 받는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쪽으로 홍보가 된다면 국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느껴집니다.

종교단체의 행사는 친북적인 성향,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92년 아시아여성세미나에서도 북한에서는 재야여성들만 초청하는 것으로 했지만 통일원에서 조정을 해서 일반 여성대표들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의도했던 것은 무산되고 전반적으로 한국이 의도했던 대로 결말이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사문제는 정부의 원칙과 방향이 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현 정전협정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 우 위원 : 쌀문제는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외한 발표 자체가 오후 늦게 했다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국기문제는 북한에서도 내국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협상에 있어서 국기문제는 나중에 대처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본래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점에 있어서 하나 생각할 것이 84년 북한이 우리측에 수재물자를 지원할 때 배에다가 인공기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를 올리나 안올리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배의 제일 높은 굴뚝에 인공기를 그렸기 때문에 달고 안달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기계양문제에 있어서 최종단계에서는 내국적인 개념이면 우리 배들이 달고 다니는 대로 그대로 주장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만톤을 주는데 있어서 날짜를 그렇게 촉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기간에 15만톤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유있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고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고 국민들로부터는 원성을 듣는 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회담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 2차에서는 다른 것이 토의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2차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도적측면을 중점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국민의 비판이 줄어들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언론을 이용해서라

도 국민들의 불평을 살려놓아야 2차회담에서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종교단체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은 절대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평양일 때는 범위확대문제를 가미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엔사문제는 힘의 논리인데, 문제는 평화협정을 북한이 남한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평화협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본합의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간에 무엇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 해서 평화협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국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16개국 참전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조라는 용어를 쓰든지 해서 결의를 해서 미국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호 위원 : 쌀문제는 우리가 너무 서둘렀고, 미숙하게 합의했으며 이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는 북한은 당당하게 받고 주는 남한은 찢찢매고 끌려가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기문제, 속도문제까지도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로 했고 국기문제도 그렇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삼풍백화점 부실처럼 쌀문제도 부실하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가 있는 통일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홍보문제는 이미 옆질러진 문제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가다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문제로 해서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표기문제도 수해물자를 받을 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것을 받았는데, 이러한 여론을 다시 만회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협상때는 이러한 여론을 인식해서 통일원의 전문가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인 접촉문제는 장소는 적절치 못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러한 것만 피하

면 좋겠고, 그러나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인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전위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기본합의서체제가 원만히 가동되어서 평화체제가 공고화되면 바꾼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입장이 정립된 것으로 믿었는데, 불행하게도 남북간에 기본합의서체제가 전혀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정전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의 대응은 기본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체제가 가동되도록 북한을 이끌어내야 되고 미국이 북한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미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미국도 북한에게 기본합의서체제부터 가동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위태세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가지고서는 정전체제를 바꾸기는 아직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방력의 강화가 동시에 병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자주국방에 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정전체제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방위체제 강화와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가동이 병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평화보장에 대한 확신이 서야만 정전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정한 토대위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영구 위원 : 쌀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추진과정상에 문제점입니다. 과연 추진과정이 정부내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상의 문제부터 분명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추진시기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와 연결되어서, 이유가 어쨌든간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세번째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선박이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선장이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갔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상에서 실수, 응급대처를 하지 못했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번째는 협상의 조건에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군량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섯번째는 일본과의 연계를 가지고 일본을 앞서려 했다는 이유를 댔는데, 그 이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섯번째로는 북한의 명분과 체면차려주기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현재 정부의 여러가지 입장이 북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남한의 명분은 희생해도 괜찮을 만큼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체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체면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더 중요한데 왜 상대방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여섯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남북대화로의 전환계기가 확실히 보장되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홍보문제는 아무리해도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설명을 해도 효과가 없고 지금부터 하는 협상에서는 정신을 차려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고 원칙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홍보가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내놓은 외교부 비망록을 읽어보았는데, 이 문제는 매우 다양한 북한의 개혁구상이 한꺼번에 한덩어리로 묶여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미·북관계 정상화, 미·북 장성급접촉, 회담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정전협정을 없애고 미·북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UNC를 해체시키는 것도 있고,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도 만들겠다는 것도 있는 등 이 속에 여러가지가 포도알처럼 묶여 있는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대처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대처가 있고 하나 하나에 대한 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할 때의 기본원칙은 우리는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은 나와라 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그 원칙을 지키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논리개발과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잡한 것이 미국과 우리가 어떤 이슈는 같고 어떤 이슈는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 앞서서 한·미가 조정해

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고수만 하기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전협정 중에 55-60%가 무효적인 성격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53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어 불가피하게 협정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이미 북한이 취한 모든 조치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 버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고집했을 때 효과면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세번째는 그동안 미·북간에 핵을 둘러싼 협상과정을 보면 미국이 북한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게 평화협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미·북간에 평화협정적인 성격의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무엇이나.

네번째로 미·북관계가 칼라룸푸르회담 이후에 정상화 방향으로 가거나 진전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미·북관계가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접촉이 잦아질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나. 특히 우리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UNC해체는 일단 반대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말만 반드시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위를 고수한다고 했을 때 고수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6.29 외교부 비망록에는 작년 4.30 외교부 비망록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돌아와 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래서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언급이 대화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문제는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노선, 정전협정을 고수한다는 하나로만 하기에는 많은 기

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련부처가 상당히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응섭 위원 : 우리가 쌀을 지원한 것이 15만톤 1,854억원, 북한에서 받은 것이 7,200톤인데 이렇게 많은 쌀을 주면서 주는 쪽은 저자세로 끌려가고 받는 쪽은 당당하게 받고, 인도적 동포애를 발휘하고서도 국민들은 보람을 못느끼고 자존심만 상한 모습이 되었고 국민들은 망신스러워 합니다. 1차 접촉때도 남북교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조건을 달지 않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성사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자세의 합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일본 쌀제공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외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을까. 미국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고 외교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사시킨다는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상이 많을 것입니다. 핵, 경수로, 기본합의서 이행 등 많은 협상이 있을텐데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훌륭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끌어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못된 버릇만 가르치고 왔습니다. 북한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가지라도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2차회담이 어떠한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관례를 살리고 우리가 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하면 홍보도 필요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면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이번에 북경에 가게 된다면 단 한가지의 못된 버릇이라도 고쳐놓자,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외교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한가지라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교단체행사는 통일전선전술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사도 아니라면 교류를 가급적 많이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유엔군사령부 불인정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전위 유엔측 대표들을 북한에서 무시하고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정전위에 나왔다는 자체는 유엔군사령부를 불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포기도 남한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일성도 남북간에 평화체제를 해야 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급회담 때 북한대표 김영철, 김광진과 대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침략자의 근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고 평화협정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이므로 미국과 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의 남침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이지 미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교전도 남북한 군대가 했고 6.25때 미군은 38선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전 당사자도 남북한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해서 남한을 돕기 위해 16개국을 참전시키면서 유엔군사령부를 구성, 지휘통일을 이루게 됨에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시 남한과 16개국을 대표해서 유엔군사령관이 서명을 했고 북한과 중국은 지휘통일을 못해서 각기 서명을 했다. 또한 30여년동안 정전협정을 준수해 온 자체도 남북이다. 현재 휴전선 전체를 남북한 군대가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억제를 지켜나가는 것도 남북한 당국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실질적인 법적 교전당사자이며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이다. 북한측이 '유엔군 = 미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을 포함한 참전 16개국을 대표한 사령관이 지 미국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귀측의 주석도 3차례에 걸쳐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측대표는 남한이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여러가지가 얽히고 설킨서 발을 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당사자가 남북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정 위원 : 쌀문제는 대체로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이 흔들리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듯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새겨지고 미국·일본도 우리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간의 대만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대미·대일 로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라도 미국·일본,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계속 봉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북경회담 때에는 조건을 걸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든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해서 국면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부내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한다든가, 이승만의 북진통일, 포로석방이라든가, 박대통령의 핵개발 등과 같은 주도권을 쥌 수 있는 것을 만들든지 대미·대일 로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쪽으로 끌어오든지 해야 북한문제가 다루어지지, 북한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8.15 종교행사문제는 정치적인 것은 용납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순수한 본래의 목적과 범질서를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는 다각적인 교류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군사령부문제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의해서 유지해 오는 것인데, 유엔안보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문헌 위원 : 쌀 15만톤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원칙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회담에서 주의할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쌀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일, 기본원칙을 지키는 일, 국가의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되고 경솔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체계상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자와 사람이 남북을 왕래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쌀문제는 명백히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제6조에 따라서 통일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체계상으로는 업무처리의 체계가 명백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경 2차회담에서도 법을 어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법을 어기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두고두고 정부정책의 정통성에 손상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북조치를 취할 때는 국내적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보고도 교류절차법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된 다음에 보고를 하고 야당 중진에게도 공개되기 전에 통보해 주는 등 내부적으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북조치사항으로서는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국대 당국간의 협상이라는 입장을 관철해 주었으면 합니다. 관철되기 어려워서 쌀을 제공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합의서 제7조에 보면 남북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합의되어 있는데 쌀문제도 긴밀한 협의를 필요한 사항인데 이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조에도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간에 당연히 협의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측 대표 선정도 정부부처 차관이 북한의 고문과 대좌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저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원 차관이 대표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확고한 당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담은 비공개로 해도 좋지만 합의사항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정을 고려해서 다른 것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남한 동포들의 쌀 얼마가 언제 북한에 도착했다는 것 하나만은 북한에서 공개되도록 합의문에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제공, 무상제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낸 쌀이 북한동포들에게 주기 위해서 북한에 도착했다는 것만은 합의서에 넣고 북한이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주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라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제공, 무상제공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인수증은 매번 반드시 받고, 인수증은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를 합의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수재물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직접 트럭에 싣고 서울에 와서 수재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계만 해주면 있는 그대로 생방송, 신문에 그대로 공개할테니까 그것을 보면 더 확실하지 않느냐 해서 설득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 북한동포들에게 나누어줄 필요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이 쌀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제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쌀원조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전부 알고, 언론에 맡겨서 언론의 기능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할 일은 홍보가 따로 없고 우리가 쌀을 지원하는 기본방침, 대북협상진행 상황, 합의내용, 쌀 복송 결과 등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대국민 보고서 형식으로 짚어서 국회와 언론기관에 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행사는 많은 전례와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재야단체의 판문점 행사는 불허조치하고 서울·평양을 왕래하는 순수한 활동인 법회, 예배, 세미나 등의 행사는 100%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실무간사로 있을 때 100% 허가를 다 했는데 99%가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가해도 북한은 남북왕래행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남북교류협력법에 입각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북한이 UNC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75년 유엔에서 북측 결의사항이 통과된 후부터 UNC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 당사자의 지위를 포기하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유지되건 남북간의 긴장, 대결, 휴전선의 대치상황 등 현재의 실제의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휴전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남북간에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느냐 하는

것인데, 힘의 대결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불법이라는,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의도가 미국의 『두개 한국』 정책, 즉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미국의 『두개 한국』 정책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미국의 『두개 한국』 정책이 현재 북한의 체제안보상 필요한 것입니다. 『두개 한국』 정책을 기정사실화해 나가려고 하니까 북한의 카드라는 것은 남북간의 문제해결 보다도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결당사자는 남한의 실질적인 주인인 미국과 북한이다 하는 구도로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분단고착화 정책이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통성을 오히려 확고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평화문제에 관한 한은 북한의 말장난에 대해서 한·미공조에 의해서 순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호 위원 : 쌀문제는 전문기관인 통일원이 어느 정도 소외되면서 진행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홍보정책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너무 서둘렀고 시기적으로 지자제와 관계된 시기였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고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도 안 좋았습니다. 특히 수입해서라도 쌀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수매가격을 1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을 볼 때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쌀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동포애로 하는 것이니까 적십자사를 창구로 하겠다. 좋은 일을 하고 다른 뜻도 없는데 비밀로 하다가 보니까 국민의 오해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 국회의 동의를 얻든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또 그렇게 시행해 주는 것이 대책이고 홍보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막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일이고 판문점이 아닌 상황이라면 허가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격요건을 따지고 분명히 허가조건을 따져놓고

어떤 단체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허락했다는 것을 공고했으면 합니다. 사후의 접촉결과는 공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NC문제는 미국은 여소야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것이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도 지구상에서 하나 남은 평양에 성조기를 꼽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정권적인 차원에서 한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일본도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관계도 동서냉전시대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우리의 군사력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잘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꾸준하게 국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안될 것 같으면 우리도 핵개발한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한바탕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힘으로써 과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근본적으로 '쌀회담 = 인도주의'라는 브르조아 인테리들의 잘못된 생각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쌀문제가 인도적 문제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쌀은 투쟁해서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와 회담하는 것을 인도주의적인 회담이라고 언제 규정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인도적인 회담이 아니냐. 쌀문제는 김일성정권대 북한주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산정권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남한국민들과 북한주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주민대 우리 정부와의 관계, 반민족적 식민지 반동정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어 엮는 것이 쌀문제입니다. 전략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까?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과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쌀지원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쌀문제는 한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도 백만톤 이상이 모자라고 계속해서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주지 않아도 쌀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 일본이 우리의 어깨 너머로 쌀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가장 정치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2차회담은 쌀을 안주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쌀을 사서 주겠다는 것을 실천할 것입니까? 쌀은 주지 않아야 합니다. 쌀을 주지 않으려면 이번 회담에서는 쌀을 주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쌀을 준다면 알아야 주니까 통계수자를 내라. 북한동포가 우리 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1차회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놓쳐 버렸는데 2차에서는 어떻게 하자든가, 또 당국간에 회담으로 정식으로 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고문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 북경에서 하느냐 판문점으로 나가자 하는 안을 내놓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번 회담의 열쇠는 무엇을 주겠다는 것으로 나갈 때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솟구치는 불만을 무마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접촉이라고 생각한다면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접촉입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재경원 차관이 나가서는 안되고 '통일꾼'이 나가야 됩니다. 더구나 통일원장관이 2차회담에서 정치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 2차회담이 1차회담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쌀값이 올라가고 국내정치문제화됩니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2차회담에 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쌀은 줄 생각을 가지느냐 안줄 생각을 가지고 나가느냐를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비공개회의니까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비공개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복안을 내놓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회담에서 일어난 일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비공개회담이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인도주의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밝힐 수 없다, 심지어 사죄문조차도 밝힐 수 없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킵니까?

따라서 이번 회담은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담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안됐다는가 해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비공개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제는 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료, 농약, 종자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폭넓은 대화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행사는 북한에서 응하겠다는 것은 KNCC가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해주면 범민족대회도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하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안하겠다고 하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종교인들을 만나서 왜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하느냐 평양이나 서울을 왕래하자 했더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허용해 주면서 가능하면 평양·서울을 왕래해라 하는 식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8.15 행사문제에 있어서는 범민족대회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백한 태도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종교계에서 보내고자 하는 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본다면 쌀문제는 앞으로 교역차원(Commercial Base)으로 장사로 하면 어떤가. 정부가 할 바에는 1차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장사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엔사문제는 한·미공조체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미국으로 하여금 응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휴전선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한 휴전선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서 막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통일원장관계서 2차회담에서는 여타 문제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당국간의 회담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인도적인 접촉이니까 재경원 차관이 가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 쌀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차회담 합의는 약속대로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둘째는 2차회담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쌀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당국간 대화로 하자면서 대화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것이 국내정치적으로 좋고 그렇게 해야 북한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온다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홍보문제는 쌀지원도 인도적인 목적을 말했지만 여러가지 목적이 얽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제약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진지한 설명서를 내는 것이 홍보라고 봅니다.

넷째, 앞으로 회담을 하고 그 내용을 공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체제는 골탕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표를 하지 않는 체제지만 우리 체제라는 것은 협상의 진전 중에는 공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과는 공표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전협정문제에 대해서는 기본합의서로 다시 돌아오라. 그것부터 해야 하는 것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8.15 종교행사에 대해서도 2차 쌀회담에 가서 제가 제의한 입장을 취하고 오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전이 된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도 '판문점은 안된다'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정치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의 입장을 전부 관철 시켰는데 우리는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북한 때문에 전부 양보를 해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시다. 쌀을 주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시다만 국민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

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씀들이었는데, 이번 2차접촉에서는 협의를 하지 말고 이 문제는 기본합의서의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자. 국내여론상 더이상 논의하기 힘들다고 하고 돌아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통일원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것을 자문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었기 보고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 : 쌀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얻어맞고 모든 모임에서 특히 통일원장관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2차회담에서는 1차회담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돌아오지 않겠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덜 걱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8.15 종교행사문제를 집어넣은 것은 금년 8.15가 광복 5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정부도 대처하는데 과거보다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더구나 경수로, 쌀 지원이라는 환경까지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종교단체가 주가 되지만 사회단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룹이 있고 반정부적인 입장 또 친북적인 경향에서 하겠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허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중간층입니다. 과거에는 운동권, 재야권에 속한 것이 분명한 종교단체, 재야단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나오는 중간그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그룹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 제기의 취지입니다. 이 중간그룹은 색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을 때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제소하겠다고 공갈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동조하겠다고 하고 두가지 색깔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숙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지 참고로 할까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전체제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기도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전협정

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어 드린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의 지위를 포기해 버리면 정전협정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5년도 비망록에는 유엔군사령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생겨날 때 묘하게 생겨나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안하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합의서를 얘기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려면 대한민국 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허수아비와는 협정이행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본합의서를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북한측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유엔군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미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유엔군사령관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미군이니까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사 북한이 그렇게 보채더라도 미국만 우리의 입장을 지키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체제가 무실화되면서 북한이 새로운 미국과 북한간의 장성급접촉의 제도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휴전선 관리를 제도화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군사령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령관으로서 군사분계선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헬기사건때 허바드 미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장성과 북한장성이 한반도 군사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무성에서도 한국의 복안이 있느냐, 새로운 복안을 한국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조야에서는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왜 안되

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연락사무소가 생기고 미·북수교까지 되면 평화협정을 그때가서는 무엇으로 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과의 공조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미협조를 잘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미협조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문제는 안호상 박사 불법입북에 대해서 여론은 허용해 주어서 불법입북이 안되도록 하지 왜 허용을 해주지 않아서 불법입북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교단체는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간다고 해서 정부가 허용을 했는데, 가서 순수한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지 않아서 불법으로 간 것 하고 허용해서 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도 모르고 허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 건전한 사람들을 대폭 가미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 :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요하면 불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허용한 건전한 단체라는 것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안 보낼 것입니다.

기획부장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3. 제18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가. 토론

- \* 주제 : 제3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취할 바람직한 입장

나. 귀순인사 초청 설명회

- \* 홍금수(중국 심양동북대학 유학중 '94. 9 귀순)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7. 25(화) 15:00~18:4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① 제3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취할 바람직한 입장  
② 귀순인사 초청 설명회  
\* 홍금수 (중국 심양동북대학 유학중 '94. 9 귀순)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3명) : 정홍진, 강인덕,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이영호,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조덕송, 김동환,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 가. 주제토론

기획부장 : 오늘의 주제는 8.10 제3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입장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국장 : 지난번 모임에서 제2차 회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8.10부터 3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회담과 관련되어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회담은 1차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북경에서 7.15~19까지 4박5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측은 1차 대북 쌀제공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의 시정과 우성호 송환, 남북경협문제 등의 협의를 제의했고, 이에 대해서 북한측은 쌀 추가제공문제의 선결적 협의를 주장했습니다.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차회담은 8.10부터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원래 우리측은 회담장소를 한반도내에 끌어들여 오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북경으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북경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쌀 추가제공문제입니다.

북한은 1차분 15만톤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쌀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표명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측은 1차분 15만톤의 무조건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악화된 현실을 설명하고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우선 있어야 추가제공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우성호 송환은 전제조건차원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비방증상 중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동포애에 입각한 대북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비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쌀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루아침에는 곤란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전금철은 쌀문제 해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어도 좋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남북경협문제에 대해서는 회의 초반 북한은 쌀 추가제공문제 협의만을 고집했으나 3일째 회의시 북한의 차석대표격으로 참석한 임태덕 대표와 우리측 추준석 대표간의 개별접촉을 통해 우리측 경협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측은 비료, 농약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만톤 제공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인도과정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악화된 감정을 전달하고 수송선박의 통신보장과 KOTRA 직원 승선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제공된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쌀분배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북측은 인공기 게양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거듭 해명하고 수송선박의 통신문제, KOTRA 직원 승선문제는 돌아가서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제공된 쌀이 제3국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민생용 소비에 국한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언명했습니다.

3차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8.10부터 개최기로 확정하고 장소는 북경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우리측은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개최토록 하며 의제는 쌀문제를 비롯한 경협문제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회담장소를 북경을 희망했으며 쌀문제와 함께 경협문제도 사안별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대책은 비록 금번 회담에서 쌍방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상대측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3차 회담에서도 합의된 쌀 15만톤중 잔여분의 안정적인 인도와 함께 추가제공 물량 확보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15만톤중 잔여분의 안정적인 인도의 뜻은 2차 회담을 하는 도중에 우성호 송환에 북한측이 성의를 표시한다든지 또는 15만톤 수송중에 야기된 문제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7.15 현재 쌀이 5만톤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분의 제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측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북측이 그것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회담에서는 북측이 그 부분에 염려를 해서 회담 전체에 임하는 자세를 신중하고 부드럽게 취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잔여분의 안정적인 인도와 함께 추가물량의 확보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 것은 그러한 뜻입니다.

북측에 대한 쌀 추가지원문제는 우리측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북측의 상응한 조치를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남북경제협력차원에서 여타의 경제문제와 함께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성호 송환문제 등 당면 현안문제 해결 노력도 적극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8.10로 예정되어 있는 3차 북경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혹시 2차 회담까지와 관련되어서 3차 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덕 위원 : 마지막 날 전금철이 회담장에 나오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다음 회담일자를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장 : 회담은 끝났고, 날짜문제를 북한은 평양에 돌아가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8.10 이전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아마 평양에서 날짜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으로 허비했습니다. 북한측에서 임태덕을 비롯한 김봉익 등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미리 평양에 들어갔다고 통보를 했고,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는데 평양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금철이 오지 않고 여타 대표 2인이 와서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회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금철이 회답에 불참한 것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 KOTRA 직원 승선문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국장 : 원래 배는 선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는 미묘해서 선장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있어서 북한측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처리를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장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북한측과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승선해야 되겠다. 쌀인도 문제는 삼천리총회사와 KOTRA간에 협의를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배에 승선하는 것도 KOTRA 직원이 승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KOTRA 직원 승선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 지난번 회의할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상대에게 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기합의한 15만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전략적 배경이 무엇이 있었기에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 : 쌀 15만톤을 준다는 문제가 일본이 쌀을 주는 것과 비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쌀을 주면서 조건붙일 것은 다 붙이는데 우리는 어찌서 쌀을 주면서 아무런 조건도 못붙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원산지, 투명정보장, 쌀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불만스러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쌀주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터졌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차에서는 추가제공문제를 북한이 들고 나올텐데, 추가제공문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그대로의 우리 형편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국민정서와 언론이 그렇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북한대표단이 우리의 신문, 잡지 등을 다 봤습니다. 잘 알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에 대해서 수궁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 입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예상도 못하고 조건도 못붙이고 추진해 놓고, 해 보니까 국민이 반대하더라 하는 것을 핑계로 댄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최문현 위원 : 남북간에 배가 왕래할 때는 누가 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배가 물건을 실고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인데 누가 탄다고 하는 것을 북한과 합의할 필요가 있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배에 누가 타고 간다는 것은 통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국민이 보기에는 아니꼬운 것입니다. KOTRA와 이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배에 어떠한 사람이 타고 간다는 것을 통보할 때 당국자도 타고 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날짜를 합의할 때 기술적으로 합의하면 되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빨리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또 기분 나쁩니다. 일반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 KOTRA 직원이 타는 것을 북한측과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북한이 인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은 선장만을 상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 가지고는 안되겠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송 위원 : 8.10까지 15만톤 전량이 북한에 인도됩니까?

국장 : 8.10까지 전량이 북한에 인도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는 8.10까지 였는데 인공기사건 때문에 1주일 이상 공백이 있었고 비때문에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체될 것입니다. 짐작컨대는 8월말까지는 완전히 인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달라진 것은 북한측이 나진·선봉항만 쌀을 하역하라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게 되고 나진·천진항만으로 고정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측이 서해안도 개방했습니다. 인천이나 군산에서 떠나는 것은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주, 남포, 홍남항구가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덕송 위원 : 대내정책,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나가야만, 북한에 대해서 정당한 압력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차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이라도 성사되는가 하는 기대감까지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회담에서는 하다못해 장소를 국내로 이동한다거나 남북 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킨다거나 하는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또 여론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신봉식 위원 : 1차, 2차회담을 했는데 물론 채널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등과는 전혀 채널이 다른 차원에서 쌀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차회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방향은 경제의 일반적인 교류협력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2차회담에서 그러한 개연성이라든가 가능성을 북한에서 어느정도 시사한 바가 있는지요? 3차회담에서 쌀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경공업협력문제, 임가공문제라든가 기타 농업지원문제 등을 하려면 전문적이고 규모가 있는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어떠한 얘기를 제기할만한, 또 북한에서 수용할만한 분위기가 보이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차상필 위원 :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생산성본부 회장과 점심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북한에게 쌀을 주기로 했는데 국민여론이 어떠한, 두번째는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번째는 북한이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더라. 두번째는 국제협력기금 범위내에서는 국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우리와 일본에 100만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15만톤을 주고 추가지원 5만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5만톤 가 지고는 새밭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경협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몇십만톤 쌀을 내놓겠다고 제시해야 경험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회담에서도 쌀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해야만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환 위원 : 우성호와 관련해서, 우성호 선원들이 돌아온다고 할 때 쌀을 주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호의적으로 보내왔다는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쌀회담에서 우성호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우성호문제는 당연히 와야 할 사람들을 북한이 안보내고 끌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을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데, 지금 분위기는 쌀을 주어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우성호 선원을 보내오는 것이다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성호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3차회담에서도 경제협력을 우리가 서두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경험을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넓혀가고 궁극적으로 쌍방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서두르는 것 보다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쌀을 주면서 얻어낸다고 하는 것이 크게 덕을 보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쌀문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인도적으로 남북간에 걸려 있는 가장 큰 것이 이산가족문제입니다. 해결이 될듯 하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이산가족문제입니다. 3차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무엇을 얻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도적으로 문제를 제의하고 북한에서 인도적으로 호응해 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회담에서 경험에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문제라도 제의를 해서 성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송한호 위원 : 2차회담의 쌀지원과 관련해서 우선적인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얼마나 주겠느냐, 언제 주겠느냐, 규모와 시기를 따진 모양인데, 우리들로서도 추가

적인 쌀지원이 있으려면 15만톤을 지원해 준데 대한 북한의 상응한 양보조치가 있어야 제2의 양보조치가 있지, 북한으로부터 상응한 조치가 없는데 양보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쌀지원을 하는 것도 인도적인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바꿔나가려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제2, 제3의 양보조치를 계속하게 되면 북한이 개방·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반대의 입장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선제양보는 일단 이루어진 것이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2의 양보는 북한으로부터 호응양보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차회담에서는 추가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전제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경협문제도 남북간에 합의된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든가 하는 나름대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성호 선원은 북한이 반드시 보내주어야 할 사항이지 보내준다고 해서 대남화해조치라든가 혹은 남북관계에서 과거보다는 다른 입장의 전환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언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성호 송환에 앞서서 언론기관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대남비방중상과 관련해서 통일원에서 외무통일위에 보고한 자료에도 비방중상이 줄어들고 완화되었다, 안기부장도 최근에 비방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방송을 보면 여전히 대남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수에 있어서 10% 줄었다, 20% 줄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방중상을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일시적인 상황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국민들에게는 쌀지원을 하니까 북한의 태도도 완화되고 변한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국민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잘못되게 인식을 시키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경제협력은 경공업에서 시범적인 케이스로 하는 것이고 보다 더 대규모적인

사업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모든 것이 합의된 제도적인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입장이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칙이 있고 제도적인 협의기구가 있는데 언급을 왜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과거정권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게 되면 정부가 일관성도 있고 제도적인 바탕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될터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회담에서 경협이 논의되었고 우리측에서 경제공동위 가동으로 가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북측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북한측은 경협문제에 관심은 표명을 했습니다. 경협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경제공동위 가동을 강조를 여러번 했지만 북한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어물어물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쌀문제도 제대로 협의가 안되는데 경제공동위, 경협문제가 잘 되겠느냐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세문제와 관련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금철이 7.10부터 북경에 나와서 북경에 줄서고 있는 기업인, 종교계 인사들을 면담을 했고 서로 쌀을 다투어서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혹독한 신문기자 얘기로는 “2차회담은 부업이고 본업은 면담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협문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도 아쉽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하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고 있다는 측면도 아울러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제공의 양과 관련되어서는 전금철이 남한이 추가로 제공할 쌀의 여분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수입해서라도 주겠다고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성호 선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이 납북되어 있는데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부담을 받고 있었는데 북경에서 북한과 만나는 기회에 우성호 송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북한도 우성호 송환은 쌀회담과 연계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성호 송환문제는 남북간의 긴장과 관련된 문제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다 라고 했고 우리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문제와 직접 결부시



켜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협문제에 매달리는 것같은 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협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측에 줄을 대고 있고 북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쌀회담이라는 모자를 벗기고 남북간의 경제회담으로 모자를 바꿔 쓰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는 하게 될 것입니다.

양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차처럼 주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방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비방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다만 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응하게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중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금철은 이러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방증상은 남한에서 더 많이 한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고위당국자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는데 남한에서는 고위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비방을 한다. 그러니까 비방문제를 말하기로 시작하면 자기들이 할 말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될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방증상을 하는 것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 사실 쌀지원 그 자체는 북한의 체제개방, 체제를 약화시키는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쌀지원을 했다는 자체보다는 주는 방법이 하도 졸렬하다가 보니까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 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빨리 달성시킬 수 있다면 추가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협으로 끌고 가려면 차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5만톤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15만톤 등 북한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

니까 우선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부대 정부,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공동위원회를 활용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경험을 하다보면 북한체제가 개방되고 약화될 테니까 경험에 대한 목적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쌀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도와주기도 했는데 경험을 하자고 해서 금년내에 몇 억불까지 하자, 북한의 총무역규모가 25억불이라면 남북한은 금년내에 5억불 또는, 10억불까지 하자는 목표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성호 송환은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방문제도 우리가 몇십년동안 들어왔는데 비방을 계속한다고 해서 욕이 우리 뺏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버릇이니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법이 줄절했던 것이 정부의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험있는 협상전문가가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인덕 위원 :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회담은 경제회담이다, 쌀회담이다 하는데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금철이 나왔다는 자체가 북한에서는 경제회담, 쌀회담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정치회담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 계획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답할 수 있고 남북대화를 주도하던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이러한 식으로 바뀌서 평화문제 등 어떤 문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회담으로 가자, 이 문제는 이산가족회담으로 가자고 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회담으로 바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문제도 전금철이 일찍 왔다는 것은 줄 선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계입니다. 홍정길 목사 외 4명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1만톤의 쌀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회담이 안됩니다. 경제협력문제도 제한을 풀어주면 자동적으로 늘 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조정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회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판문점으로 가져와야 되고, 경제 부처 대표는 안되고 통일원에서 ‘꾼’이 나가서 ‘꾼 대꾼’이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추가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대답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서 주어야 되는데 15만톤 이상 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쌀문제 때문에 날짜를 받아 가지고 오라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스타일의 남북대화에서는 북한에게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극히 실망적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고 꾀들이 나가서 종합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으로 바꾸고 움직여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깊은 얘기가 오고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깊은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 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3차회담의 목표는 쌀을 더 주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장소를 옮기는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만일 옮겨지면 우리 대표도 바꾸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인식시키는 기본자세부터 정립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덕송 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경접촉은 성격이 애매한 남북 접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는 15만톤 주겠다고 해서 쌀협상이 시작되어서 2차까지는 그대로 넘어갔고, 3차부터는 쌀을 빼고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3차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쌀회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동시에 경협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남북대화는 어떠한 성격이냐를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반도로 장소를 옮겨야 되고 남북문제에 관한 문제는 통일원외의 사람들이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수석대표는 통일원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일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을 명백히 정의를 내려서 3차회담에서 정의를 내린 원칙에 입각해서 결렬되건 더 주건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여론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개방체제에서 국민들이 염증을 낸다든지, 호응을 받지 못한다든지 국민들의 깊은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문제해결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서도 힘들 것입니다.

강인덕 위원 :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는 이 회담이 잘못하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회담은 대단히 오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쌀문제는 금년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고 내후년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쌀문제를 미끼로 던진다면 이 회담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력하게 정리된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 북한이 이 회담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미국, 일본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담이 오래간다는 전제하에, 설사 한두번 끊어져서 10일 가던 회담이 30일 가면 어떻습니까. 느긋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문점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판문점으로 옮겨와야 성격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회담을 정치회담, 군회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판문점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금철은 경제대표가 아니고 직책이 통일전선부 부부장이니까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상대로 하는 우리 대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남비방의 숫자가 줄었다 하는 것은 얘기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우선 회담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갈 수 있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회담으로 가야 됩니다. 쌀문제나 경협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문제 등도 시급한 문제니까 함께 검토하

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무엇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합의할 수 있는 대표가 선정되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송한호 위원 : 여러가지 지적하는 말이 많아서 비판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1차회담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2차회담에서는 많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원이나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우성호 송환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다. 알려진 것처럼 8명중에 3명이 죽었는데 이것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장선박이 아닌 어선에 대해서 발포해서 3명을 사살한 잔악한 행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송환 사실 자체에다가 무게를 두지 말고 시각을 달리해서 잔악행위에 대한 부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 송환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한데 몇개월을 붙들고 있다는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서 많이 규탄하는 내용의 글이 쓰여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화해조치, 양보조치처럼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흥진 위원장 : 이번 회담은 단추를 잘못 끼워서 2차회담에서는 제대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3차회담에서도 결국 우리의 입장은 곤란합니다. 북한은 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줄 형편이 안되니까 3차회담에서는 우리대표의 입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담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담의 형태를 경제공동위로 끌어 오고 다음부터 쌀문제는 경제공동위에서 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문제를 경제공동위로 옮기는 것이 추가지원의 어려움을 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두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것만을 가지고 북한에서 응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느냐. 또 우리가 말로는 인도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체제가 개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쌀도 더 줄 수 있다. 대신에 쌀만 하지 말고 금년에

쌍방간의 교역을 얼마로 하자, 그러기 위해 공동위도 가동하자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추를 잘못 끼운데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경협을 넓히자고 해야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경협을 북한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또 북한에게 하자고 하는 것은 국내에는 애걸복걸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받아가는 다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짱을 부려서 이 문제는 공식적인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경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제기하면 국내에는 경협에 매달리는 모양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 위원 : 그 문제는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쌀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로 성격을 지어왔습니다. 인도적인 문제라는 것은 전제가 재난입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양의 쌀이 가야 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협력문제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약, 비료 그리고 경협 문제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쌀문제도 그 중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본격 논의 체제로 옮겨보라고 설명하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정홍진 위원장 : 자꾸 선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깨져도 그만이라는 배짱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하자고 당당히 이야기해버리면 연연하는 것 같은 인상도 깨우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상필 위원 : 우리가 남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해봤자 도움될 것도 없지만 국민들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양보해가면서 지원할 것은 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정부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왔

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유득환 위원 :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도 우리가 주는 문제고 경협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주는 문제가 됩니다. 쌀도 주고 나서 경협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니까 당연히 주는 문제임에도 무엇을 얻어내려고 해서 실패작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기본입장이 손해를 보면서 할 것이냐, case by case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case by case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이번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북한이 쌀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쌀과 다른 문제를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니가 들어주는 것이고 기본적인 포지션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있는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북한이 경협에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놓는 것은 국민들에게 얘기했다가 밀천도 못건졌다고 인식될 것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협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표명한 것은 어디까지나 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고 두번째는 경협에 대한 기본입장이 없고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처럼 북측 수석대표가 경제는 잘 모르는 쪽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는 우리가 당면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협상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A포지션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고 B포지션으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동원해서 맞추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1차회담때 약속한 것은 우리가 인도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2차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과 연계된 경협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1차때 욕먹은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추가제공의 양을 약속하면 수송스케줄에 따라 공급될 것이냐 경협의 이행은 쌀수송과 연계는 되었지만 시차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속은 것이 한두번입니까. 얼마 하기로 해 놓고 쌀은

수송이 되고 경협을 불이행하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래서 2차분의 추가제공과 연계한 경협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우 위원 : 북경회담에서 북측은 쌀 이외의 문제에 관심이 적을 것이다 하는 유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경협은 구태여 남한 당국과 하지 않고 북경에서 줄서 있는 사람들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약속한 것이 어디까지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차분 15만톤은 주겠다, 추가제공은 줄 수 있다는 정도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쌀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도 현재의 판은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키되 약속이 어디까지나 하는 것을 매듭을 지어가면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꾸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역항구를 청진·나진에서 남포와 해주로 확대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판문점, 철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을 변형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판문점, 철원으로 보낸다 하는 것으로 유도해 가면서 변형을 하는 차원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8.10 3차회담이 8.12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일 전전날입니다. 금년에도 8.12와 관련해서 무엇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쌀문제와 가장 촌수가 가까운 것은 인도적인 이산가족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북경회담은 열되 쌀문제를 일단락시키고 판을 변형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산가족문제도 거론하고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놓고 8.12에 촉구든 제안이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쌀문제 만큼은 공백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한에서 다른 문제처럼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깔아놓고 변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 그래도 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판이 변형되지 않겠어요? 판을 바꾸면 줄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불가할 것입니다. 쌀을 줄 수 있



다고 이야기하고, 줄 수 있다고 해서 꼭 줘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인데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판이 바뀌고 다른 경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그때가서 쌀을 주면 되는 것이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을 바꾸는 것은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판을 바꾸고 나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쌀이 급하니까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쌀이 굉장히 우리에게서 좋은 쓰나풀입니다.

윤 우 위원 : 줄 수 있다는 것은 깔아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없이 줄 수 있다는 범위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우리는 1차로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 앞으로의 쌀은 거래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장 : 북한측은 최소한도 일본과 같은 양의 쌀을 주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30만톤이 약속되어 있고 추가로 20만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만톤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5만톤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35만톤은 더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본과 같은 양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측은 어렵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부터 15만톤을 다 받고 일본으로부터 쌀을 다 받은 다음에 배가 불러서 정책을 바꾸면 몰라도 아직은 판을 바꾸는데 동의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남북간에 정상적인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문점, 경제공동위, 경제회담 더 나아가서 남북간의 종합적인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꿈도 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그러한 얘기를 할 정도의 남북당국간의 정상적인 대화가 되려면 경제문제를 가지고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미국과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해서든지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는 것을 방지하면 어떠한 문제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 대한 헤리슨의 자료를 나누어 드린 이유가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전협정준수, 기본합의서 이행을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는 우리에게 평화보장체제에 대한 복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문제는 국제성을 띤 문제라고 해서 면피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평화문제는 그러한 면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당국간 접촉을 하려고 하는지 배짱이 있습니다. 집어치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집어칠 수가 없다는데 문제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북정책이 왔다갔다 하니까 국민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사실 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간의 접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다가도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 애증의 교차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동포애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갑자기 반공일변도의 국민정서로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것이 약화돼서 그렇게 비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접촉과정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겠지만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남한에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투자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것을 당국자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경협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북한측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경제협력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민간기업에서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무슨 경협이냐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쌀문제에서 판을 바꾸어서 경협문제로 돌리려면 목표치를 제시하든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북한측이 그 얘기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표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본격적인 남북회담을 하기 위한 체제로 대표들을 바꾼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경회담을 당국간 회담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당국간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북당국간의 회담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북당국간 대화로 나가겠다는 의지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담의 성격문제나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격을 바꾸고 싶고 장소도 판문점으로 옮기고 싶은데 북한이 좀처럼 호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회담에서 북한이 쌀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쌀제공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걸치면서 넘어가야지 뭔가를 걸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부분적으로 북한의 원하는 만큼 줄 수 없지만, 또는 북한이 원하는 쌀은 줄 수 없지만 곡물을 적정량을 주면서 제시하면, 북한에서는 기대치에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기대치에 해당하는 쌀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물문제는 외국의 규제를 상당히 받고 한국에 쌀 비축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국제기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쌀을 한 톨도 더이상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곡물문제를 일부라도 걸치려면 옥수수나 되었던 밀이 되었던 수입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해서 준다는 것은 내부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간부분에서 쌀을 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

것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선명회의 30만톤 등 여기저기서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도대체 쌀을 제공한다, 경수로를 제공한다고 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남북관계, 짧게는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에 남북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벌어질 것인가 하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바탕위에서 쌀을 준다든지 경수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을 받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받아먹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경험문제를 서로 '주고 받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런데는 관심없고 '그냥 받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당국간 대화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서 접목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끝까지 노력을 해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강인덕 위원 : 설명을 들으니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경 회담을 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이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까?

국장 : 남북당국간에 접촉과 대화가 없게 되겠죠.

송한호 위원 : 혹시 3차회담 때 고려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옥수수, 밀가루 등을 사서 주는 방법으로 종류와 양을 제시하는 식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무상이건 유상이건 우리는 경제공동위 가동 등 전제조건을 붙여야지, 북한이 쌀제공과 규모, 시기를 얘기하니까 쌀을 못주고 밀가루나 옥수수를 준다고 하게 되면 또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져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조금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식량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200만톤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주어서 몇개월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식량사정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의 요구조건에 끌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끊어졌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영영 열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가지지 말고 배짱있게 나가는 것이 보다더 북한으로 하여금 당국간의 대화에 끌려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차상필 위원 : 처음에는 쌀을 주는 자체는 괜찮지만 왜 이러한 식으로 주느냐고 하고 불만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들이 1차회담 이전에 논의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차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면서 잡곡을 돈받고 주는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정도로 수습이 된다면 지금 정부가 놓여있는 입장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윤 우 위원 : 우리가 군정위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북한과 계속 손을 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판을 바꾸는데 있어서 북한에서 불응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켜 주었을 때는 응해 오느냐 하는 것도 미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고 나서 성사가 안될 때 정부가 느껴야할 부담과 지금 단계에서 판을 바꾸도록 노력해서 일단락했을 때의 부담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시점이 지금 판을 바꾸어야지 계속 말려들어가다가는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오기도 어렵다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북한은 받아먹는데 이골이 나 있고 갈망하고 있는 처지인데 앞으로 우리의 요구에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다 충족을 시켜 주었을 때 응할 가능성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이 지금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필 위원 :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질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비용을 운운하는데 그 통일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일된 후인지, 지금부터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냉전시대에 소련에다가 30억불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위협, 긴장완화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주었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충분하게 줄만한 이

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볼 때는 소련에다가는 30억불을 지원해 주었는데 동포에게는 회담장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고,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서 북한에 오는 것이지 그것이 남쪽의 지원이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대북정책이 온건 입장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은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장 : 그렇지 않아도 북한 사람들이 당국자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남조선이 소련, 중국, 헝가리 등에 대해서는 인심을 쓰면서 왜 우리에게만 인색하냐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쌀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통일비용이냐, 평화유지비용이냐. 통일부총리는 평화유지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문현 위원 : 귀순자 홍금수씨 얘기를 듣고 좋은 점을 배웠습니다. 평양의 봉수교회, 장충성당이 북한주민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 아니고 재미교포들이 돈내고 예배보라고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사회라는 것이 아직 그러한 상태이고 상당기간 그렇게 기묘한 사회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돈만 내고 북한공산주의자의 파쇼정치를 강화해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량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쌀을 1백만톤을 주어도 내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자 회담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는 불변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 내부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로문제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안 거쳤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심의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쌀의 수급이 어떻게 국민들이 먹을 쌀이 얼마나 남아 있다, 얼마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를 심사숙고해서 북한에게 동포애적으로 쌀을 준다는 모양을 갖추는 것을 미국, 일본에게도 보여주어야지 미국과 일본이 엉뚱한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동포에게도 보여주어야 되는데 저는 쌀문제만은 절대로 북한동포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쌀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당의 억압정치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동포들이 가  
엎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동포들이 남한에서 쌀이 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받는 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나가면 장총성당이나 봉수교회가 북한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준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고 우리는 돈만 주고 북한동포들 몰래  
기도나 하고 오는 우스운 대북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덕송 위원 : 김동환 위원께서 제1차 회담이 열리기전에 이러한 논의가 있어  
서 충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임했어야 할터인데 이제와서 왈가왈부하니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국민들도 모르게 북경에  
서 물밑접촉이 성사가 되었고 그것이 어느정도 성사가 되니까 15만톤 운운하고  
동시에 우리 쌀이 없으면 외국에서 사서라도 주겠다는 최고통치권자의 언질을  
평양에 주어 버린 후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미래를 보면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지 역대 정권은  
정권의 임기안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너무 집착을 했었고 잘못된 점도 없지 않  
았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여유있는 입장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세워야지 1~2년  
사이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하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나. 귀순인사 초청 설명회

\* 홍금수 (중국 심양동북대학 유학중 '94. 9 귀순)

### 【강 연】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하려니까 긴장이 됩니다만 제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제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사망후에 김일성 추도모임에 갔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  
니라 북한은 달려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각국 주재대사관에서 추도모임을 했습

니다. 추도모임에는 상당수가 모였는데 조선족도 몇명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나이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우는 것을 봤지만 35세 미만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대는 북한의 개혁의 문이 빨리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에도 구세대와 지금세대와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작년에 북한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평양시는 잘사는데 죽을 먹는 집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예전처럼 김일성만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달러를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노동당에 입당하기 쉽습니다. 그전에는 당에 대한 열성, 충성심을 가지고 입당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 친척중에 군단 정치부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군단장은 행정적인 것을 관리하지만 정치부장은 입당 등 정치계열을 다스립니다. 요즘에는 비디오를 뇌물로 주면 입당보증서를 써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상당히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송 재일교포들이 예전에는 죽어서 살았지만 지금은 큰소리 치면서 삽니다. 과거에는 재일교포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들의 이름을 숨겼습니다. 자기가 출세하자면 검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새세대」, 「희망」, 「등대」 등의 잡지의 맨뒷장에 보면 캐나다, 일본에서 있는 누구를 찾는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달러상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회주의권 붕괴 전에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유통은 물물교환 형태였고, 소련의 루블화로 결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달러에 의해 유통되기 때문에 북한도 달러별이에 정신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외화상점이 생긴 것은 80년대인데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달러로 물건들을 사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북한주민들도 달러가 있으면 달러상점에 출입해서 외제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평양시의 경우는 결혼할 때도 혼수용품을 달러로 사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간부들의 의식상태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북송 재일교포들이 당간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당 지도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계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과 융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 달러를 내고 타는 택시가 고려호텔과 평양 제1백화점 앞에 있는데, 북송 제일교포들이 달러가 있으니가 택시를 채용해서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지금은 상당히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상태가 북한사회에서는 당성도 강해야 되지만 물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러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관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북한의 국제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학은 뒤 1~2년동안은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에는 중국 각 대학에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 때문에 학교에서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형식상 해주지만 이전처럼 고급스럽게는 못해줍니다. 대학 자체내에서도 상점을 운영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년층에서는 김일성은 아는데 김정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쌍방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에게 자금을 주었기 때문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자동차가 중국 통행시에는 달리는만큼 중국측에 달러를 지급합니다. '94년 이전에는 북한의 유학생 수가 매해 증가했었으나 94년도에는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북·중관계도 김일성과 모택동과의 관계 때문에 친선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부터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사람들은 중국사람들을 돈밖에 모른다고 욕합니다. 북한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는 아직도 조·중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놓고 중국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교육합니다.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가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북한과 대비해서 느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북한내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북한 세관에서는 'MADE IN KOREA'라는 상표가 발각되면 민족반역

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만 상표가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용인하다고 합니다.

북한에 식량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서민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약간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수대에술단도 중앙당에서 공급을 해 주었는데 중앙당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2경제위원회에 맡겼는데, 거기서 주는 수준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중앙당에서는 왕재산, 보천보음악단에만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답변】**

조덕송 위원 : 평양에 들어갔더니 평양은 비교적 잘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양 이외에 지방사정은 어떤지요?

홍금수 : 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밥 한끼 얻어먹는 것이 미안스럽습니다. 북한에는 통행이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도착한 날에 구역 안전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강도 아주머니가 평안남도의 친척에게 쌀을 구하러 여행증명서 없이 가다가 안전원에게 걸리면 “아저씨 평안남도에 있는 동생이 쌀을 주겠다고 해서 간다”고 하고 담배 한갑 정도를 주면 안전원들도 웬만해서는 눈을 감아 준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배급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1-15까지는 상순배급, 15-30까지 하순배급을 받는데 상순배급을 못 받고 한달씩 배급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추려니까 있는 쌀을 죽써 먹으면서 날짜를 맞추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쌀을 국가에서 안 주는 것은 아닌데 미달이 된답니다.

조덕송 위원 : 평양 사람들은 양곡을 제대로 배급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잡곡과 쌀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홍금수 :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쌀과 잡곡 비율이 8:2였는데 지금은 6: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잡곡도 빵, 강냉이쌀, 밀쌀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때는 떡을 해먹으라고 찹쌀도 줍니다.

차상필 위원 : 동구권이 붕괴된 후에 해외유학생들에 대해서 모두 소환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중국에는 북한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금수 : 중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구나 러시아에는 없고 쿠바에 유학생들이 조금 있고, 몽골에 축산업을 위해서 3명의 유학생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호를 개방한 나라에서는 모두 끌어들였습니다.

강인덕 위원 : 중국의 심양동북대에는 몇명이 있고, 전공은 무엇이었습니다가?

홍금수 : 유학생만 13명, 교원·연구생까지 합치면 20명정도 있습니다. 전공은 생물학, 전자공학, 금속학, 컴퓨터 등 과학기술계통의 전공만 유학을 보냅니다. 외국어를 위해서는 남경, 상해,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를 위주로 해서 많이 보냅니다.

강인덕 위원 : 고등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홍금수 :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군사훈련을 가는 학교가 있는데 저는 때가 맞지 않아서 못갔습니다.

강인덕 위원 : 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홍금수 : 군사훈련은 하지 않고 집단체조라고 10만명이 참가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련과정입니다. 평양시 모든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무조건 여기에 꼭 나가야 됩니다. 잘 나가는 데는 2년 나가고 못 나가는 데는 1년 나갑니다.

군사훈련을 받는 학교는 매년 지정됩니다. 고등중학교 4학년때만 찬스가 떨어지는데 저는 고등중학교 4학년때 우리 학교에 찬스가 떨어지지 않아서 저는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들어본 것을 말씀드리면 2주정도 가는데, 군인식으로 교육 받고 실탄사격은 3발 정도라고 합니다.

강인덕 위원 : 학교의 정규과목에 군사훈련은 전혀 없습니까?

홍금수 : 그런 것은 고등중학교때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없습니다. 집단체조훈련이 가장 심합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나왔습니다.

아침에 4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까지 학교에 가서 7시 30분에 군인 차를 타고 김일성경기장에 가서 9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2시까지 취침하고, 2시30분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훈련하고, 총화하고, 잘못된 때는 다시 벌칙을 받고 해서 집에 도착하면 거의 11시가 됩니다. 그것이 북한식으로 조직단련이었는데, 그 기간에 규율이 잡힙니다.

차상필 위원 : 동구가 무너진 뒤에 선거에 의해서 공산당이 재집권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령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정권이 붕괴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홍금수 : 30대는 중립적이고 20대부터 30대 초반은 생각이 트여 있습니다. 전세대는 이전에 경험했던 고집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간세대는 부모의 고집을 이어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세대는 부모들이 옛날 얘기를 하면 머리속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쉽사리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도 어떤 때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김일성 하면 이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주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음에 죄짓는 것같은 고정관념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의식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위층은 놔두더라도 밑의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희망을 볼 수 있는데 그 변화를 지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방송, 해외소식들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사람들의 의식을 고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북한의 고등학교, 대학에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위대한 사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듣고 있는 식인지요?

홍금수 : 고등중학교까지는 매주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를 무조건 암송해서 바쳐야 집에 가니까, 교원이 수업을 마친후에 학생들 가방을 모아 놓고는 암송을 잘하는 사람은 보내고 암송을 못하는 사람은 밤 12시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학기말 시험에서 성적이 좋아야 교원의 임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교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교원이 통제하는 것이 없었고 본인이 다 합니다. 대신 공부를 해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날 배운 것은 10시후에 토론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한개 학부면 거의 90명인데 90명이 앉아서 토론하는 시간에는 1반, 2반을 갈라서 1반에서 2반 몇번을 지적하면 그 번호가 나와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토론한 다음에 질문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골수에 삽입시킵니다.

거기에서도 의문점은 교수가 설명해 주는데, 너무 상상적인 철학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에다가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사상에 유혹되는 것입니다.

강인덕 위원 : 완전히 믿기는 믿는 것입니까?

홍금수 : 그렇게 마음 편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인덕 위원 :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홍금수 :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인덕 위원 : 현실적으로 동떨어졌는데도 믿습니까?

홍금수 : 북한이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인덕 위원 : 밖에 나와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홍금수 : 밖에 나와서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강인덕 위원 : 주체사상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것이 중국에 와서 허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홍금수 :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들이 설명하기를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다. 우리가 홍청망청

먹는데만 다 쓰면 통일을 할 수가 있느냐, 통일을 하려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교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따지고 들고 앓고 감수를 합니다.

송한호 위원 :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해서 김일성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생명체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홍금수 : 북한에 있을 때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신봉식 위원 :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슬로건과 김정일이 김일성을 승계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데서 논리적인 모순이라든가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지요?

홍금수 : 거기에 대해서 강연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주체사상을 가르칠 때는 사상이론 방법이 철학적으로 완벽한 것으로 봅니다. 김일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이다. 김일성은 16개 추종국과의 6.25전쟁에서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국가는 한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중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 김일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김일성의 이상화입니다.

두번째는 노동계급의 수령관 문제인데, 수령의 후계자는 반드시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김정일밖에 없다고 결론지어서 김정일을 이상화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먹고 잘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두세대에서는 실현이 되지 않고 몇대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주입시키면서 대를 이어 가면서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입을 시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 위원 : 북한의 군대가 총 몇명이며, 전차가 총 몇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요?

홍금수 : 제가 복무한 군대는 평양방어사령부 121사단 1대대 6중대였는데, 남한의 군대는 편지도 쓰고 연락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부대의 위치가 탄로 난다고 해서 부모나 친척에게 편지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알아서 편지를 보내면 군부대에서 편지를 검사합니다. 북한군인들은 1년에 하루이틀 정도 휴가 밖에 없습니다. 평양시 주변의 군부대는 시내에서 군수물자를 가져올 때 외출하는데, 그때 집에 잠깐 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물자 등의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덕 위원 :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가 북한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느꼈는지요?

홍금수 :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장성」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화면이 뜨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희한했습니다. 북한은 컴퓨터를 만들지 못합니다. IBM을 사용하는데 학교당 몇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늦게 뜨더라도 전반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강인덕 위원 :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홍금수 :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평양에서는 어느 대학을 마쳤고, 전공은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에서는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홍금수 : 평양기계공과대학이고, 기계제작, 도면설계 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조프레스기계과를 전공했습니다. 북한에서 단조프레스하면 냉강압연과 열강압연이 있는데, 열강압연을 뜨겁게 달구어서 해머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냉강은 프레스로 찍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제가 전공한 것은 냉강이었습니다.

강인덕 위원 : 북한에서도 냉감을 많이 사용하시지요?

홍금수 : 군수계통은 거의 다 씁니다. 왜냐하면 선반으로 제품을 깎으면 재료 낭비가 많기 때문에 형틀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수준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유득환 위원 : 김정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홍 선생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홍금수 : 김정일의 개인적인 생활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사회에서 김정일에 대한 개인적인 사향을 친구들간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학에도 보위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도 어설픈 것이라도 매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보위요원에게 엄중하다고 생각되어서 걸리면 신세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김정일 가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것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중에 외국어대학에 다녔는데 술자리에서 김정일이 키가 작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없어졌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정일을 만나본 적은 없고, 김정일 별장에 복무하던 사람이 저와 같은 학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책에서 본 김정일은 인자하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위대한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처럼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라는 등 보통말도 쓰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담이 있고 통이 크다고 합니다.

윤 우 위원 : 그 얘기와 관련해서 각급 간부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대한 말투가 고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홍금수 : 간부들이 밑의 사람들에게 힘 주면서 얘기합니다. 일을 잘못하면 상소리가 다 나옵니다. 당간부들 사이에도 계획을 못했다면 살벌합니다. 제2경제위원회 회의는 살벌하고 매년 위원장이 바뀝니다. 이때는 서로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직장장 이런 사람들은 짐승취급을 합니다.



강인덕 위원 : 유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사상성, 출신성분 중심인지 아니면 지식, 성실성이 중심입니까?

홍금수 : 지금도 사상성, 집안 배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본인 공부실력입니다. 제가 강습받을 때, 강습이 뭐냐 하면 철학, 어학,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데 이 세 과목의 성적이 높아야 유학을 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대상이 있는데 해외에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 보위부계통의 자녀들이 보류됩니다. 이들은 비밀누설이 상당히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밀이 누설되면 그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집안까지 싹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따져서 보냅니다.

차상필 위원 : 북한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 그들과 자주 어울리는지요?

홍금수 : 한번도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차상필 위원 : 그들이 한국에 와서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남한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경쟁의 체질이 아직 안되었는지 정부에서 1년동안은 여러가지 대우도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서 뛰어야 되는데, 그것이 체질화가 되지 않아서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홍금수 : 그것은 제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집에도 김일성이 TV 등을 다 공짜로 주었는데, 남한사회는 능력사회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수도 있습니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국가적인 대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한사람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려면 운전면허증,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를 구비하자면 저 자신도 1년정도 노력을 해도 따라갈지 미지수인데, 다른 사람들의 경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인덕 위원 :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한달에 얼마쯤 지원받았습니까?

홍금수 :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1500만원 주었는데 700만원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빌리는데 들어갔고 나머지는 남한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사용하라고 주었지만, 솔직히 그 돈가지고 풍족하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귀순한 사람들 중에서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은 물어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돈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곽희정 위원 : 한반도에서 남한이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든지, 또는 북한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미국이나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북한에서도 하지 않나 싶은데, 양쪽을 다 경험했으니까 양쪽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요?

홍금수 :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떨어지는 것이 전쟁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북한 군인들 속에서는 전쟁을 하자, 전쟁이 일어나면 공급기준량이 올라갑니다. 전투단위는 한끼에 200백, 고기, 술도 하루에 두병도 주는 등 기준량이 나오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한번 전쟁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북한도 남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국통일을 자주적, 민족적, 평화적으로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쟁 때 미국이 장비를 쓰는 것을 보고 걱정을 상당히 합니다. 북한의 무기는 재래식이 많지만, 정신상태는 남한군인들보다 월등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해보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강인덕 위원 :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게 증오심을 느끼고 있는지요?

홍금수 : 남한보다는 미국을 상당히 증옉습니다.

강인덕 위원 : 남한정부가 아니라 남한주민에 대한 증오심은 안 가지고 있는지...

홍금수 : 남한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남한의 소수 잘사는 사람들이 북한을 침공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6.25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소멸대상인 지주, 공장사장들이 남한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땅을 찾을 생각을 한다고 북한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고 잘살고 싶어하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덕송 위원 : 한국에 온지 1년이 지났는데, 극소수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친북한 세력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요?

홍금수 : 그들이 내세우는 것을 자세히 봤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주체사상은 내가 북한에서 받은 주체사상과는 다릅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지 주체사상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일선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듭니다. 정부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옳은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추동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보면 이름만 같은 것 같습니다.

차상필 위원 : 주체사상을 그대로 표현하면 범망에 걸리기 때문에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노동계 등 각계에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홍금수 : 북한같은 사회를 세우자고는 안할 것입니다. 북한사회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냐 하면 99%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한호 위원 : 총신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종교적인 바탕이 없는데도 가능합니까?

홍금수 :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유학때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북한에서는 저희

집에서 백미터만 가면 장충교회가 있는데, 담장이 높기 때문에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교회하면 미신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감동이 닿았고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마음이 섬찟해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재미교포들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는데 중국교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 내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지 진짜는 아닐 것입니다.

윤 우 위원 : 유학생들한테 현지인들을 만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홍금수 : 유학생들은 매일 10시30분쯤에 점검을 합니다. 외출을 해서 24시간안에 소식이 없으면 대사관에 보고하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대학, 각지역마다 책임자가 있고 매달 대사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 속에 국가안전부에서 파견한 스파이가 몇명씩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윗대에 한명 있었는데 졸업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해서 자기가 공개하는 통에 알고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했습니다. 여름방학때 들어가면 그들은 따로 만나지는 모르겠지만 그간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영호 위원 : 군복무는 몇년간 했습니까?

홍금수 : 거의 10개월입니다. 북한의 군사체제는 남한처럼 규제가 없습니다.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하는 대상들은 대학에 바로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부모가 당간부나 비서관입니다. 5년하는 대상은 군사복무하다가 위탁공부라고 해서 군대에서 대학을 보냈다가 공부가 끝나면 본부대에 갑니다. 7년하는 대상은 거의 끝나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대상은 완전히 초기공무입니다. 이들에 관해서는 금성정치대학 자격증을 줍니다. 인간수업은 100점짜리다 해서 대학시험을 볼 때는 기준점수 80점이라면 이들은 50점 맞으면 들어가는 등 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갔다와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간부의 조건에서 최소한 군경력, 사회경력이 3년이상 되어야 하고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따집니다. 공과대학을 나왔어도 공과계통의 공장기업소에 가도 군출신들은 간부등용이 빨리 됩니다. 과학기술을 하겠다는 사람은 굳이 군에 갈 필요가 없고 당간부를 하겠다는 군에 갔다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병호 위원 : 군복무 기간중에 의식주는 일반 사회수준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

홍금수 : 사회에서는 옷도 조절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는데 군은 100% 해결됩니다. 다만 문화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평양에 근무하다가도 '파송'받으면 그날 저녁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평양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위로 군출신을 얻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계급이 높더라도 평양시에서 빠져 나가면 대우가 떨어지기 때문에 딸을 시집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군인들에게 시집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군인들은 자기 것은 다 해결하고 노임은 타다가 집에다 주니까 걱정될 것은 없습니다.

차상필 위원 : 군인, 선생, 당관료, 행정관료의 생활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일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류는 어떤 계층인가요?

홍금수 : 요새는 당간부보다 외교계층이 인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에도 세대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계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완력으로 당간부들이 못밀어 부칩니다. 그리고 외교계층들은 아첨하면서 달러를 밀어주기 때문에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 4. 제19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제3차 북경회담 무기연기에 따른 대북조치  
방향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8. 17(화) 15:00~17:3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제3차 북경회담 무기연기에 따른 대북조치방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6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최문현, 곽희정, 송응섭,  
차영구, 이영호,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조덕송, 이경숙, 김동환,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비상임자문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북향TV 동향을 시청하신후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 이번 삼선비너스호 사진촬영사건으로 8.10 예정된 북경회담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공기사건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난데 대해 통일원을 비롯 정부 당국으로서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으나 선원이 호기심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수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쌀회담 대표간 접촉에서 문제를 협의기로 합의되어 있는데 우리 대표가 북경에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한 것이 또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주무기관인 통일원이 소외되고 뒤설것이지만 하느냐는 추궁도 있었고 2천억원에 달하는 쌀협상을 진행하는데 왜 회의록이 없느냐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2차회담때는 회담사무국이 관여하여 기록을 남겼으나 1차회담때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쌀제공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다 노정되었고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들도 국회 등을 통해 알게된 면도 있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우리 선원의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법규를 위반했다고 시인·사과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측이 뭐라하든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끼어들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한 신변안전보장 약속이 우선되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야지 사과하고 돌려받았어야 하는가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북에서 배를 갖고 와서 쌀을 신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배가 안돌아와도, 선원이 안돌아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발상을 하면 남북관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

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측의 태도보다 우리 정부가 취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발상전환이 없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무자들이 그런 건의를 했다면 발상전환을 해야 합니다.

김동환 위원 : 쌀은 정부가 주되 집행은 KOTRA가 하고 KOTRA는 수송을 선박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과하는 것은 선원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고 그가 범을 어기는데 정부가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공기사건의 경우 북한은 공무원 자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인(私人)입니다. 형식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 : 정부기관에서 쌀을 직접 수송해주기는 어려우므로 상선을 동원해서 해야 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 집행하는 일을 정부가 하지 말자고 하는 입장은 북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빼고 KOTRA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줄지라도 상사(商社)의 배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국장 : 그 이후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 선원의 사진촬영사건은 북한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 동기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 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때 북측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 : 우리가 허용했었습니다.

강인덕 위원 : 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사건을 사면해준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 임기말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해보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신변안전보장각서는 우리가 북에 가서 무엇을 해도 잡아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록을 안남기겠다는 결정도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북한과 싸움이 안됩니다.

북한이 선원을 억류한 것은 쌀문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수로 지원사업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문제, 평화체제 전환 관련 8.15 대북제의 등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남한은 개입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정치적으로 밀어부쳐야 합니다.

북경회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머지 쌀 주는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쌀지원을 지연시킨다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신봉식 위원 :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북한에서 파기한 것은 가장 중요한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우리가 쌀지원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남북회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남북회담을 추진하는데 국민여론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지상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의 몇 퍼센트가 통일을 서두르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가 신문사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통일문제를 사활적인 문제로 다뤄야 할 문제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조덕송 위원 :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의 기초가 국민이 아니더라도 야당에 귀뿔을 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독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경원 차관이 북경회담 수석대표로 선택되었습니까? 정부가 결과적으로 실책을 범했고 일본으로부터도 흰눈으로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도대체 정책입안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여론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주느냐? 선원을 무사히 데려왔으면 됐지 더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입안이고 집행이어야지 혹시나 정권적 차원이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신변안전보장각서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72년 적십자회담시에는 대표중에 망명의사가 있더라도 돌려보내야 한다는 약속까지 한 것입니다. 사회안전부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금철이 그것을 약속하고 파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과각서를 써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 우리측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쌀을 실어보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여론이 반대인데 정부의 입장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윤 우 위원 : 특히 신변안전보장각서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북한의 '두개 조선' 정책 탓이라고 봅니다. 이는 통일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변안전보장각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남북간 인적왕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북한의 '조선은 하나'는 구호일 뿐이고 실제로는 '두개 조선'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왕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꾀감만 빼먹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장도(壯途)'와 관련된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고 북한의 '두개 조선'정책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인덕 위원 : 다음 북경회담을 할 작정입니까? 회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변안전보장각서문제를 계기로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의 방북기술자는 내보내줄 것이지만 신변안전보장각서의 의미를 기업에 주지시켜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고 남북회담 자체를 새로이 북에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부터 밝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잔여분 처리문제로 지연시켜야 합니다. '비선' (秘線)이 아닌 '굵은 줄'을 통해서 경험문제·쌀문제가 대단히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북한측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래야 마·일에도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북전략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경수로지원문제도 해결되기 곤란할 것입니다.

최문현 위원 : 북한에 쌀을 보내는 문제는 중단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날조한 범행인데 우리가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결정 당국자가 범을 지켜야 하고 국민여론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 모두가 북한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추진위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원차관이 있는데 재경원차관이 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원억류사건은 북한측에서 '최악수'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간첩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습니. 또한 북경회담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표간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신변안전보장각서는 '핵우산'과 같은 것인데 북한 스스로 무효화했습니다. 억류기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급해서 책임을 졌습니까? 이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법과 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에게 상황판단을 맡기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남북관계는 무정부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우 위원 : 8.10전후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8.15 광복 50주년에 너무 연연했다고 생각합니다. 8.15에 쌀 8만t을 안주겠다고 선언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지난번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것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던 때입니다. 지켜가면서 대처할 것이냐, 파기하면서 강하게 나갈 것이냐? 공산주의 속성상 강하게 나갔다면 협상에 응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입장을 취해야 북이 만만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강인덕 위원 : 푸에블로호 사건때 미국은 사죄문을 썼으나 나중에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귀환한 선원들을 조사해서 시인할 것이 아니라 즉각 성명을 발표해서 날조한 것이라고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측과 회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측과의 회담은 모든 문제가 정치문제고 모든 회담이 정치회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남북회담은 못합니다.

쌀을 더 줄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했으니까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연시켜야 합니다.

김동환 위원 : 지금의 신변안전보장각서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새로운 형태의 각서를 받지 않고서는 쌀인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는데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받지 않으면 못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 : 북한측에서 직통전화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북측이 뭐라고 하든간에 판문점으로 나와라 하고 해야 합니다.

이병호 위원 : '비선'(秘線)이 만약 있다면 그를 통해서라도 우리 입장을 북한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국민이 국가의 기간인데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기간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남북관계로 연결되면서 국민들의 사상적 기조도 흔들리고 민심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적 차원이면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입니다.

5공·6공에서는 정권의 정통성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문민정권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상회담을 해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차상필 위원 : 인공기사건과 사진촬영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모두 청진항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 개입해서 지난번 사건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동등해진 것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면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쌀회담에 대해서 우리 여론에는 '무조건 지원', '제대로 지원' 등 양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원억류사건으로 국민여론은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국민의 북한을 보는 시각도 제대로 되고 남북회담도 제대로 되는 계기로 활

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우 위원 :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이 있으나 인공기사건은 선원억류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부가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북한이 고약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3차 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3차 회담을 할 필요가 없고 이양천씨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북한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동환 위원 : 3차회담에서 신변안전보장문제를 얘기한다면 지금 쌀 수송 배가고 있다는게 장애가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배가 오가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아야 한다면서 잘라놓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쌀추가제공외에는 의제밖의 문제라고 나올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쌀제공이유조차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도 일이 있을 때 사전에 개최해야 합니다.

유득환 위원 : 북한의 이중성과 ‘개구리 뛰는 동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선 아주 좋아할 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문제는 여야 없이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비판은 정부를 포함하여 협상당사자가 너무 북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이 경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중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뒤집어쓰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거 회담에 임할 때 시나리오를 써서 거기에 대처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SOP를 만들어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꼭 들어맞는 모델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포괄적인 SOP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영구 위원 : 국민여론 수렴을 말씀하시는데 회의에 참석해 보면 보수적이면



서 기득권을 가진 '사회안전관'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고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여기 의견과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문제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Sensitive) 면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 대상선정 및 조사방법을 세심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여론조사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측의 시각에서 보면 지난 1~2년간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북한 지도층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승리의 기선을 잡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2:1로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문제별로 미국과 북한이 한 박스(Box)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탈냉전을 보는 철학의 차이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핵문제 관련 미·북한간 한달간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많이 오갔을 것입니다. 미·북한간 합의하면 우리가 거의 뒤따라가는 식으로 되었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이나 그럴 여력도 없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면서 한국을 상대할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김정일 권력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일관계, 체제안정 등이 상당히 많이 뒤편에 있을 때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해도 남북한간에 될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책집안차원에서 새정부이후 특히 심해졌는데 정책의 어떤 부분도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노출되고 민감한 정책은 토론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남북관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악순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론수렴 등 정상적인 투입(Input)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정책집행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통제와 비밀보장, 정부내 기능활성화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 :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북한은 오히려 자기 몸값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북정책 추진에 정도(正道)를 가야 되겠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여론의 뒷받침이 없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일이 되는게 아니라 안되는 쪽으로 돌아오기가 쉽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비상임자문위원회를 사전검토식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 제20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KEDO 경수로부지조사단 방북결과  
(강윤관 경수로기획단 부장 초청설명 및 토론)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8. 29(화) 15:00~17:1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안 건 :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결과 설명

\* 초청인사 : 강윤관 (경수로기획단 건설기술부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5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송응섭, 차영구, 이영호,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김태연, 조덕송, 구종서,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20차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담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 : 방금 8.15 관련 북한의 영상자료를 보셨다시피 북한주민들이 그동안 배가 고파서 시위도 못하더니만 쌀을 받아먹고는 힘차게 시위를 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쌀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시간들이 지났고 그 사이에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부지조사단이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경수로 부지조사단으로 북한에 갔다는 경수로지원기획단 강윤관 건설기술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후에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관 : 경수로 사업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라똘푸르에서 부지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기로 합의했고 그 일환으로 8.15~22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총인원은 미 국무성의 솔로젠 박사를 비롯해서 15명이었고 우리측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일 15시 20분 북경발 고려민항을 타고 순안비행장에 내려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180명 정도의 승객이 탈 수 있는 비행기였고, 비행기를 타는데 화환을 5~6개 정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기내에서 간식이 나왔는데 다른 비행기의 음식보다는 질이 떨어져서 일행 모두가 빵만 하나 먹었습니다. 당초에는 평양에서 1박을 하지 않고 바로 신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북한측에서 하루 머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려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정무원 산하의 직속기관인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현용만이 영접을 했고, 김성립 부국장이 안내를 총괄했는데, 항상 붙어 다니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려호텔 3층은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2층은 국내인들 위주로 사용을 해서 격리된 입장에 있었습니다. 저녁식사후 44층 회전바에서 맥주를 먹고 구경을 했지만 밤이기 때문에 안내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15일 저녁에 김성립에게 내일 조깅을 해도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다가 16일 6시 30분에 전화를 걸어서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을 운동을 했습니다. 대신 한 블럭의 눈에 띄는 쪽만 움직이게 했고,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신포는 11시에 헬기를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그 사이에 미니버스를 타고 인민대학습장, 창광거리, 광복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광복거리는 3~4km 정도로 왕복 16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에 비행장으로 가서 군용헬기를 타고 2시간 걸려서 신포에 도착했습니다. 신포의 숙소는 비행장에서부터 5분 거리에 있는데 86년부터 92년 사이에 러시아와 공동작업을 할 때 러시아 기술자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92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우리 때문에 단장을 새로 했습니다. 에에콘은 안되고 물도 수도 꼭지까지만 나오고 샤워꼭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미국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수리해 달라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시에 북한 대표단과 상견례를 했는데 단장은 원자력총국의 고문인 이명식이었습니다. 베를린 회담때도 나왔었고 전공은 전기분야였습니다. 나이는 곧 퇴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60세가 넘는 것 같고, 86년 러시아와 할 때부터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표단과 상견례후 북한의 부지조사경위, 러시아의 요약분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요약자료라고 하지만 북한이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 식사는 주방장을 어디에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리는 수준급이었고,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카테일바도 있었는데 평양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당한 물자를 동원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먹었기 때문에 외화벌이의 측면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용성맥주, 일본의 기린, 삿뿌르 등 일본제품도 상당

수 있었고, 냉장고는 방에 하나씩 있었는데 일제였습니다.

17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조사한 지역은 낮은 구릉지로 해안선이 1~4km까지 펼쳐져 있고 그 중에서 북한이 지정한 위치는 3km정도 들어간 위치였습니다. 경수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냉각수와 공업용수원인데 북방으로 7km정도 지점에 있는 북청 남대천을 가 보았습니다.

18일에는 항구, 부두, 주택예정지구를 보았습니다.

19일 오후에는 지질·지진·지형·안전도분야, 수질·기상분야, 건설·환경분야 등 3개팀으로 나누어서 북한과 토론을 했습니다.

일정중 시내를 돌아 다니거나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거의 제한없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19일에 냉각수 취수예정지구만은, 냉각수는 해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바닷가로 나가야 되는데 바닷가에서는 사진촬영을 금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매 정도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만분의 1 지도는 있어야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준 것은 이만분의 1 지도였습니다. 만분의 1 지도는 복사를 못해서 못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포지역에는 복사기가 없고 고려호텔에 복사기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지적도같은 크기는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진실같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1일에 평양에서 북한 단장과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복사를 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복사할 데가 없다, 컴퓨터센터에서만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를 협의하느라고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정된 예산이 없으니까 비용을 대라 했습니다만 우리측 입장에서는 자료를 받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정했지만, 이미 받은 50매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복사해서 주기로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신포에서 헬기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날씨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일 저녁에 기차로 왔습니다. 침대칸을 타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역마다 사람이 많았고 이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로 밤에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일 새벽에 평양에 도착했고, 일본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낮에 시간이 남아서 평양 시내 관광을 다시 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저한테 김일성동상 참배는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자기가 막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젠 단장도 차에서 안 내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에서 사진을 찍는데 전경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더니, 카드섹션, 참배하는 것을 찍으니까 왜 일부러 그 부분을 찍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찍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경을 찍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넘어갔는데, 자기네들도 획일적인 사회로 끌고 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감각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관광을 하면서 보니까 한쪽편에 발전소가 있었는데 매연이 굉장히 납니다. 그 발전소가 그 지역 전력의 주공급원이었는데, 인위적으로 다 만들었으면서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연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투자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2일 10시에 고려민항을 다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올 때는 뒤에 앉았는데 비행기 위의 찬바람이 나오는 곳에 물기가 있어서 물이 계속 떨어졌고 제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측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레코드를 위한 미팅을 해서 활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남기자고 했는데, 우리는 3국으로 구성된 KEDO조사팀을 넣으려고 저도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만 북한과 KEDO만 얘기한 것이지 그것은 당신네 사정이 아니다 하는 북한의 논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KEDO, 미국 주도라는 단어를 넣자 했지만 우리의 논리 때문에 반

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주 활동이 예정부지에 대한 점점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자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1986년부터 92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러시아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부지조사 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가 86년부터 89년까지 위성영상,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8개 지역을 선정했던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화산대가 가깝거나 단층부분은 빼고 덕성과 신포로 귀착이 되었습니다. 덕성은 신포보다 북방에 있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러시아와의 공통적인 결론이었고, 결국 신포지역으로 확정된 형태였습니다.

신포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정밀조사까지 상당히 들어갔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소련의 붕괴 때문에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아야 되지만 러시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북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더라도 100%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설계를 위해서도 그 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부지의 표고는 62m와 56m인데 과히 높지 않은 것입니다. 울진은 100m에서 깎아서 만든 지역입니다. 56m가 피크로 된 구릉지로 되어 있고 옆에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에는 건설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깎고 단단한 암반위에다가 원자로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높이가 있는데서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안에서 지점을 선택해 놓은 것이 3km인데 신포지역 전체를 봐서는 1-4km 사이의 바운더리기 때문에 바운더리 자체는 북한에서 제시한 자료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해안과 가깝고 멀다는 것은 용수원 때문에 그렇고,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공업용수는 7km 정도 떨어진 곳에 남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7km를 끌고 와야 하는 부분, 그런데 끌고 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수로 건설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취수를 위해서 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고리의 경우는 세군데에서 용수를

갓다 쓰고 울진은 3.2km, 영광은 상당히 멀리 되어 있습니다. 멀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거리보다는 취수를 위한 댐 조성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점에 대한 지질이나 지진안전성 부분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이 주변에 없고 신선암 암반의 분포도 비교적 있기 때문에 원자로를 놓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깎았을 때 신선암 부위가 원자로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내에서도 보강작업을 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 확보 부분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3km인데 3km 사이에 공교롭게도 담수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봤을 때는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한쪽은 해수면과 똑같고 한쪽은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과 똑같은 것은 취수하기가 용이하고 높은 부분은 흘러보내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담수호를 이용하더라도 약간의 투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안능력 관계는 옆에 양화부두가 있는데 수산물 입출항 항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량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입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요약분을 13개 분야로 나누는 것을 넘겨 받았고, 관련지도와 도면, 사본을 50매 정도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9월달에 공급협상을 체결할 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이 갔지만 한국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명만이 지질전문가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큰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저희가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영어로 하는데 영어번역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영어로 이쪽에 이해시켜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얘기하기를 왜 우리가 왔는지 아느냐, 돈을 누가 대는지

아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북한 전문가들 입장으로는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상당히 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인허가 기준이 있는데 북한은 내부건설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KEDO와 북한간에 공급협정이 체결되어서 정해지는 기준으로 다 바꾸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대표가 되는 KEDO, 그 KEDO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실체는 누구이든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주계약자가 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면은 부지가 확정되면 모든 것은 KEDO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인프라를 다 해라 하는 관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급협상에서 신경전을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북측 단장과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KEDO와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북한은 다 이행하는데 이쪽에서 안 하고 있다, 자기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기에 부지가 확정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자기 퇴임전에 부지라도 확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표명하는 것을 보면 관심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업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문민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의 자유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따라 다니는 사람이 얘기를 많이 거는데, 그 사람이 걸다 보면 저는 공개적으로 떠들고 해서 그 사람이 곤혹스러운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너희들은 비판이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쌀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선원을 억류하고 있느냐 했더니 정탐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찍으면 다 파악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정탐행위를 하려고 하겠느냐. 실수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있을지언정 남북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거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남북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조문을 거부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거부라는 것이 정부에서 판단하고 유도하는 차원이 아니다, 여론과 국민의 정서가 문제인데 6.25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남한 사람들은 봤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휘를 한 사람이 김일성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조문을 하겠다고 하겠는가. 국민정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정일 승계문제는 저를 안내하던 사람이 어느정도까지 정치권에 개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수년전에 정착이 되어 있고 다만 김일성 죽음에 대한 애도행렬 때문에 체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애도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수로 사업에 물꼬를 열었다,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앞으로 그 부분에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KEDO의 실체가 인정이 되었고 미국만을 상대로 하던 체제가 KEDO라는 국제조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KEDO의 일원으로 움직이는 부지조사, 공급협상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큰 거부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큰 장애요인은 제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덕송 위원 : 숙식료를 이쪽에서 부담했습니까?

강윤관 : 예.

조덕송 위원 : 앞으로 바다를 통해서 물자를 수송하게 됩니까,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항공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보냅니까?

강윤관 : 그 부분은 공급협정을 체결하면서 통신, 인적, 물적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가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자는 해상

으로 들어가야 되리라고 보지만 인적교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신봉식 위원 : 여권은 우리 여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강윤관 : 방북비자 비슷한 것이 있는데 3국이 모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권에는 표시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인덕 위원 : 러시아 자료는 돈을 주면 주겠다는 것입니까?

강윤관 : 그것은 러시아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러시아와 무엇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액수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호 위원 : KEDO 최영진 차장의 입국거부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강윤관 :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영진 차장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고 부지조사는 칼라룸푸르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KEDO가 발족되면서 총장단이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얘기는 평양을 거치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도 평양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북한에서 평양의 1박을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 그러니까 이번의 조사단은 합의사항에 있는 것이고 총장단 일행은 합의사항에 없었다, 그러니까 꼭 한국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강윤관 : 그때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다른 답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덕 위원 : 부지를 조성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강윤관 : 조사와 비용은 다른 것입니다. 조사자체는 정밀조사를 들어가면 적어

도 6개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프라 관계는 현재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생각은 KEDO가 부담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경수로 건설하는 부분만이지 인프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원전을 건설하면 인프라가 없는데 들어갑니다.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산업설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는 쪽의 적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인프라를 새로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 고리의 경우도 새로이 인프라를 투자를 했습니다.

신봉식 위원 : 쌀지원을 한국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강윤관 :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보를 어느정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는 접촉을 못해서 파악이 안됩니다. 저를 따라 다니던 사람이 제가 그부분을 공개적으로 떠들기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강인덕 위원 : 부지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전문가인데, 그들의 영어 수준이 통하지 않는다면 경수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의 전문적인 용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윤관 : 그들의 언어는 러시아와 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통역관들이 붙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인덕 위원 : 대화하는데 괜찮은 정도입니까?

강윤관 : 대화는 통하는데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면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지면 우리 전문가가 듣고 통역해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김태연 위원 :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전기발전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기대하는 전기에 대한 긴급성, 열의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공짜로 얻는다는 장점이야 있지만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고, 일반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발전을 하면 송배전시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드는데, 사실 전력이 당장 필요하다면 디젤, 화력이 빨리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경수로는 부수적인 전략적인 혜택이 아니라면 전력측면의 긴급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북한이 전력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얻으려는 열의가 얼마나 있는 것이고 그동안은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윤관 :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는 못하지만 원전과 동시에 중유를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중유로서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중유는 원전을 완공할 때까지 제공하고 건설이 끝나면 중유는 없어지고 원전에 의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중유로서 자기네들이 목적하는 바는 일단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연 위원 : 에너지화 하는 것은 전력화하는 것도 있고 연료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디젤, 화력발전소가 있어야 될 텐데, 중유가 부족해서 중단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강윤관 : 그런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강인덕 위원 : 평양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석탄이죠?

강윤관 : 물어봤더니 석탄이라고 했습니다.

조덕송 위원 : 스카이라운지에서 봤을 때 평양의 일반적인 조명빛이 어느정도 인가요?

강윤관 : 제가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건물이 있는데 왜 불을 다 끄고 있느냐 하



고 물었더니 사람이 아직 안들어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 : 고려호텔 전망대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회전이 되었습니까?

강윤관 : 예. 한번 도는데 40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서서히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요 포인트는 다 보입니다. 그때는 8.15와 축제가 1주일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김태연 위원 : 평양에서 신포를 갈 때 헬기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아래를 충분히 보았습니까?

강윤관 : 봤는데, 우리의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정도였습니다. 초가집은 없었고 누추한 건물도 꽤 있었습니다.

강인덕 위원 : 해변가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한 것은 군사적인 것 때문입니까?

강윤관 :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데서는 거의 다 찍었습니다. 저희 숙소와 해변이 걸어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건물이 있고 외곽에 담 비슷하게 철조망이 있는데, 그 담 내에서만 움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깅을 해야 하는데 너무 좁아서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서 200m정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김태연 위원 : 숙소는 한 사람이 한 방을 썼습니까?

강윤관 : 룬이 30개 정도 있었는데 한 사람씩 썼습니다. 숙박비는 냈습니다. 그리고 카테일바에도 외화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장사가 됩니다.

유득환 위원 : 음식물이 좋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강윤관 : 한식, 양식 등 원하는 것은 대충 다 되었습니다.

송응섭 위원 : 우리는 4명이 다 경수로 전문가인데, 일본에서는 한명만 빼고 3명은 경수로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강윤관 :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무성, 통상성, 과기청, 지질연구소에서 왔

는데 지질연구소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측면이지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행정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로 봐야 됩니다.

송응섭 위원 : 경수로기획단에 국방부 요원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수로 문제가 진전이 되면 반드시 국방부관계자도 경수로기획단에 포함을 시켜서 주로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경수로기획단에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정말 경수로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강윤관 : 북한의 전문가로 나온 사람들은 직업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들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획부장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6. 제21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제3차 북경회담 추진방향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9. 12(화) 15:00~17:15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제3차 북경회담 추진방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9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송응섭, 차영구, 이영호, 이서향,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조덕송, 이경숙, 김동환,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21차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 : 9월 27일부터 3차 북경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측이 추석전에 우성호를 송환하라는 촉구를 하면서 9월 27일에 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측은 우성호 송환 부분은 일언반구도 없이 날짜만 수용하는 전문을 보내와서 9월 27일로 3차 회담 날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우성호 선원 8명 중에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8명 중에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고 나머지 4명의 건강상태는 짐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우성호 선원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담을 안고 선원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중의 하나가 선원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이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을 돌려보냈을 때 오는 후유증 때문에 북한 군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차회담 날짜가 잡혔지만 우성호는 송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으로서는 3차회담에 임하는 입장이 무겁고 우성호 송환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3차회담을 맞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북한에 대규모 수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3차회담에서 북한이 수재물자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냐 또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 수재물자 지원을 타진하는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우리측에게 정중하게 수재물자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본다는 입장 정도만 정부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차회담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장 정리 문제라든가 회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측의 예상태도 등 3차회담과 관련해서 자문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부장 :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의제는 북한측의 예상태도, 우리측이 취할 입장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인덕 위원 : 북한의 홍수 피해규모가 520만명, 150억불이라지만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지도를 놓고 검토해 봤더니 알려진대로 강우량이 600밀리가 왔다면 또 2시간동안에 600밀리가 왔다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컨대 압록강이 범람했다면 신의주는 땅이 낮기 때문에 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600밀리가 박천, 안주 일대에 왔다면 청천강도 틀림없이 범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의 피해보다는 안주공업단지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대동강 지역에도 600밀리정도가 왔다면 대동강도 틀림없이 범람했을 것입니다. 평양의 보통강도 범람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성강을 포함한 황해도 일대가 침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찍 비를 수확한다고 해도 7월중순에 장마가 왔다면 틀림없이 비는 관수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댐, 저수지도 무너졌다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북한의 발표가 농지피해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공장, 통신시설, 철도, 심지어 광산까지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150억불이라는 것은 GNP의 1/4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52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TV에서 본 것과 같은 행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TV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장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도 북한의 경제전망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장 : 지금 국제기구에서 조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면 피해상황도 종합되리라고 봅니다. 수재전부터 피폐했던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도 수재 때문이라고 조사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기환 위원 : 수해정도는 다른 것과 달라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나옵니다.

수해지역이 얼마나 물에 잠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측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 같은데 정부에서 그것을 추측하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부장 : 북한 TV를 보면 신의주는 1미터 70센치가 잠겼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산정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 지하무기고, 군사 시설들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사진만 가지고는 수몰 지역의 피해상황을 산정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동환 위원 : 520만명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이 내놓은 숫자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나 했을 때 행정구역 단위로 수몰된 지역의 거주인구 기준으로 이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유엔에서 조사한 것은 그 중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50만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의주와 박천에 600밀리가 왔다고 한다면 서해안 일대를 보면 거주인구가 이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520만명을 역으로 풀어 나간다면 피해범위를 짐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3차회담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덕송 위원 : 강위원이 얘기한 내용과 3차회담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규모가 유엔기구가 들어가서 일부만을 보고 발표한 것이 10만가구 50만명이 아닌가. 그러나 520만명이라면 북한 인구의 1/4인데 그렇게 막대한 이재민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이재민이 50만명이라면 국제적으로도 보기도분 대규모의 수재이고 그것에다가 산업시설이 30%가 파괴되고 지하군사공장 등이 포함된다면 여러가지 변수가 적용되겠지만 북한이 1년에 모자라는 식량이 통상 200~250만톤인데, 금년에 수재로 인해서 농산물 주산지인 황해도, 평안도에서 허덕이면 북한은 식량뿐만 아니라 의약품, 생필품 등 아쉬운 입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차회담에서는 북한이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도와준다, 그렇지만 4차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고 4차회담부터는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기는 미끼로 삼을 수 있고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간다면 남북회담의 정상통로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이서항 위원 : 북한의 수재피해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피해가 상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북한이 3차회담에서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쌀 15만톤을 준 것에 대한 여론의 악화,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 또는 잘못된 우월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북한은 수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많은데, 조덕송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연계조건을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수용해서 수재물자를 제공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태도가 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남북관계의 지침이 된다는 생각에서 상징적이나마 제공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조족지혈이지만 2만5천불을 제공을 했듯이 우리도 상징적으로 우리의 일관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또는 남북관계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외신보도를 보니까 김정일이 위기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3차회담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봉식 위원 : 이번 수재를 기해서 과연 북한이 주체사상까지 포기하고 모든 자존심을 버릴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북한내의 강경파는 최후의 일인까지 굽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틴다 하는 입장이라면 유엔에다가 호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우회적인 한국에 대한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악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한국이 융통

성 있게 나올테니까 이것을 거꾸로 이용해 보자는 술수는 없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3차회담을 하든지 4차회담을 하든지간에 미해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성호, 안승운 목사, 쌀 추가지원, 비료, 농약지원 문제 등 당면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새삼스럽게 다른 것을 논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북한이 이러한 문제에 임하는 태도를 지켜보면 큰 물줄기가 휘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차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걸려 있는 문제들을 다 제기해서 북한의 태도를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수재문제도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데, 예컨대 한 사람이 1년에 먹을 수 있는 양이 100kg이라고 하고 쌀 15만톤이라면 150만명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또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분이 200-250만톤이라고 하면 2000-25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러면 연간 250만톤이 부족하다고 하면 북한은 1년내내 어떠한 양곡도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고 과연 그러한 부족량을 믿을 수가 있는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수재가 있어서 흉년이 되었다고 해도 대개 2/3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면 대흉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980년에 대흉년을 겪었을 때 평상시 수확량의 70% 정도를 수확했는데, 250만톤의 애기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일 북한이 세계에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군이나 정부에 비축미가 없지는 않을텐데 끝까지 남겨두고 국민을 죽이면서 버틸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이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놓고 우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비난하고 강경하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이 어렵다고 하는 호소가 다분히 엄살이 아닌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 :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보이는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가벼운 정도로 도와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정식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태도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짧게 보면 3차회담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은 일단은 국내여론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선불리 정부에서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깔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북한이 정중하게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우성호 송환문제,

안목사 사건, 대남비방, 대남기본태도 등 부수되는 문제가 많은데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진지한 원조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진지하고 정중하게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잡아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유엔에서 상징적인 지원을 한다면 우리도 상징적인 지원정도는 하는 것이 대승적인 입장이 아닌가. 물론 대북관계에서 쌓여 있는 양금이 있습니다만 상징적인 지원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요지입니다.

구종서 위원 :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때 수재와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재와 관련해서 지원요청이 있다면 옹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도 수재자체가 조건이기 때문에 주어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북한의 요청내용 그리고 수재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방역, 의약품 등을 일차적으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쌀은 이미 주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서 수재기간을 넘길 수 있다고 보니까 쌀 요청을 한다면 수재용으로 더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콜레라 방역지원을 제의했을 때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을 미리 짐작해서 주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재에 관한 한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선언을 미리 하고 북경회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미국이 어떻게 하더라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참조할 필요는 있지만 원칙선언과 태도표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조건없이 해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재이외의 원조에 대해서는 부총리 말씀대로 북한의 요청을 들어보고 그때가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이라면 북한이 어려운 합의를 하고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면 분위기 조성이 안 되었다고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쌀 달라고 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무지한 모욕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외교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걸어서 분위기 조성을 하자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쌀지원 때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반대하는 것은 주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은 정통성 경쟁입니다. 남북간에 정통성문제는 과거의 이념의 차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통성은 우리가 얼마나 민족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민족발전과 민족애를 얼마나 발휘하느냐, 체제를 통해서 경제건설과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어디가 발전되었느냐 하는 것이 정통성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정통성 경쟁, 체제의 우월성, 민족발전을 돕는 차원에서라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게 몇몇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응섭 위원 : 지난번 쌀지원을 할 때 우리 정부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고 또 북한의 태도가 너무도 오만불손했기 때문에 북한에 엄청난 손해가 있어도 국민정서는 무관심합니다. 3차회담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비축미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는 유류, 탄약은 3~4개월정도 싸울 수 있는 분량, 식량은 100만명으로 생각해서 6개월정도의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비축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는데 항공사진을 본 사람의 얘기로는 신의주지역, 예성강을 위주로 한 황해도, 강원도 일부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평양지역도 상당히 물에 잠겼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틀림없이 수재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려면 반드시 북한이 선제의를 해야 되고 북한 정부당국이 요구를 해야 되고,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종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감정이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쌀문제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우성호 송환문제, 안목사 문제 등이 걸려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 조건없이 준다고 하면 국민정서에 딱혀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한이 선제의를 하고 제의 자체도 당국자가 하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당국대 당국간의 대화, 대화창구의 정상화를 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볼 때 국제기구에서 도와준다는 액수로는 어렵도 없는 액수이고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대화창구를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서 북한의 버릇을 고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필 위원 : 쌀문제로 남북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2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여러가지 회담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된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서 북한을 지원하면 언젠가는 북한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두 견해가 좁혀져서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봐서 어느 쪽인가를 확실히 정해야지, 추진한 후에 여론이 나쁘게 되면 변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안된다.

쌀문제 뿐만 아니라 수해문제도 보면 앞으로 경제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남북간에 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해야 할 것은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 정치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경제 등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역, 협력 등 외교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쌀문제도 틀림없이 우리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회담으로 가고 그래서 통일된 이론으로 나갈 적에 국민들도 지지할 것입니다.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돕고 싶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쌀문제처럼 하면 정부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쌀문제, 수해문제 보다는 앞서서 정부가 통일된 의견과 또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루트로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한다는 것이 이번에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4차, 5차부터

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한호 위원 :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홍수 때문에 경제사정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영향이 내년 봄쯤에는 더욱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는 그때가서는 좀더 북한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오히려 북한에서 제안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남북대화에 집착할 필요없이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북한이 대화를 진정으로 제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신 수재 때문에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회담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게 요청해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쌀을 제외한 의약품, 의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략물자일 가능성은 없고 의류, 의약품 등은 실제로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북한주민에게 우리의 성의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인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제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해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언동은 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자극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되게 하고 불신을 심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지키지만 상대측이 어려움을 당했을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형적으로는 같이 고통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김동환 위원 : 3차회담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일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서 추가적인 회담이 필요하고, 북한에서는 당초부터 15만톤이 모자라니까 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측에서 15만톤을 지원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나중에 논

의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3차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규정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번 3차회담에서는 북한이 수재를 크게 입었으니 차제에 쌀을 많이 보내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적으로 북한의 수재가 인정되고 지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면으로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국내적인 사정도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재와 관련된 지원문제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남북간에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수재물자를 왕래한 전례도 있으니 적십자기구로 회담을 넘겨 버리면서 적십자사에서는 3차회담이 있기전에 국제기구에서 정확한 조사가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적십자사가 공개적으로 수재 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논의해서 의료품, 생필품 등을 적십자기구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절차를 밟아가면 국민들의 감정도 다소 호응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국간에는 적십자가 지원하는 것은 응급지원 수준에 머무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이니까 이번에 수재로 인해서 입은 생산시설, 농경지 등 경제시설을 복구하는데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가지 조사와 절충이 실무차원에서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그 길을 통해서 남북간의 길을 열자고 하는 목표를 이룩하는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북경회담에서는 당국자간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장기지원계획을 제안을 하고 당장에 지원하는 생필품은 적십자기구를 통해서 한다는 방향으로 우리의 입장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말을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입장이겠지만 공개하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호 위원 :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우리의 식량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전략무기화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에서 북한의 식량사정과 결부시켜서 우리의 능력을 전략무기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회담에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전략구상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번째 3차회담에서 북한이 수재에 대한 지원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적십자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산가족문제와 결부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산가족문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면 아마도 수재지원 문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회담은 탐색전의 성격을 가지고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식량을 북한에 대해서 무기화하려면 우리의 약점인 안보문제 특히 북한의 과대한 군사력을 줄이는데 이용하도록 우리의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쌀을 거져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은 15만톤을 주는데 군대를 15만을 줄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정당성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북한에게 일종의 압력 작용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15만톤을 주었지만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이 주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긴장상태에서 적을 도와주는 쌀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국민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외교적으로든 협상에서 직접 요구를 하든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득환 위원 : 그동안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재민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는 이유도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 왔고 심지어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없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차회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의제가 북한에서 제안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식, 또 각 부처의 의견통일도 안되고 우리 스스로 혼선을 가져오고 해서 나빠졌습니다. 한마디로 협상의 주도권을 잃고 상대방을 쫓아가면서 하다가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틀리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3차회담을 계기로 해서 본궤도에 올려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세워놓고 해야지 계속 이러한 식으로 개구리 쫓듯이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며 일관성있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북한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일부 시점에 따라서 변형은 시키더라도 기본줄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호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회담을 본궤도에 올리려면 북경에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하자는 얘기도 제안할 수가 있고, 회담의 내용도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하자는 의제제안도 할 필요가 있고, 틀림없이 수재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에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소극적인 것 보다는 시간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원을 하는데 2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수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수재민의 정서를 파악하면서 말을 해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적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인도적인 차원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 하게 되면 시간

이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 검토가 되고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주도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3차회담에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판문점으로 옮기는 문제 등 몇가지를 ‘주고 받는’ (Give & Take) 방향으로 요청을 해야지 계속 뒤를 따라가는 협상은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문헌 위원 : 3차회담에서의 유의사항을 몇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의 수해 피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집중되고 있는데 대표단이 수해문제를 너무 의식하면 회담에 여러가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회담을 잘해 보겠다고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합의서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빚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3차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1차, 2차때의 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2차때의 큰 실수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오래 국민들에게 남아 있고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고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대표단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실용성만을 쫓아가다 보면 명분과 판단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회담 도중에 말을 실수하면 취소해 버리면 되지만 상황판단이 잘못된다든지 회담의 기본방향이 뒤틀린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때의 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년이 되면 대북정책에서 우리의 경제카드의 위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심각한 홍수피해로 공장, 발전소, 댐 등이 복합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의 숨통을 자꾸 조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북한이 남북 경제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예감이 듭니다. 실질적인 경제회담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의 실질적인 회담의 뚝들이기 준비과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실적행위,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세파악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인공위성 사진 판독 등 일본,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북한의 공업, 경공업시설의 피해상황, 농업의 생산전망 등을 가능한 대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수재구호에만 너무 의식하지 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물자를 달라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표단이 해야 할 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구호물자를 달라고 해도 준다, 안준다 하는 단정적인 말은 회담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데이터 수집, 정세파악의 포괄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밑에 깔고 쌍방이 상부상조하려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의 수해피해가 있었다, 너희는 국제적으로 피해조사를 요청하고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서가 틀렸다. 남북간에 상부상조하자고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우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공을 던져서 북한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또 국민여론이 북한이 쌀을 받는 자세 때문에 좋지 않다, 남북협력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세우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년도의 본격적인 회담의 뜬들이기 예비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한 사람이 말대꾸 쇼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남북회담 운영체제 전체의 팀워크를 점검하고 전문가 양성의 계기로 삼아서 내년도에 남북회담에 대비하는 준비를 이번 기회에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 3차회담의 추진방향에 앞서서 회담목적이 정확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쌀추가지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회담에 있다고 볼 때 남북회담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적용해온 법이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합의서를 다시 확인하고 원칙을 세우는 작업들을 대표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용순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인도적인 입장에서 했다고 했듯이 우리가 항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겸손하게 받는 태도가 되도록 요구를 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구를 하게 되면 남북회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우성호, 안승운 목

사 문제도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회담대표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자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통일원 경험자들이 포함되어서 대표단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한일포럼에서 일본 국회의원 등 여론형성층 20여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정계, 재계 등과 상당한 협의나 의논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일포럼에서 강조한 것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카드로 활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한일관계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면에서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본의 태도, 원조방향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미리 제의해서 주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웅배 부총리께서 아직까지는 공식요청이 없기 때문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데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이제 좋아지려나 보다 하는 여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절대로 먼저해서는 안되고 먼저 한다면 적십자사는 먼저 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적십자사는 인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수해물자를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단정적으로 얼마 주겠다고 구체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서 의논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구체화시키면 나중에 여론이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차회담이 악화되어서 잘못될 경우에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한국내의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지리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영구 위원 : 우선 3차회담과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차회담에 가시는 분들의 마음자세는 3차회담으로 회담을 종결짓는 회담이 되도록 준비를 해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북경에서 만날 이유도 없고 비정상적인 대화를 더 이상 한다는 자체도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는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왜 이것을 끝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떠한 대화가 되어야 되는가 등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겠끔 문제를 던져놓고 왔으면 합니다.

북한 수재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인권, 우성호, 안목사에 대해서 정부가 무책임한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성의가 없는데 북한 수재민의 인권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정부가 책임을 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성호, 안목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와이의 회의에 갔다 왔는데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북한은 5년 이내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회의 석상에서 자주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지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북간에 인적교류가 꽤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미국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니지스 때문에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것은 무슨 의미냐고 묻는데 그들은 과거에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악화된 것이 가속화된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빠지고 확실히 북한은 심각한 문제에 급격하게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지원을 그만 둔 것에 대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명줄을 끊어 버리면 북한은 나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느낌이 듭니다. 오직 유지시키는 것이 미국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현재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이 보기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누구와 무

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할 시기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미국과의 협력과 대화 등 미국에게 모든 생명줄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대남대화를 위한 북한 내부의 정치적 준비가 없습니다. 네번째는 KEDO 등 핵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회담이 있는데 북한 으로서는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들입니다. 전문가의 부족, 국력의 한계, 재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위험스러운 남한과 대화를 할 시기가 아니고 여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실있는 대화는 남북간에 당분간 어렵다는 비관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 그것이 내년부터 본격화될지, 내후년부터 본격화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몇가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북한이 김정일의 정치적 안정, 공식승계하는 모양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진행상황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미·북관계가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네번째는 우성호, 안목사 등 우리에게 있어서의 현안문제들을 파격적으로 해결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 비로소 북한은 남한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보일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모임이 되어야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 위원 : 김위원, 유위원이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주도권이 없이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웅색했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국력, 국제적 지위로 보나 따라 다닐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차위원회에서 말씀한 대로 경제분야 차원이라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은 이번에 청산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식으로 이런 회담을 하면 국내적으로 국민한테 보이기도 안 좋으니까 이번에 가서는 새로운 문제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에서 받든 안 받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은 구분하는 것이 좋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북한의 신경을 건드릴 필요도 없이 수재를 많이 입은 것 같기 때문에 도울 용의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채널은 적십자사다 그러니까 적십자회담을 하자.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니까 중장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경제회담을 하자는 굵직한 제안을 두가지 하고, 쌀문제는 언제까지 보내줄테니까 쌀회담은 그만하자고 해서 이제까지의 회담은 없애 버리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3차회담에서 우리가 안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성호, 안목사는 이번에 제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전체를 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을 따진다면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이산가족 전부가 대상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큰 것은 놓쳐 버리고 우리가 휘말리게 됩니다. 언제 돌려줄 것 같으니까 다음에 회의를 한번 더 하지는 식으로 되니까,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대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번 회담으로 끝낸다는 목적이라면 수석대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하고 마지막으로 왔다고 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새로운 수석대표를 교체하면 국내적으로 수석대표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되는 것을 폭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안을 큰 것을 주어서 큰 제안을 해 버리고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문제가 나온다면 필요한 것을 내놔라, 경제문제가 나온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내놔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끌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정 위원 : 북한이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든지 어떤 계기가 되면 국면전환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문제로 인해서 우리 정부나 서방국가 등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북한에 대한 경계심, 압력을 가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북한이 고립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렇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회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결들여서 여러가지 국면전환을 하면서 남한 국민들이 쌀문제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계기로 이용하지 않고 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북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오는 것만은 틀림없고 그래서 3차회담도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주역이라는 계기를 만드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우 위원 : 북한의 수재가 과장된 것으로 보는데 통계조작에 능한 솜씨에다가 대외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니까 통 크게 늘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십 배 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피해상황이 어떻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 등 북한경제의 전반에 대해서 재사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수재문제만을 보면 지금쯤은 개략적인 평가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야 3차회담에 임할 수 있는 작전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차, 2차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앞으로 북경회담을 지속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접촉구도가 약간의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KOTRA고 북한은 삼천리총회사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접촉성 수준일 것이고 차관회담은 본회담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정부대 정부의 차관급회담이면서 북경회담의 경우는 예비회담 형태가 생략된 것이 아니냐. 예비회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급할 때 생략되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느긋할 때는 예비회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은 회담구도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재 긴급구조문제는 적십자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동감입니다. 정부대 정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적십자를 등한시하는 면이 있었는데 특히 이산가족 문제 등 우리의 강점이 적십자, 인도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잘 살려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대화전술에서 북한이 항상 구사하는 것이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 요청, 비공식 협상이 있습니다. 이러한테 우리가 심정적으로 말려들어가다 보면 북한은 기록에 남지 않고 우리만 기록에 남게 되어서 역사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적십자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야 합니다.

통일부총리 회견에서도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북한 수재지원을 고려 하겠다, 또 비방문제를 다루겠다는 상황인만큼 이번에 사용하든 나중에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대남혁명노선의 포기를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방문제는 남한에서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남혁명노선은 흡수통일문제와도 대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의 성금보다도 적은 2만5천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경수로문제, 앞으로의 관계개선의 비용문제 등을 감안해서 북한이 막무가내로 달라는 것을 감안해서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우선 3차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을 하고 회담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재가 과장이 되었든 아니든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변했다, 개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솔직해졌다는 인상을 줄 것이고, 국내로 들어오면 악화되었던 국민감정을 억제하면서 또다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일으켜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달라고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물건을 주고 받는 회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재물자는 북한에서 논의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되니까 수재물자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승운 목사는 오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우성호도 8명중에 3명이 죽었다면

거의 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록상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회담이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회담이 아닌 것 같은데 기조연설 비슷한 것을 한다면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못을 박는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회담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주는 회담도 아니고 받는 회담도 아니고 이번 회담으로 끝낸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끝내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애당초 재경원차관과 북한이 전금철이 만나는 회담은 안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삼천리총회사를 접촉창구로 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삼천리총회사는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대남공작을 위한 부서이지 경제 협력을 위한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천리총회사를 계속해서 접촉창구로 삼아야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상대로 하는 회담은 그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회담을 끝내고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고 할 때 어느 부분의 회담에 중점을 둘 것인가, 경제회담입니다. 이번에 가서 재경원차관은 북한에게 공식적인 경제회담 대표가 나오라든가 하는 것을 비공적으로 얘기할 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북한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앞으로 모든 회담이 그렇지만 변증법적 사고를 언제나 생각하는데 경제문제는 경제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KEDO 문제와도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북한에게 큰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저는 내년부터는 형편없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인들 가운데 일본, 미국이 선점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KEDO 회담을 보면서 느낀 것이 KEDO 차장과 북한 대표가 제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 제일주의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외국사람보다도 우리가 제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임해야 되는데, 우리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는 국제정세상 할 수 없이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력과정에서 들어가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경제대표, 특히 대외경제연락위원회가 나와라. 그래서 내년, 내후년의 경제사정을 묻고 수재물자에 대해서 물을 것은 물어야 합니다. 또 김용순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잡아서 앞으로의 전략기획을 가상해서 경제회담을 묻고 가는, 그렇게 하려면 KEDO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구상해 가면서 이번 회담은 종결짓는 형식을 취하고 장소는 판문점으로 옮기고, 안되면 안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 임했다면 좋겠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3차회담에서는 쌀 추가지원, 농약, 비료, 수재 등을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대표의 코를 꿰어 두려는 것이 북한의 예상되는 태도입니다. 북경회담을 어떻게해서든지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태도는 15만톤밖에 없다. 나머지 문제는 회담을 깬다는 전제위에서는 온갖 이야기를 국민여론을 위해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듣든 말든 우리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국내에 발표하고, 수재지원문제를 얘기를 하면 다 듣고 그 문제는 돌아가서 적십자사에 얘기해 보겠다고 해서 적십자쪽으로 돌리고 추가지원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나는 15만톤 권한밖에 없다고 하고 나머지 문제는 경제공동위원회로 넘기자고 해야 합니다.

북경은 평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너무 쉽게 본 것이 실수 같은데 꼭 판문점으로, 적어도 중립지역으로 옮겨와야 되고 경제공동위쪽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자는 회담전략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좀더 강조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한호 위원 : 사소한 문제같은데 부총리 기자회견을 읽어 보니까 우성호가 송환될 경우에 쌀 추가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쌍방이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담대표나 회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우성호선원들의 송환 자체가 특별하게 북한이 커다란 양보라든가 유화적 태도로의 변화라든가 회담대표들의 회담성으로 착각해서는 안되겠

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성호 송환문제는 강제납북한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언론들은 우성호를 송환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우리 나름대로의 양보, 대북지원이 뒤따를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회담대표들을 비롯해서 언론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들으면서 회담사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논의되지 않는 문제는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 북한측이 우리 민간차원을 엮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수재문제만해도 국내에서 종교, 민간단체 등 30여개 단체가 경쟁적으로 북한에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북한의 수재를 돕는 모금운동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 수재민은 안 돕고 북한 수재민을 돕는 판국이고 북한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재물자 제공문제도 당국이 민간이 나서서 돕겠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가 쌀지원을 하고 수재물자에 대해서 지원이 없으면 북한에서는 민간차원을 방해하지 말고 허용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송 위원 : 적십자사는 국민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비정치적인 특수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일괄취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부장 :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7. 제22차 회의

— < 목 차 >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북한의 농업실태와 식량부족현황  
(이민복 전 북한 농업연구사 초청설명 및 토론)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9. 26(화) 15:00~17:3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안 건 : 북한의 농업실태와 식량부족 현황

라. 참석자

- 비상입자문위원(16명) : 정홍진, 강인덕,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송응섭, 이영호, 이서향,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김태연, 조덕송, 이경숙, 구종서, 윤 우
- 초청인사 : 이민복 (귀순인사, 전 북한 농업연구사)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22차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북한TV동향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귀순인사 이민복씨를 모시고 북한의 농업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민복씨는 북한에서 농업연구사로 활동하다가 95년 2월에 귀순했습니다. 북한의 농업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 남한에 온지 8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각 정부기관에 초청을 받아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북한의 농업에 관련된 것은 개념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체농법이라는 말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고, 주체농법 때문에 북한 농사가 망했는데 근본적 원인은 다락밭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밭 때문에 북한이 민동산화 되어서 산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농업면적을 통일원, 북한총람, 대학교수 등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식량수요가 얼마인지도 들쭉날쭉합니다. 수요가 얼마이고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기본이 면적하고 강냉이인데 그 면적이 또 다 다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실패의 원인은 정책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잘못되었나 해서 열심히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집단화시켜서 농업이 안된다는 소리를 연구소에서도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기술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술을 도입시켜 놓았지만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숙군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5년을 살았는데 그 속에서 진실을 알았습니다. 정책이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정책이 얼마나 걸렸는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북한은 개인논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땅을 연구한다고 해서 개인논을 신청해서 농사를 지어 봤는데, 농장 땅일 때는 2톤정도 생산되었는데 8톤이 생산되었습니다. 또 이상해서 죽음을 무릎쓰고 중국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중국은 종자는 우



리보다 못하지만 곱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강냉이 종자는 북한이 세계적 수준입니다. 벼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전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장상태를 보면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종합적으로 그것을 자료화해 보니까 북한의 농업생산량이 시험생산량으로서는 기술적으로는 한정보당 강냉이는 15톤입니다. 저도 14톤을 했습니다. 그 시험수치에서 대중생산을 하면 떨어지는데 못해도 8톤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집단농장에서는 2-4톤으로 떨어집니다. 전국적인 평균입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70%가 없어지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지나가는 곳, 철도주변은 깨끗하지만 들어가 보면 범이 새끼칠 정도로 잡초가 많습니다. 사보타지가 70%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실험화하고 자료화해서 최종적으로 김일성에게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김부자가 고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이 집단주의적 정책에 있습니다. 너무 착취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주가 50-70% 가져가서 나쁘다고 하지만 제가 추산해 보기에는 생산량의 95%이상 가져갑니다.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97, 98%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망한 것입니다.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시에도 토지개혁을 통해서 개인농을 할 때인데 그렇게 파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면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보이지 않게 속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한에서 잘못 생각한 다락밭 문제입니다. 다락밭이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유실을 막자고 만든 것입니다. 남한자료를 보면 네발로 기어갈 정도로 경사지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15도 경사입니다. 북한에도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체농법이라고 하지만 제원은 명확히 합니다. 이것을 다시 계단처럼 깎아서 유실되지 않게 턱에는 석축을 쌓고 수평한데는 물도 흘러내려가지 않게 되고 기계화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락밭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민둥산화되었다, 무너진다고 형상했는데, 물론 그 분들이 본 형상은 옳습니다.

높은 경사에 댕기, 댕기 판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댕기밭입니다. 개인들이

화전민식으로 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해서 다락밭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동산화 되었다고 하는데 민동산의 기본원인은 화목과 목재입니다. 다락밭은 힘이 없어서 다 못하고 경사지까지 파 올라가서 돼기, 돼기 있는 것은 바로 개인농입니다.

그리고 남한이 가장 잘못 보는 것은 북한주민들은 2끼먹기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처럼 몇만명이 굶어죽었다는 소리는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삽니까? 10년전부터 저러한 소리가 나왔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주민들이 자생합니다. 우선 국가에서 보름에 한번씩 배급을 제때 못주지만 완전히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지나서 후에라도 오게 되면 다 줍니다. 그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죽을 먹는 것을 보고 와서 죽만 먹는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가지고 사회일반이라고 말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 면에서 귀순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귀순자들이 특이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호문제도 김일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가면 표어가 반대로 이밥에 고기국 먹는 운동 한다고 하지 두끼 먹는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 돼기밭을 왜 하느냐? 국가가 개인주의 온상이라고 절대로 막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가 식량을 제때 못주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통제사회기 때문에 막으면 배급 주시오 하면 말단간부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융화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60평만 하게 되면 식량이 200kg정도 생산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식량이 170-180kg이고 근로자가 217kg 정도 됩니다. 돼기를 하면 3일이면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30평이면 한세대가 배급량에다가 보태먹으면 배 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입니다. 1년을 국가에 나가서 밤낮 일해서 200kg받지만 3일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흐름인데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국가가 배급을 제때 못준데서 나온 것입니다.

도시주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농민들이 돼기밭을 해서 식량이 남으면 도시사

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개인장사로 흐릅니다. 북한사회가 걸으려는 집단주의적 사회같지만 밑으로는 개혁·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먹고 살자고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쌀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쌀을 명분상 보내기는 보내되 많이 보내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개인농, 개인돼기밭, 개인장사로 국가가 못해주기 때문에 나가는데 쌀을 주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쌀을 주면서 하지 마라 하면 못합니다. 여기서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15만톤을 주었는데 이것이 북한에서는 얼마만한 양이나 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잘못 쓰고 있습니다. 군대는 7일 먹고 인민들은 10일을 먹는다고 하는데 더 먹습니다.

김일성이 말하기를 하루에 인민들이 1만톤씩 먹는다고 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하루에 1만톤씩 먹습니다. 그래서 15만톤이면 15일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쌀이라는 것은 배급을 강냉이로 주고 강냉이의 2배로 보기 때문에 30만톤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인 30만톤을 준 것입니다. 남한은 아직 쌀, 강냉이의 개념, 가치도 모릅니다. 안타까워서 안기부에 얘기해서 통일원, 청와대, 장관도 만나보자고 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쌀을 보름에 한번씩 배급해 주니까 국가에서 줄 것은 남한에서 주었기 때문에 국가 쌀은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에 쓰던 강냉이를 바꾸든 시비를 못 거는 것입니다. 쌀이 북한에 들어갈때부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명분도 있기 때문에 주되 북한통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말아라 라고 안타깝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급을 줄 때 80%이상이 강냉이이기 때문에 15만톤이 아니라 30만톤을 지원한 것입니다.

북한의 경지면적이 남한보다 더 많습니다. 자급자족도 90% 이상입니다. 70년대는 수출까지 했습니다. 공업이 약해서 사오지를 못하지 남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아무리 못해도 강냉이 밥 먹는 수준은 됩니다. 절대 굶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한이 발전한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 민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북 주민들 산업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못주니까 장사합니다. 60평만 하면 1년분이 나오는데 왜 못삽니까? 이것을 하니까 국가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기어코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쌀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남한에 손을 내미느냐 하면 폐쇄사회 생리를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주고서도 김정일 자신이 준다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방송금지, 통행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온건데 이것을 왜 간파를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시히 신문기자를 만났는데 아시히 신문이 간파를 잘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특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정치가들은 원칙을 잘 지킵니다. 김용순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동포애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동포를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조덕송 위원 : 북한에서 새땅찾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 7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새땅찾기라는 것이 다락밭 만들기가 아닙니까?

이민복 : 70년대에 자연개조 5대방침에 나왔고 그 방침 안에 다락밭이 나오니다. 새땅찾기운동은 80년대 초반에 나온 것입니다. 서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새땅찾기 의미 안에는 다락밭뿐만 아니라 다락밭이라는 경사지를 개조한다는 의미, 빈공지 개발, 있는 땅도 흘러내리니까 경사지게 턱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땅찾기는 다락밭보다 의미가 큼니다.

조덕송 위원 : 그러면 다락밭은 개인적인 소유로...

이민복 : 개인 돼기밭은 불법입니다.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나가서 돼기를 한 것이 개인돼기밭입니다. 다락밭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에 없는 개인재산입니다. 그것으로 삽니다. 그것이 무서운 저력입니다.

송응섭 위원 : 개성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산에 밭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락밭입니까, 돼기밭입니까?

이민복 : 작물이 있습니까?

송응섭 위원 : 나무도 심지 않고...

이민복 : 경사가 명확한데 작물이 없다는 것은 작물이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전국의 산이 민등산화 된 것은 사실이고 산천이 망했습니다.

구종서 위원 : 남한에서는 북한의 연간 쌀소요량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루에 얼마를 먹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루에 1만톤, 연 4백만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루에 2만톤, 연 소요량은 763만톤인데, 두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는 것은 뻥하고 북한의 인구도 뻥한데, 이것을 잡곡으로 환산해서 한 것인지, 필요한 절대량의 수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이민복 : 이 자리에서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배급량을 180kg를 기준으로 80%는 강냉이고 20%가 쌀입니다. 이것을 2천만으로 나누면 360만톤입니다. 김일성의 말이 맞습니다.

구종서 위원 : 그것으로 충분한 양입니까?

이민복 : 물론 제대로 공급을 못하지만 이것이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구종서 위원 : 소요량이면 주는 양은 상관없습니다. 절대 소요량이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이 얼마인데 연 수령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민복 : 360만톤중 군사용 비축미, 축산의 종자를 빼면 400-450만톤, 그 사이에는 강냉이라도 먹고, 오히려 북한주민들이 밥은 더 먹습니다. 북한은 강냉이로 한끼에 200g을 먹습니다. 남한과는 반대입니다. 남한은 날씬해야 미인인데 북한은 뚱뚱해야 미인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사를 만나서 몇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모자라는 것이 60만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또 720만톤이라고 해 났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과 남한에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1년에 360만톤이면 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축

산이 죽었습니다. 고기 먹는 것이 1년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어린이들이 계란을 먹은 날은 1년동안 기억을 합니다. 사람 먹을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돼지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축산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못먹여도 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강냉이 80만정보, 벼가 60만정보인데 못 나와도 정보당 3톤은 나옵니다. 그래서 최악으로 420만톤은 꼭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농을 해서 누구도 생각 못하는 수십만톤의 식량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종서 위원 :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대개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민복 : 그래서 귀순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도 굶는 사람도 있고 미국도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을 한 명 봤는데 고지식해서 죽었습니다. 국가만 바라보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개인농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북한이 민중산화 된 것이 화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회담차 평양에 갈 때 물으면 여러가지 다른 답변을 합니다. 제가 화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까 안내장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화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농촌에서는 연료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요.

이민복 : 북한의 살림법은 썩습니다. 산림 간수들도 무섭습니다. 국가에서 먹는 것은 의무성이 있지만 때는 것은 의무가 없습니다. 화목체계는 노동자, 사무원의 경우에는 석탄을 공급하고 농민은 석탄도 공급하지 않고 나무를 해서 때라는 것입니다. 별방지방에서 나무하러 가기 힘든 경우는 곡집을 떼고 풀을 말려 땀니다. 그래서 별방에 있는 사람보다 산에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산림간수가 있지만 당장 추우니까 때는 것입니다. 산림간수도 자기 산이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데 매일 나쁜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 사회가 그렇게 나쁘고 나쁘고 하는 식으로 법이 물려져 있습니다. 법만 보면 그 사회처럼 강철같은 사회가 없는 것 같지만 속은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서 헤어질 처와 편지를 나누고 돈을 보냅니다.

이서항 위원 : 지금 북한에서의 식량수요량이 450만톤 정도라고 하였고 생산된 양이 모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모자르지 않으면 농업정책의 실패라는 말이 안 들릴 것인데 실패했다고 단정했습니다.

북한을 떠나시기 전의 곡물생산량과 그 당시 2-3년간의 정확한 식량소요량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복 : 솔직히 얘기하면 소요량에 대해서는 농업대에서 김일성에 의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루에 1만톤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배급주는 것하고 딱 맞습니다. 그리고 가미되는 것이 저축미와 축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총량에 대해서는 750만톤, 800만톤이라고 공개한 적이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업대에서 공개를 안해서 그렇지 거짓말 했다고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것중에 70-80%가 맞고 70년대에는 80-90%가 확률적으로 맞았습니다. 이제 말한 것 800만톤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절반으로 떨어져서 400만톤밖에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국가에서 김일성이나 정부는 정확히 저축미 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알고 있으면서 또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의 개인폐기받은 통계를 못잡으니까 김일성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450만톤이라는 것은 최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만큼은 합니다. 이것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에서 식량정책에 있어서 군량미, 예비물자는 곧 국가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서 굶어죽기 전까지 유지합니다. 저축미는 꼭 보충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김일성이 회의에서 강원도에서는 왜 농사가 안되느냐 하니까 강원도 도당책임비서가 우리는 기후도 나쁘다 하니까 기후탓 하지 말고 혁명주의로 해라 하니까 또다른 원이 있지만 말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얘기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인민군대가 너무 많아서 인민군대가 도둑질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오진우가 인민군을 욕하면 자기 욕하는 것이니까 저놈 나쁜 새끼라고 하면서 군량미를 다친 놈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람) 피해가 심합니다. 심한 경우는 10-20%까지 당합니다. 사실을 얘기했지만 김일성은 오진우 말을 듣고 강원도 책임비서는 숙청을 당했습니다.

송한호 위원 : 북한에서 작년에 협동적 소유를 인민적 소유로 전환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환하게 되었느냐 하는 원인과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서 성공해서 식량문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생산량을 감소시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복 : 사회주의 공산권이 망한 것도 사회주의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알려져서 망한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북한은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농을 하면 현생산의 두곱은 꼭 올라갑니다. 그리고 개인돼기밭은 협동농장보다 3-4배 올라 갑니다. 사실 협동적 체계라는 것도 국가소유입니다.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전인민적 소유를 하자고 70년대부터 제기했습니다. 협동적 소유라고 해서 전인민적 소유농장들에는 사회보장비, 휴가, 노동복을 주는데 협동적 소유로 해서 너희들끼리 먹어라 해서 그것을 안줍니다. 국가 일을 똑같이 일하는데 국영농장만 주니까 우리도 국영농장을 하겠다, 수령님께 충성하겠다고 70년대부터 얘기했습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이유는 통치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어도 안할 사람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강성산 총리, 김환과학담당비서가 다 숙청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내려갔지 더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송한호 위원 :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민복 : 그렇게 되었으면 됐지, 그리고 당장 망한다고 보지는 마십시오.

송한호 위원 : 국가소유화와 협동적소유를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이민복 : 북한은 협동농장이 대부분입니다. 세 개의 시범단을 했다는데 그것은 중국식 방법이고,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의 차이는 협동적 소유는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먹어라 하는 것이고 국영농장은 한달에 한번씩 배급과 노임을 줍니다. 협동적 소유



는 1년치를 생산해서 결산분배해서 쌀을 분배받습니다.

송한호 위원 : 가령 비료, 농기계지원이 협동농장보다는 국영농장이 더 잘 되지는 않습니까?

이민복 :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협동농장인데, 국가가 필요해서 국영 농장이지 전인적 소유가 아닙니다. 남한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듯이 그러한 식입니다. 기본은 협동농장입니다. 그것을 전인적 소유로 하겠다는 것이 86년도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데 대하여'에서 명확히 내놓고 강성산 총리 등을 숙청한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 전반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 이 선생의 말씀을 듣고 쓰신 글을 보니까 본인은 북한에서 정수분자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반체제적인 인식이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층에서 이 선생처럼 자생적으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층들이 평범한 것인지, 아니면 특이한 것인지. 평범하다면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인지? 글의 내용을 보면 용기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지만 지식인이 다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91년에 떠나셨기 때문에 김일성 사망전이었으니까 그당시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이 선생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식량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폭동상태까지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뚱기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폭동까지 가지 않으면서 순응하면서 사는 정도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민복 : 북한의 지식층과 주민들의 의식계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식계층은 깨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명확히 확신까지도 합니다. 과언이지만 김정일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제가 떠나기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용기문제는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저처럼 겁쟁이가 없었습니다. 저만큼 김일성

에게 충실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에게 충실한 것이 식량문제 때문에 제기한 것을 듣지 않아서 김일성이 그렇게 미워졌습니다. 더 미워지니까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몇 번 다녀보니까 담이 커졌습니다.

지식계층이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 그리고 떠난다는 것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다니니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니까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가 제일 문제였는데 이혼하면 다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적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떠나기 2-3년전부터 법이 있었고 애는 여자의 성를 따르게 하고 잡아가지 말아라 하는 법을 이용했습니다. 떠날때 북한에서는 민족반역자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민족반역자라는 말은 듣기 싫었지만 내 조국 땅 가는데 무슨 반역자나라고 생각하니까 당장 깨어나서 주도면밀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중국에 가서 본 것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인테리들이 저보다 용기있는 사람들인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깨어 있다고 이해하시고, 더군다나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주민이 문제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식전이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전과, 통행금지, 신문을 막아놓고 밤낮 일만 시킵니다. 기계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능률도 안 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든 깨어야 됩니다. 북한사회를 들어가는 것은 정상회담은 절대 얻어질 것이 없는 것이고 뼈라밖에 없습니다. 남한이 미국 식민지라고 욕을 하는데 영어를 써서 보내서 증명을 해주는 모양이 되고 여자, 이성문제는 가장 부르조아적인데 나체사진을 보내 온 것도 있습니다. 콘돔을 보내면 고무풍선인 줄 알고 장난치고 잘 산다고 과자봉지를 보내는데 떨어지면 개가 제일 먼저 달려잡니다. 북한의 선전은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독약을 묻혔다고 하고, 잠복기 있는 세균을 묻혔다고 하고 그래도 안 믿으면 썩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글을 잘 쓰고 말한마디면 됩니다. 쌀로 보내 준 돈의 천분의 1만 저에게 주면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뼈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적 기조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화, 두번째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이 증

오심의 근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다 부서지고 죽었는데, 이것을 미국놈이 해서 남한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뼈라 넘어 온 것을 봤는데, 이상화를 파괴시키는 뼈라를 보면 김일성은 흑이 크고 살이 썩 있고 인민들은 뼈만 남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북한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비합니다. 욕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면 깨칩니다.

너희들 아버지 수령님이고 행복하게 해 주는데, 그렇다면 보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버지 별장, 비석, 사적지, 사냥터입니다. 너희는 강냉이 밥도 못먹는데 인민수령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 한디만 하면 농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배고프고 힘들때마다 그것을 보면 증오심이 나서 이상화가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만 쓰면 되는데 왜 여자 나체사진을 보냅니까?

전쟁문제도 보면 후르시초프 회고록이 있다 하는데 후르시초프는 수정주의로 제일 욕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선전이 더 멋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가 6.25전쟁에 와서 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승만과 신성목 국방장관이 해주를 아침, 평양을 점심, 신의주를 저녁에 먹겠다고 쳐들어 온 것이다 이것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떠나기전에 해명하고 떠났습니다. 복잡하게 쓰지 말고 한마디만 쓰면 됩니다.

너희 전쟁초기 참가자에게 물어봐라, 삼팔선 주민에게 물어봐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20만이 쳐들어 왔다고 하는데 20만이 전부 남조선 편입니다. 유력한 증인이 됩니다. 물론 물어보면 말을 안합니다. 저는 팔로군 출신에게 영웅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물어보니까 동부전선에서 쳐 들어갔는데 앞에 백골부대가 있었는데 대포를 쏘고 들어가 보니까 팬티차림에 뛰어가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남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면 북한사회의 두가지 기조가 꺾여 나갑니다. 초보적인 문구도 연구하지 않고 보냅니다.

김정일에 대한 개념문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한덩어리로 이상화 했지만 김일성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앞에 내놓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북한에 정치범이 20만명이 있습니다. 그 20만명을 왜 잡아 가겠습니까? 폐쇄사

회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김일성이 정치를 묘하게 합니다. 앞에서는 온화하고 뒤에서는 칠 것은 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정치범들은 재판없이 끌려 갑니다. 그것이 20만명입니다. 반항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증거입니다. 작년에 많이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항입니다. 남한에 오면 간첩이나 잡은 것처럼 3일동안 잠도 안 재우면서 당신은 남조선에서 벽돌하나 쌓은 것이 있느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북한에 가면 군중대회 열고 대학보내고 돈가방 크게 주고 씩니다. 정치차원에서 북한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한 개념에서 반항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간혹 화형시켰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클럽이 생깁니다.

식량문제로 우리처럼 시위가 없느냐. 북한은 말한마디면 잡아 갑니다. 한국에서 돌 만개를 던진 것보다는 말한마디가 더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로 20만명의 정치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권처럼 시위를 하면 좋겠는데 그 여건에서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아직 군대가 의식화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그 정도는 안되지만, 배급소에서는 배급달라고 소리들을 지르고 간부가 지나가면 돌맹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항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처럼 비하하지도 말고 그이상으로 환상으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조덕송 위원 : 텃밭은 어떻습니까?

이민복 : 텃밭에 대한 개념은 한 세대에 30-40평씩 채소 심어 먹으라고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나 도시 사람들은 주지 않았습니니다. 이것 외에 하는 것은 꽤기밭입니다.

기획부장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8. 제23차 회의

### < 목 차 >

#### 1. 일반사항

#### 2. 회 의 록

- \* 주제 : ① 북한의 「10. 10」 동향 검토
- ② 북경 실험상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총체적 평가
- ③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기  
조 재정립문제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10. 17(화) 15:00~17:3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 다. 주 제 : ○ 북한의 『10.10』 동향 검토  
○ 북경 쌀협상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총체적 평가  
○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기조 재정립문제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2명) : 정홍진,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송응섭, 이영호, 이서향,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구종서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비상임자문위원회 제2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50주년 동향 검토와 북경 쌀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오늘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모임에서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북향TV동향을 시청하신후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 지난 1년동안의 남북관계, 대북정책, 남북대화 등 총체적인 남북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정책 기조, 정책추진 방향 내지는 남북대화 추진방향 등 새해의 남북문제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북경회담 또는 쌀지원이 특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로 쌀협상과 그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 내지는 남북문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총체적인 평가 가운데서의 문제점, 유의사항, 개선사항 등 향후 대북정책 추진기조를 재정립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우선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다음에 북한의 선택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북한의 선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정책추진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이 당위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천적인 측면, 실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 쌀지원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데에 주로 반성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를 판단하고 북한의 선택을 예측하고 우리의 정책추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이라는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혹 우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북접근을 하는 노력을 강하게 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을 혼동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비상임자문위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얘기가 필요없지만 이러한 일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있는 사람들이 체계를 세워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회담사무국에 상주를 하면서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토론은 어렵겠지만 여러번에 걸쳐서 토론을 계속함으로써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볍게 1년을 회고한다기 보다는 밀도있게 지난 한해에 있었던 일들을 반성하고 그 반성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내년에 새로운 정책추진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장 : 국장님께서 오늘 안건에 대한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금년도 남북관계의 문제점과 유의사항과 내년도에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 모임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항 위원 : 오늘 회의에 준비한 것이 2가지입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평화공존, 남북대화 지속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화체제 구축이 내년도도 지속된다고 할 때 이 문제를 자세히 정의해서

과연 평화체제 구축에 따르는 세부적인 상황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제하에서 여러가지 전략, 우리의 중장기적인 정책이 있었고 그것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봉쇄적인 측면입니다. 두번째는 조건부 연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지원,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접촉을 증진 또는 북한이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한다, 민간기구간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는 무조건적인 개입, 무조건적인 지원 소위 '햇볕론' 전략입니다. 네번째는 관망정책입니다. 즉 평화체제 구축을 하되 북한이 변화할 기색이 없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 된다는 4가지 중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중에 봉쇄와 무조건적인 지원 계획은 거의 우리가 취하지 않았고 우리의 정책은 조건부 연계, 관망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정립해서 주변국이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정의해서 이것에 따라서 조건부 연계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유지해온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든지 하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확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대북정책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목표아래 있기 때문에 큰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남북대화를 단절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동안 크게 비판을 받을 정도의 일관성은 상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목표아래 조건부연계 등을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 대북정책 기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내지 김정일 권력의 공고화 여부입니다. 최근 중앙일보가 콜비 전 미CIA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장악력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김정일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 김정일의 통치기반이 공고화되지 않고 특히 군부에 대한 장악을 완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께서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카터 대통령에게 수해 직후에 북한에서 온 편지에 'Argument' 라는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 말은 북한 내부에서 'Argument'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강온파의 대립이 있지 않느냐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셀릭 해리슨이 김영남을 만났을 때 미군주둔을 지지한 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미군주둔 지지의 배경에는 군부에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북한 군부의 도발을 억제했던 것이 한-미간의 연합 억지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해서 군부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배경이었다는 것이 설득력있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지도급 인사가 북경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을 때 군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책이다 하는 것을 발설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도적이었던 우발적으로 나왔던간에 북한에서 군부는 아직도 김정일이 장악하지 못한 대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김정일이 군부에 대해서 억제력, 장악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도발이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개입·지원정책, 조건부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그만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전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내년도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영호 위원 : 저는 총체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보다는 북경 쌀회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게 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책목표와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잘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정책목표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남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방법으로 협상하고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단순하게 굶주린 북한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면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주었다는 표시가 있는 협상을 했을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목표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정책을 추진한 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거나 판단한 흔적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든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사회가 당면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때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의 효과라든가는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정책수립과정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 졸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정책을 협상하는데 있어서도 협상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협상하다가 보니까 기존의 남북간에 합의된 관행을 무시해 버리고 기본합의서 합의까지도 무시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쌀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보다 못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새로운 돌발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정책발굴이나 대응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측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배제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돌발적으로 비선(秘線) 등 다른 것을 들고 나가서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흐려놓을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사태를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수습하라고 한다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는 수습이 안됩니다.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정책을 수립하고 차분히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남북문제만큼은 정부에서 비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휘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원이 모든 남북문제를 종합,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장기적인 전략 또는 정책을 수립해서 차분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나가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정신자세도 중요하고 협상테크닉도 중요합니다. 1차회담의 기록이 없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북간에 합의된 것을 무시하고 깃발과 같은 새로운 합의를 했다는 자체는 협상테크닉부터 정신자세까지 모든 것이 다 해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선가 바로잡고 이끌어 나갈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추진과정에서 흐려 놓는 일이 생기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바로잡고 나서 우리의 정책기조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변수는 큰 흐름에서 대폭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미-북관계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이 조금의 상황변수는 되더라도 이를 기회로 해서 북한의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크게 정책을 변경시켜야 할, 남북대화에 매달려서 아쉬워야 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대범한 자세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응섭 위원 :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또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같이 공감했고, 또 국내의 입장으로 볼 때도 평화협정은 어떻게, 당사자 문제는 남북이다 라는 등등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쌀을 지원하면서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이해했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북한의 입장을 보면 개혁·개방을 못하는 것은 체체붕괴의 위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무시 못할 강한 남한의 존재 때문에 개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을 지켜 봐야 되겠다. 지금 북한은 홍수, 식량난, 에너지난, 체체불안 등 여러가지가 얽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나간다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남북대화를 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할 여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한·미관계입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붙들고 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미국을 설득하고 반대해야 되는 문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의 과거 핵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 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수로 지원을 못한다는 의지를 미국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연락사무소 문제도 서두르면 안된다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수시로 미국에게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일관계입니다. 북한에서 3차 쌀회담을 북한에서 제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변화하리라는 기대가 곤란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한·미, 한·일관계를 깊이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에 관해서 해리슨이 평양에 갔다와서 미군주둔도 인정한다, 군사공동위 비슷하게 가동시키면 된다고 한마디 하니까 온통 신경을 쓰고 했는데, 북한에 갔다온 미국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해리슨의 말도 김용순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와서 하는 소리는 하나도 믿을 것이 못되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요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합의서 자체가 평화협정입니다. 이대로만 되면 군사공동위를 통해서 정전위 대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원칙, 당사자원칙 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려면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합의서가 잘 되도록 고위정책 결정자, 대통령께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의 말씀입니다만 정전위 수석대표가 바뀌었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수석대표간의 접촉만 없을 뿐 수석대표 아래의 공동일직장교회의, 참모장교회의, 비서장회의가 다 운영되고 있고 그 운용요원들을 수석대표가 지침을 주어서 3가지 접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전달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폴란드 대표단은 남한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남한에 거주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곽희정 위원 : 남북문제는 끝없는 과제이고 묘안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정책을 입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했을 때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시한을 두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를 대통령, 고위층이 천명을 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우리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관점을 갖도록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전쟁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북한의 의도에 따라간 감이 있습니다만 과연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전쟁도발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안하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이 용이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전쟁도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해서 비핵화선언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서 무효화하고 핵 재처리시설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강경한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노력을 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또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이러한 문제에 계속 부딪칠텐데 주도권을 못 잡고 끌려 다녀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이 급속하게 북한과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통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것을 해도 크게 국민으로부터 또는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예를 들어서 경수로 지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북한의 태도가 적절지 못하다든지 하는 시점을 잡아서 우리의 태도를 확고히 해 보는,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잡는 외교적인 노력 또는 국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반도문제를 우리의 의도대로 끌고 가지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가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런 것을 다루는 종합적인 팀을 만들든지 해서 뭔가 뒤집어 엮는 시도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문헌 위원 :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 평가에 따라서 북한의 정책방향과 대남태도도 어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8일자 노동신문 정론 '수령의 전사'를 읽어 보니까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들 체제에 위협을 주는 것 중 첫째는 수령과 당의 권위가 무너지면 망한다. 역사적으로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된 것은 수령이 죽자마자 수령의 권위를 잃었고 당이 붕괴되어서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체제위기라는 것을 비치고 있고, 그래서 수령을 목숨으로 받들자, 총알이 되고 폭탄이 되어서 막아야 되겠다는 강도 높은 군사용어로 썼습니다.

두번째는 자유화바람, 평화의 바람이 모든 공산주의 국가를 망하게 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령의 전사'의 핵심은 위기위식에 몰려서 불안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북한 정세를 평가하는데 겉으로



방송이나 신문논조를 보고 하지 말고 북한의 지도층이 무엇을 불안해 하고 있고 얼마만큼 불안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노동당 창건 50주년 기념 퍼레이드를 보면 노동당 50주년 퍼레이드라기 보다는 인민군의 날 행사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북한의 체제가 광신적 종교집단의 성격과 호전적 군사집단의 성격으로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를 해 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배품의 정치',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주어서 적당히 속여서 정권을 잡았는데 '배품'의 시대에서 ' 지배'의 시대로 들어가는는 인민들을 인질로 잡아서 겁을 주는 것이 오늘 퍼레이드에도 나왔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말기에 가서 어떤 체제가 무너질 때는 광신적 종교집단과 호전적 군사집단으로 바뀌어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자기체제, 자기의 존재, 능력에 대해서 과대·확대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1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보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안중에도 없고 사실상 폐기해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것도 실천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는 완전히 폐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평가할 때 앞으로 우리의 정책을 3가지로 세웠으면 합니다.

우선 이상우 박사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 체제의 건강을 튼튼히 다지면서 통일문제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문제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흡수하는 방식 이외에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체제의 건강을 다지는데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은 우리 체제가 가장 허약할 때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가 있는데 거의 무정부상태입니다. 북한이 광신적 종교집단화되고 호전적 군사집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보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가 허약할수록 예측불허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있는 3년은 우리 체제의 건강을 지키는데 시간을 쏟고, 결국 통일은 흡수통일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광신적 종교집단, 호전적 군사집단화되어 가는 본성이 드러나는 북한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협상,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차대전 후에 미국이 가장 후회한 것이 전후처리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소련을 너무 과대평가한데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한국전쟁 때 미국이 후회하는 것은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모택동의 사생활을 보면 6.25 전쟁때 미군이 한반도에 개입하고 유엔군이 개입했을 때 모택동이 죽을만큼 고민한 것이 나타납니다. 또 서독이 통일과정에서 갈등을 느낀 것도 동독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되지만 북한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북한을 과대평가하건 과소평가하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자신의 존재가 허약할수록 자신의 존재를 과장하는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이 자기들의 존재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불바다, NPT탈퇴, 당창간 50주년 퍼레이드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 동포들을 겁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을 정확하게 알고 협상, 교류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데 힘을 쏟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정책의 속도와 양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책변화와 사회개방은 북한체제에서 보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책의 변화와 개방을 해도 위험하고 하지 않아도 체제가 위기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과도기가 오래 갈 것입니다. 7개년 계획이 실패하면 수습하기 위해서 과도기를 2-3년을 잡는데 하물며 수령이 죽은 후에 체제가 극도로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책을 확고히 세울만한 시기는 상당한 완충기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정책변화와 사회개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사회개방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판단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1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기본합의서도 긍정적으로 실천할 길이 열린다 라는 식처럼 우리도 북한처럼 물고 늘어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끝까지 미국과 평화협정을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는 왜 물고 늘어질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기본합의서 실천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북한의 아픈 데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기본합의서를 실천하자, 그것이 모든 출발점이고 열쇠다 라는 식으로 한가지를 물고 늘어지는 정책을 쓰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송한호 위원 :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기 보다는 우선 북한이 긍정적, 유화적으로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체제유지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당면과제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대화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하면 오히려 우리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게끔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고 관계개선을 통해서 체제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남북대화는 이와 같은 대미관계 개선 노력에 제동을 걸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일방적으로 제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요구조건을 제시해서 북한측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철마다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범민족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쟁을 선동하는 범민족대회의 주장을 중지하라든지, 대남 비방·중상을 중지하라든지,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라든지 등의 대북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유엔총회를 전후해서 북한의 인권문제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와같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제시할 때는 그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느냐,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단 고려하고 제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가치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하건 안 하건간에 당위성으로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사실상 어떠한 면에서는 이상화 작업, 폐쇄정책과 아울러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은 인권개선에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연히 북한의 내정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남북간에 긴장을 더욱더 조성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론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정부 당국자가 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만약 인권개선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최소한도 대북정책은 대북공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맞아 떨어지지, 현재 대북공세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된다면 불필요한 자극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상필 위원 : 우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련되기 때문에 3차 쌀회담의 실제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3차회담과 관계되어서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셨는지?

두번째는 김정일체제가 있는데 만약에 군부가 쿠데타를 해서 김정일체제가 아닌 군부체제가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며,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번째 북한측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 이상 3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북문제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대전제 밑에 이런 점을 느낍니다.

정권이 바뀌면 구정권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정권은 없을 것이고,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더 잘할 수 없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새정권이 2년 반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후반기에서는 다른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 반후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권은 전문가 의견을 듣기 보다는 새로운 통일관, 통일정책, 남북문제를 가지고 상당기간동안 시행하다가 안되면 또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문제가 지금처럼 현상유지가 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5년마다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남북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남북문제는 상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 남북문제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부터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통일문제는 남북문제의 통일보다도 내부적인 통일문제를 먼저 다루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이 많이 북한에 가야 합니다. 전경련의 남북경협협의회가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놔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실리적으로 하겠다, 두번째는 그렇게 해야 북한이 개방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개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좋은 뜻이 두가지 있습니다.

남북경협문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또 'Case by Case'로 하는 것보다는 선을 그려놓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하면 그들이 이해할까, 그렇지 않고 'Case by Case'로 가라, 가지 말라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더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율적으로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민간경협을 하느냐 하는 것도 통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업계와 연계해서 정책제시를 해 주면 기업인들도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봉식 위원 : 95년도에 들어와서 과거에 북한의 행태와 다른 것이 2가지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걸외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려워져서 구걸외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외유화적인 제스처로서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군비는 증강했다는 것입니다. 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컨대 북한 내부에 강온대립이 있을 때 강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온은 개방·자유를 배경으로 할 때, 만일 강온이 대립되어서 온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판사판인데, 이것이 걱정입니다.

내년도 전망을 하면 지금 북한의 현재상황으로서는 어떤 노선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남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기대하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해도 북한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보는 정확히 입수하되 관망자세로 되새겨 보자는 것하고, 안보면에서는 항상 군사적인 도발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나? 물론 통일원의 과제는 아닙니다만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외교적인 접근이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과의 평화체제는 미국도 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중국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경로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로서 연구해야 할 것은 만일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체제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들의 행태 전망과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중국, 미국, 일본에게 전달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내년도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정보수집에 열중하고, 두번째는 군사도발에 대해서 대처하고, 세번째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들의 일방적인 추진목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개방과 폐쇄, 그들의 강온대립에 대해서는 온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인지를 세밀하게 연구해 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덕송 위원 : 북한의 의도나 선택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존재양식 내지 태도를 좌우될 수도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 대해서 일단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문민정부 수립이후 너무 무원칙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민족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박수를 쳤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잡음이 많았고, 쌀지원문제만 하더라도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게 교섭을 한 것이고 코트라와 삼천리총회사 간에 북경에서 비선을 통해서 순발력을 발휘했다고 표현을 해 보는데, 대북정책에서 순발력은 필요없습니다.

기본노선을 정했으면 적어도 통일문제에 관한 한 전권을 주어야 됩니다. 통일정책은 정권을 초월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노선이 확고하게 서야 되는데 문민정부이후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4월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이어지는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4월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의 상황이 된다고 할 때, 북한이 우리에게 대한 여러가지 선택방법이 다양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법학자들이 5.18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놓고 하는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것도 걱정해 봅니다. 내년에는 4월 총선, 대선, 5.18 등 우리 내부가 건강해질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내년에는 뭔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통일봉남(通

日封南)', 미국과 관계개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쌀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우리의 어깨너머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한반도 통일반대라는 것은 쌀문제를 빼더라도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마저도 최근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통미봉남, 통일봉남으로 내년의 우리의 시끄러운 내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여기에 정책의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환 위원 : 요즘 북한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일성 사망후에 김정일은 상징적으로 김일성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을 떠 받드는 실질적인 권력 핵심인 당과 군 사이에 그동안 다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도 군이 당을 누르고 있거나 완전히 눌렀다 하는 표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느냐. 결국 김정일은 군을 업느냐, 당을 업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군이 김정일을 업고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당총비서라는 직함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총비서라는 직함을 가지게 되면 북한의 체제로 봐서 당의 명령에 의해서 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총비서를 못가진 상황에서 군이 김정일을 업고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당분간 군이 대남관계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당은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해 보이는 듯 했지만 군은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데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경색된 입장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이 경색된 입장을 표시하고 개방을 피하려고 한다고 보면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존에 위협이 따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과 군 사이에는 다소간의 토론이 있을 것이고, 군 내부에서도 젊은세대와 구세대 사이의 토론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최소한의 타협이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당 중심, 정무원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나진·선봉지구의 개방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해 봐라 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김용순이 쌀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도 군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는 의도가 포함된 말솜씨였다. 군에서 그러한 것을 받고 그랬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주는 것을 안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대내적으로 군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분간 군이 실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군이 실권을 행사하는 것 보다는 당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라면 군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미끼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군의 입장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은 미국에 대한 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외교관계를 조정하는데 인권이라는 대내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맺자고 나설때 북한의 인권상황이 그러한데 그러한 인권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명분있는 대미국 발언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은 되지 않을 일이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도가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인권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김정일이 군을 장악했다 못했다 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저는 군이 김정일을 업었느냐, 당이 업었느냐. 이미 김정일이 상징적으로는 올라가 있으니 어느 쪽에서 업든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김정일은 허수아비이고 군이나 당간부들의 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군부내에 알력이 표면화되어서 정권에 이상이 오든지 하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종서 위원 :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집권세력의 당면과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일어난 체제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두

번째는 김일성의 권력을 어떻게 부작용없이 승계하느냐. 세번째는 심각한 경제난의 타결. 네번째는 국제적인 고립에서의 탈피입니다.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체제 유지는 어느 정도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만 내부에서 무엇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승계도 쉽게는 되지 않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정일까지 승계가 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김정일의 리더십이 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김정일이 무엇을 하려면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난 타결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국제고립을 탈피하는 것도 미국과의 핵협상으로 인해서 기미는 있지만 아직도 미결상태입니다. 국제적인 고립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체제가 상당히 약화되었고 또 핵으로 인한 국제적인 긴장 속에서 북한이 느끼는 국제적인 고립이라는 것은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은 해결이 안되었는데 왜 안되었겠는가?

첫째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개방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순성이 상호 대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하고도 경쟁적인 세력으로서의 남한의 존재가 북한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쉽게 전환할 수 있는데 북한이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지 않느냐. 북한 사회에서 강온파가 있다 없다 하지만 강온파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정치적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당이나, 군이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엇혀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고안해 낸 것이 최근에 표출된 행동입니다. 간단히 보면 한국에 대해서 우회적인 방식을 쓰고 한국은 정공법을 썼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 일본과 접촉하려고 합니다. 개방은 하되 부분적으로 하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정공법을 썼습니다. 바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고 하기 위해서 당근책을 썼고, 당근책을 쓰다 보니 쌀을 15만톤까지 주었습니다. 북한은 쌀을 구걸해서 얻어냈는데 우리는 대

화를 추구했지만 얻어내지 못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정책의 차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김대통령의 발언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전술 내지 전략의 수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근 대신 채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인권문제는 인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성 우월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북한의 지도세력과 대중을 분리시키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서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은 리더십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대남관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남방송, 10.10 행사 등을 보면 북한은 아직도 강경파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온건파와 세력균형 내지 역전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있었을 때 자신감이 있어서 정상회담도 해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 핵문제를 빙자해서 유엔을 동원해서 국제적인 제재압력을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김대통령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동안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보다도 미국, 일본에 대한 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확보된 국제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해야 되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인권압력을 넣고 대만카드를 써서 이등휘를 불러들이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경제력을 누르려고 엔고정책을 쓰고, 한국도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수립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강하니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미외교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뛰면 일본도 뛰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보다도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외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북한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고 북한시장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고 통일후

에도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쓸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이 문제는 금년말까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부장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9. 제24차 회의

— < 목 차 >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95년도 남북관계 총체적 평가 및 향후 대  
북정책 추진기조 재정립문제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11. 21(화) 14:00 ~ 16:2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95년도 남북관계 총체적 평가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기조 재정립  
문제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4명) : 정홍진, 이병호, 송한호, 곽희정, 송응섭, 이영호,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조덕송, 김동환,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국장 : 9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비상임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것은 96년도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대북정책의 선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연말에 95년을 예측했었는데, 95년은 광복 5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정치공세가 남북관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차원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제로 무엇을 할 것이냐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95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북한의 수재가 발생하여 우리의 쌀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94년도에 예측했던 전망과는 다른 상황으로 95년의 남북관계가 진행되었다고 회고됩니다.

96년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96년에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돌발적인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에 가깝게 예측이 되어야만 우리의 시나리오도 개발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어려운 문제들입니다만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간략히 의견의 핵심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사·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접근이 어려울 것 같고, 사회·경제분야에서부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공작은 우리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 우 위원 : 사무국에서 제시한 전망에 동의하면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년부터는 경제난 문제 때문에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난 그 자체가 정권의 안정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제난의 심화로 북한이 속으로 끓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김정일이 공식승계를 하지 않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경제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 승계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 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최고사령관이라는 타이틀을 씌으로써 군부를 장악하는 효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군부내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들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정치적인 불안이 가중되는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북대화는 김정일의 상태가 저러한 한 기대하기는 어렵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문제에서 사안별 활용보다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대화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4강을 포함한 국제회의 등 무게있는 회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종서 위원 : 북한이 당면한 어려운 점은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리더쉽 내지 국가 리더쉽이 취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받았지만 확고하지 못하고 더구나 김일성의 권력에 비하면 취약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식승계를 못하고 있는 것도 리더쉽이 확립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외교적 고립문제는 미·북협상이 성공된 이후 이 문제는 어찌면 풀릴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일본이 대북수교협상 3원칙을 표명한 것을 보면 일·북 관계개선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클

런턴 행정부에 의해서 적극화되었던 대북접근도 지난 선거에서 보수파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약화된 듯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고립을 타파함으로써 북한 내부분제를 개선하려는 것도 내년에는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난에 의한 내부적인 불만과 민심의 동요는 더욱 심화되어서 표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외교자세는 낮아지면서 경제적인 구원을 위한 노력은 적극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조직적인 반체제 내지 김정일에 대한 도전은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문제가 심각화되면 내부정책이나 노선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강온파가 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부분제가 복잡해지면 지도층의 분열은 항상 옵니다. 오늘날 북한이 내부적으로 단속되어 있고 외부와 벽을 쌓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부터의 도전이나 외부간섭에 의해서 권력이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동요에 의해서 약화내지는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조짐이 나타날 내부적인 조건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심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동환 위원 : 북한이 당면한 문제는 정권을 안정시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남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권안정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대남정책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권안정을 위해서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개방정책을 써야할텐데 개방의 방법과 범위,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대단한 논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는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논쟁하는 과정에서 논쟁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간격은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고려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어떤 『접촉』을 시도해서 북한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의 간격이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하는 해이고, 그리고 경수로협상에서 북한이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기간에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더 큰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하는 마당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비중있는 문제로 제기가 된다고 볼 때 미·북관계에서 뜻밖의 중대한 전기가 오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견해가 여러가지로 갈릴 수 있다고 봐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북한정권에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년 총선거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행동을 취하리라고 보입시다만 그것은 정권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범위를 크게 넘지는 못하고 적극적인 대남 사업을 전개할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덕승 위원 :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적 변동 그리고 대남정책을 전망할 때 먼저 우리의 국내사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비자금 혼란정국이 내년 4월 총선으로 연결되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으로 들어가는 정치상황입니다. 최근에 남파간첩이 신분을 밝히고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국내혼란과 일부 의식의 혼미상태가 그러한 구석까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국내문제부터 먼저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대할 실질이 없는 강공정책으로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내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부터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대남정책을 유도하고 북한을 개방·개혁쪽으로 이끌어 나오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기조위에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는 전략방향입니다. 이것을 거론하게 된 것은 최근 강택민의 방한은 북한에게 있어

서는 건국이후 최대의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강택민의 방한으로 다져진 한·중관계를 활용해서 중국을 매개로 한 대북 개방정책 추진을 시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최근 부산과 나진·선봉간의 정기선박운행 개통 기념식을 11월 10일 북한에서 열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물류편의를 위한 개설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간에 직접 운항항로가 개설되었다는 것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정상적인 통로입니다. 또 북한은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문제는 사안별 허용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물적·인적교류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 마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KEDO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부지선정, 부지정지작업, 건설·토목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내년말쯤 점차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육로 내지는 해로 등 한반도내에서 인적·물적 반출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밀고 나가면 우리 내부의 정세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언제까지나 국가원수를 공식으로 둘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군부 내부에 있어서의 세력각축이나 강온파간의 다툼 등 여러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 7월 8일에는 김일성 사망 2년이 되는 것을 전후해서까지는 김정일이 일단 특권층과의 이해관계가 결합되기 때문에 상층부의 결속을 다진 가운데 권력승계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미·중·러·일·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강대국의 협력을 얻느냐 하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신봉식 위원 : 내년도 우리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단한 정치적인 변혁기가 될 것입니다. 총선, 대선 등과 관련해서 정권구조의 개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적인 혼란이 예견되는 시점입니다. 두번

제는 내년도 우리의 경제는 우울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수출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자사업, 반도체산업밖에 없습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제지 등 모든 분야가 내년도에는 상당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울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우울증으로 해서 대외경계심이 이완될 것이 우려됩니다.

한편 북한은 갈등구조가 있으나 항상 강경파가 우세한 편이고, 강경파가 득세하면 경직화될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사정도 호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대외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개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경파가 주도하는 대남도발이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군부에서는 군사력 전진배치 등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격변기의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술전략이 외부지향적인 정책 노선이 맞아 떨어져서 조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끔 위압적인 대남강경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요즘 안보문제에 대해 너무나 경각심이 약화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소 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낀대로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홍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통일원장관,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불안감까지 줄 필요는 없지만 경각심을 높이는 대답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내부를 다지는 긴장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허장성세하는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대북경고를 할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보수화를 선택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가능성이 보이고, 일본도 그러한 것 같고, 중국도 한국에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충동적인 도발을 견제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차상필 위원 : 11월 20일자 타임지에 북한 정세에 대해서 보도한 것이 있습니

다. 요지는 북한은 최악의 경제상태이다.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부 강경파가 남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120만 인민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고 포대도 정비하였다. 군 비축량이 수해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군사행동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겠느냐.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도 옮겨올이 염려된다는 것이 타임지의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국 대외경제무역협력부 『국제상보』라는 관보에 북한 경제가 최악이다, 두만강개발계획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당국이 북한경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또 최근에 강택민 국가주석이 한국에 온 것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잘하자고 하고 돌아갔는데, 중국도 남한과 경제에 대해서 깊은 협력을 가지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은 그렇게 해서 북한의 개방화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양면도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은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식량 170만톤을 비축하고 있고 에너지도 상당량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되고, 두번째는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길로 개방화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세번째는 붕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년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미·소간의 냉전종식도 자유체제의 우월함과 군사력의 우위가 공산체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묵인하고 경제계, 종교계, 일반인들이 서로 들어감으로 해서 개방화와 북한 체제붕괴에 도움이 되는가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기환 위원 : 내년이야말로 북한은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성이 오는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으로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치의 정통성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자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문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만 해결했다라도 김정일이 어느 정도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는데 내년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김정일로서는 정통성을 더 못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 원로급이 장악해서 끌고 가는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내년쯤에는 원로급에 대한 차세대들의 도전이 군에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로급이 있으면 정책변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세대가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집단이 들어서게 되면 외교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북관계, 일·북관계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집단이든 구집단이든 남한과는 관계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활발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영호 위원 : 군사부문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예측할만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해 보면 결국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을 국내단결과 독재체제 유지에 이용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긴장유지가 김정일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우리도 내년 전반기에는 정치적인 일정이 바빠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대해서 사실상 신경쓸만한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금 신경쓸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김정일체제가 실질적인 정책입안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까지 축적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은 서로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부터는 북한도 어떤 형태든간에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김정일 정권이 자기 체제를 구축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년

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군사부문에서는 크게 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선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요라는 것이 정전협정 대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면 긴장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화 소요가 생길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군사부문의 대화보다는 정치·경제 부문의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대외적으로 손을 내민 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외국에 지원요청을 한다는 자체는 향후 경제난 극복, 남북대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로 직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경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가능한 것은 KEDO 문제가 어느 정도 되고 등소평이 내년 하반기에는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중국도 급속하게 변화할 경우에 북한의 입지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대화보다는 미국, 남·북한, 중국 등이 참여하는 3자회담, 5자회담에 마지 못해서라도 참여한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부문에 있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대체 이외에는 새로운 소재가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화소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인 대화, 경제협상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곽희정 위원 : 북한은 과거에 중·소 갈등 속에서 실리를 추구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과의 새로운 외교적인 무대가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북한은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실리를 얻기 위한 대미·일 접근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미국의 정치판도에 매우 민감한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외교적인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치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실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미, 한·일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략도 쓸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대통령께서 일본 정부에 확고한 다짐을 받은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선 일본,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96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문제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북한이 내년에도 우리의 혼란을 조장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제안을 해서 받아들일 때 국민과 정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어려운 국면도 잘 넘겨왔습니다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원칙적인 것을 지키고 또 정부가 한 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대화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경협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차원에서 많은 상황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기업,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이 올지로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 속에서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문제도 국내문제와 민감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더라도 적십자 등 인도적인 기관에서 적절하게 명분이 있을 때 수시로 제안을 해서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안보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혀 무감각합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전쟁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쟁발발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핵문제, 경수로문제, 휴전협정문제, 북·미평화협정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 등 안보와 직결되는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해야만 되

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햇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햇볕론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문제 만큼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송한호 위원 : 내년도 북한의 정세를 볼 때 오히려 북한에서는 군부를 비롯한 강경세력들이 발언권을 강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창건 50주년 기념일에서 군사퍼레이드가 위주가 되고 최광이 보고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김일성이 직접 보고했는데 당을 제쳐놓고 최광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사실상 완전하게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어찌면 군부에 의존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인 일탈현상이 증가되면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입장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대미·일 접근의 실익에 회의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경수로사업도 군부의 입장에서는 실익을 의문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핵연료봉을 용기에 집어 넣으면 핵연료봉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군부에서는 핵연료봉을 완전히 봉해서 재사용이 못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대미카드로 사용하기는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김대통령과 무라야마 총리가 얘기한 대북수교와 관련한 3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군부의 불만을 가져오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김정일을 비롯한 다른 세력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겠느냐. 6월 19일 김정일 논문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에서 사회주의와 사적소유와는 병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혁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 에서도 다원주의는 용납되지 못

한다 하면서 다당제, 사상의 자유, 사유제를 허용하면 사회주의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개방·개혁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대남정책도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안정의 결여를 틈타서 우리의 내부를 더욱 혼란시키려는 대남정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조그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압력으로 작용해서 대화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것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상대하기에 편리한 사람들이 대권을 잡는 것을 예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부담을 덜 가지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대선 전에 형식적으로 남북대화 채널을 개설하는 일은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10.26이후에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개최했는데 그당시 북한에서 총리회담을 우리 내부의 혼란목적으로 제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그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자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는다는 의미에서도 남북대화를 했다는 말을 북한에서 대화에 종사했던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봐서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에 가면 그러한 목적하에서 남북대화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언론기관이나 정부당국자도 흔히 이야기하기를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한다, 개방·개혁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남북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진의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셈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되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의도의 불순성을 더욱더 경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정부당국자가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북간의 평화공존, 평화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북한과 접촉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본합의서가 평화공존을 일차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방하고 개혁한다는 것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북한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자가 공공연하게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 북한의 개방유도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주어서 그러한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 :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사망후에 후계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형태이고 경제사정도 있고, 남한은 내년의 총선거, 비자금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획기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왔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국민들만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느냐. 대내외의 모든 여건이나 당위성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방안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해야 할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노선을 견지한 채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70년대의 대화에서 B-29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략폭격기는 방향이 설정되면 변함없이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전략폭격기의 사명인데 도중에 전투기를 만나서 전투기를 쫓아가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대화노선은 견지하고 북한에서 나쁜 소리를 하면 야단치고 좋은 소리를 하면 칭찬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B-29기가 되고 전투기는 각부 장관이 되어서 대통령은 항상 민족, 자주, 평화 등 덕담만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노선을 견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노선을 지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내년에 몇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경제교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약점이라면 우리의 강점은 경제입니다. 다만 앞다투어서 경쟁하는 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창구를 쫓아 다니면서 돈을 주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일정한 금액, 업종을 정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남북의 정치상황이 나쁘더라도 가능하다면 신발, 화장품, 생필품공장은 만들면 만들수록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사가 안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정비된 상황에서 경제교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외교적인 노력은 중국은 대체로 괜찮은 것 같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일본은 보수세력이 재등장한 것 같지만 정치공백기 같은 인상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밀접촉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접촉 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밀접촉 라인에 개인적인 공명심이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국내정치가 기존의 판도가 많이 깨져가는 상황이고 내년에 큰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쌀문제 덕택에 대국민 홍보와 언론계에 교훈을 준 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 이후에 국내정치 정세와 변동과 대북관계에 대한 국민여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김정일이 정치적인 리더쉽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군부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군 인사를 보면 혁명 1세대를 대접하면서 이른바 실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년상도 끝나기 때문에 군 인사는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자기 팀을 짜는 과정으로 당·정무원 인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김정일이 군부 강경파에 얽혀 있다는 관점을 고려해서 분석했으면 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내년에 우리도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북한이 남한의 정치세력, 특히 운동권 출신에 대한 지하공작을 내년에 특히 강화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는 못 가지만 부서별로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의 경제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고 대남정치공작에도 그 명분을 얹어서 경제인에 대한 개별교섭을 적극화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당국과 당국간의 대화는 하지 않지만 민간단체 차원에서 북한의 직맹과 남한의 민주노총과 만나서 정부를 배제하고 회담을 하자고 제의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얻으면서 정부로서는 선택이 어려운 사태를 조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장 : 다음 모임에서는 각도를 달리해서 남북관계의 국면이 92년의 남북기본 합의서 틀로 가지 못하고 94년 미·북 제네바합의의 틀로 남북관계가 가고 있어서 한국이 소외되고 미·북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축이 되는 국면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맞다면 이 판을 다시 남북이 주인이 되는,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판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전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느냐, 소외된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 복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제네바 합의의 틀에 있는 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한이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남한과는 무엇이든지 직접하지 않겠다는 형국에서는 직접대화가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회』 전략 접근을 써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사해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략, 우회접촉 방향에서의 문제의 하나로 민간차원의 대북접근, 접촉과 대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당국간 대화로 이끌어오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적극화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가운데 끼고 남쪽에는 우리가 버티고 있고 북쪽에는 중국 동북3성의 220만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에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차원의 우회전략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북한의 우선 과제는 경제난 해결입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수교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최대한 양보를 얻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문제가 96년도에 한계에 도달해서 시간을 끌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대미·대일관계 개선에서 버티는 태도를 바꾸어서 급속하게 대미·대일관계를 개선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던 동구라파에서 다시 사회주의체제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국이 북한의 대외정책이나 대남정책, 내부통치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 등등을 포함해서 다른 각도에서 남북관계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시각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각도에서 남북관계를 살펴보는 기회를 다음 회의에서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부장 :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10. 제25차 회의

### < 목 차 >

#### 1. 일반사항

#### 2. 회 의 록

- \* 주제 : ① 미·북협상구도를 남·북협상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 ② 대북우회전략 추진방안
- ③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급격한 태도변화 가능성
- ④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복귀현상이 북한에 미칠 영향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12. 5(화) 14:00~17:0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① 미·북협상구도를 남·북협상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② 대북 우회전략 추진방안  
③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급격한 태도변화 가능성  
④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복귀현상이 북한에 미칠 영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4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송응섭, 차영구, 이영호, 차상필, 신봉식, 유득환, 조덕송,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25차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북한의 현재 상황이나 우리의 사정으로 봐서 남북대화가 내년에도 될지 안될지 궁금한 입장에 있습니다. 회담사무국에서 제시한 4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해 주십시오.

강인덕 위원 : 세번째 주제인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동경에 가서 일본 외무성 종합정책국장 등을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일본 13개 기업 대표들이 북한에 갔는데 북한 대표들이 당신들을 일본의 우호단체로 인정하고 회담하겠다고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대표들은 우호단체가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만, 우호단체가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4시간이나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한과의 회담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어떠한 단체를 만나도 우호단체, 정부기관으로 보고 회담을 끝어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본과 열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는 급격하게 진전되지 않으리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지만 국교정상화문제까지는 급격한 변화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회적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와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당분간 성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두만강개발문제가 표면화되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 기업들과 합작형식으로 국제협력을 하면서 함께 들어가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복귀현상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은 일시적으로 고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유럽이나 소련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데올

로기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이익을 앞세운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공통성에 입각한 협력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헝가리 수상의 서울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체제로 복귀하는 현상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고무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주의가 변화되었고 변화된 체제를 다시 뒤집어서 일당독재체제로 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선거가 있고 5.18문제 등이 꼬리를 물고 우리의 정계를 강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와의 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느긋한 마음으로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8.15 까지 몇가지 계기가 있습니다만 상황전개를 보면서 그때 가서 구상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 : 대북 우회전략 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남북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계에서 무절제하게 경쟁적으로 하는 상황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품목, 규모가 제한된 상태에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제교류를 내세운 건전한 대화창구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하자면 회사형태가 마련되고 그 회사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값싸게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메리야스 업계에서 재고품이 많아서 폐기처분한다고 하면 싼값으로 무역형태로 북한에 팔게 하고 북한에서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물건을 사주고, 그대신 언론에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의있는 창구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경협을 단계를 높여갈 수 있고,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남북경협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한호 위원 : 남·북협상구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5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전보다도 입장이 경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5.18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추악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대화를 모독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의 정치상황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북한은 나름대로 후계체제를 위한 노력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연미반남』(聯美反南)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체제가 안정되거나 경제난 완화가 어느 정도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에는 흥미를 가질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남북간의 협상구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서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사문제 우선 협의·해결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로서는 채택하기가 곤란한 문제이고 북한이 호응할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안으로서는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식량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면서까지 대미·일 관계개선 협상에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미·일관계를 개선해서 국제적 고립 탈피, 경제난 해소를 실현해 보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취약성이 나타나면 날수록 대미·일관계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태도변화의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현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공화당이 집권하느냐를 저울질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미교섭에도 신중을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생각할 때 민주당 집권시에 관계개선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일관계에 대해서도

APEC 회의시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대북 3대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고 또 북한으로서도 그것이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큰 양보를 하면서까지 급격한 태도변화는 보이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복귀현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영향은 주리라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복귀를 가지고 대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상교육의 자료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동유럽에 사회주의국가가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종전과 같은 대북관계로 복원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무역면에서도 북한이 사실상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거래가 증대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북한과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관계만이 수립되고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과도 관계를 수립해서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유럽국가들이 사회주의체제로 복귀한다고 해도 종전과 같은 사회주의국가간의 협력수준으로 북한과 발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문헌 위원 :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영삼 정권을 괴롭히고 타도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창구를 가지고 한·미 이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은 대화상대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남한의 소요사태가 북한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부채질만 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북협상구도를 남·북협상구도로 전환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너무 기계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항상 말하고 있듯이 그들과 미국과 협상할 것이 따로 있고 남북간에 협상할 것이 따로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논리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협상할 것이 따로 있고 남·북간에 협상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관계에서도 독자적인 분야가 있고 협력분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협상구도를 남·북협상구도로 바꾸는 사고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휴전협정 관리는 미국이 창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할 수밖에 없고 통일문제는 우리의 주권문제이고 남북한 당사자 해결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북간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게 협조를 얻어서 남북이 역할분담을 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북협상구도를 남·북협상구도로 바꾼다는 것은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경수로 지원도 핵문제이고 남북문제이고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한다거나 우리의 통일정책에 침해를 주지 않는 한 한·미간의 공조로 미·북간의 협상과 남북간의 대화가 병행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EDO 관계자가 말하기를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중국적으로는 남북회담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든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시간표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북 우회전략 추진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규제하면서 민간교류를 뒤에서 촉진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추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을 위한 태도변화의 변수는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악화되느냐와 미국과 일본의 정치환경입니다.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할 때에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복귀현상은 미국의 현지 보도를 보면 폴란드 대통령 당선자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공산당원으로는 있었지만 이념적으로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구라파 정치인 대부분이 수정주의자, 기회주의자, 테크노크라트, 개혁주의자, 자유주의자가 대부분이고 순수한 공산주의자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는 바웬사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NATO에 가입할 의사가 있고 보스니아에 8백명을 파견하겠다고 해서 서방권의 멤버로 남고 싶다는 이야



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상, 국방상을 공산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당의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폴란드가 과거처럼 공산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은 넌센스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구라과 정치방향은 이 사람의 얘기로 대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복귀가 과거의 사회주의 복귀가 아니고 향수가 일시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주민들의 교양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력은 있겠지만 외교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응섭 위원 : 북한은 우리의 대선이 끝나고 우리 내부의 동정을 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간은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북한은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미·일관계를 잘 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외교정책을 잘 수립해야 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의하기는 곤란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든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차영구 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해왔던 것은 우리의 내부분제가 아니라 북한이 언제 망할까, 언제 쳐들어 올까 하는 걱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의 「임플로전」(Implosion)과 북한의 「익스플로전」(Explosion)이 우연히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북한의 어려움이 마주쳤을 때 그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북한이 DMZ 지역에서 여러가지 무리한 군사행동을 하고 군사정전위를 자기마음대로 폐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쌀지원하는 상황에서 무장간첩을 남파했습니다. 무장간첩을 보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해 봤는데 김정일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부 강경세력들의 작품 아니면 김정일의 작품중에 하나일텐데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릅니다.

북한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에서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는 군부를 정치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허약해지면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군부가 활개를 칩니다. 군부는 중국같은 사회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을때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군부는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고 전쟁을 생각하고 특히 남북간에 있어서 핵무기의 수단을 북한이 이루었을 때 재래무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격차는 남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질 것이기 때문에 군부가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는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자흐스탄에서 무기도입을 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고 특히 최광 등 군부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대외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군사력중 일부가 전방에서 훈련하다가 그대로 배치되었고 금년에 북한의 군사훈련이 30-70%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선거가 있고 북한의 식량구결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체면불구하고 식량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남북관계에서 대화없는 긴장관계 속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의 할 일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치사정, 경제사정, 군사상황 등이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금년 10월에는 김정일이 공식승계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지만 틀렸고 거기에는 내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경제사정도 90년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군사력 부문에서 훈련이 증가하고 있고 군사적인 긴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 속에서 우리 내부사정들이 한치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여건과 북한의 어려운 사정들이 일치하게 되는 시점은 한반도에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끌어안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여러명의 고위관료가 미국을 방문해서 구걸하다시피해서 돈을 받아가

는 등 여러가지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부분이 내년도에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고 남북간의 대화보다는 긴장국면이 내년도에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정세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을 경유, 우회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화없는 한해를 보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정치전략적인 평화공세적 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 위원 : 내년도에 남북대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소요가 어떠한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수로문제는 남북한, 미국이 관련된 문제이고 내년에 농업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식량난 문제가 있었듯이 경제지원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분야에서는 미·북한간의 대화소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북간의 대화소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문제는 국내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만 북한은 정치연석회의, 8.15축전을 하자는 식으로 선전적인 대화소요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대화소요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간접적인 대화, 제3자와의 대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소요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미온적인 입장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남북주도의 대화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외교적인 노력,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 남북대화 없이는 관계개선을 생각할 수 없다는 식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성호 때도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사적인 계기가 있을 때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문제로 상당히 어려웠을 때 우리가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미국도 동조를 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계기가 있을 때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긴장이 되고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압력을 가하는 정도로는 북한이 직접대화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에 대화를 직접할 수 있는 길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를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원칙을 계속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남북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한다는 당사자 해결원칙은 우리가 지켰어야 합니다. 핵문제가 국제문제화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남북간에 대화는 없어져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원칙은 계속해서 견지했으면 합니다. 국내의 정치적인 소요에 따른 대북정책의 굴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서 싹텃상처럼 끌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만주 등을 통한 우회접근전략문제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남북간의 직접적인 채널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입니다. 만주를 통한 제3접촉선은 첩보나 정보를 획득하고 북한 내부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채널로는 좋지만 대화를 위한 공식채널로써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우회접근전략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합작기업을 만들거나 투자기업으로 들어가서 다시 북한에 진출하는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이것을 역이용해서 남한에 간첩을 침투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만 진척되면 될수록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변화는 오히려 대화를 더욱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화소요가 더욱 없어지고 미국에 제2의 조총련을 만들어서 한·미이간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일접근이

이루어질수록 남한과의 긴박한 대화소요는 없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내적인 선전에 고무될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선전에도 고무되어서 남한 좌익에 대한 지원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 우 위원 : 첫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대화가 활성화된다든지, 남북교류가 획기적으로 발전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전개되어야 구도를 바꿀 수 있는데, 대화부문에서는 북한의 형편 때문에 쉽게 협상에 응할 것 같지는 않고 교류문제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구도가 그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북관계, 일·북관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구도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한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를 통해서 미국, 일본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주는 대북접근을 삼가하겠다는 선까지 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 적어도 3/4분기까지는 현재의 구도가 급변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미·일 외교를 통해서 그들의 대북접근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대화면에서는 북한의 경제가 내년에 현재보다 악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회담을 제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내부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조문시비문제가 전통적인 3년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7월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년 7월이후에는 남북경제회담을 제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문제에서 총선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마치 우리 때문에 남북대화가 안된다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변, 북경, 일본을 무대로 해서 학술회의, 이산가족 만남 등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북상황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또 간접적인 대북압력 수단이 된

다는 점에서 연길, 북경, 동경에서 남북이 포함될 수 있는 행사를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리보다도 앞장서서 규탄하고 있는 단체도 있으니 그러한 단체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미관계에서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태도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하고, 말하자면 북한의 대외활로를 미국이라는 그물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구호물자가 가능성이 있겠지만 더 큰 문제인 배상문제 때문에 오히려 대일관계에서는 강경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추가할 것은 우성호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매번 직전사건에만 중심을 둡니다. 과거는 잊어 버리고 그때 제기된 문제만을 가지고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것을 함께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북한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6.25남북부터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종서 위원 : 우선 북한에 접근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변국, 둘째는 북한을 집권 세력과 대중으로 구분해서 집권세력, 세번째는 일반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외교를 강화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해 주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 북한동포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되 인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고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다소 냉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대화는 틀렸기 때문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고 소극적이지만 확고한 원칙을 갖고서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우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대외적인 입장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리더쉽을 볼 때 김 대통

령의 인기가 있는 없든간에 주변국에 비해서 확고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경제도 국제적으로 잘 되고 있고, 국민들도 건전해서 좌경세력이 있지만 국민을 흔들어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역량도 강화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립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생각도 들고, 안보태세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이 있지만 군대가 잘 하고 있고,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위협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거나 대화를 구걸하거나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없이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북협상구도를 남·북협상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은 주변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망언을 했을 때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경하게 나갔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북3원칙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을 둘러싼 대일외교는 일단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과거보다는 북한에 대한 외교가 소원해질 것 같기 때문에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 나가면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미국, 일본과의 대화구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의연하고 소극적인 상태가 유리하다고 볼 때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관계, 경제관계는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특정단체를 초청할 때 보내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들이 갔다온다고 해서 우리 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북한국민들을 위한 원조는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 공개적으로 대담한 원칙에 의해서 술수나 기교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집권세력과 국민을 분리해서 양면작전을 써서 북한동포해방전략하에 모든 것을 했으면 합니다.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 미국과 직접하고자 하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은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세력이나 정책결정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외정책의 변화는 있다

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이 현재 중요한 위기가 3가지인데 경제적인 위기, 외교적 고립, 정치적인 리더쉽 부재입니다.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 이 3가지 문제가 개선될 수도 있고 잘 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북한은 이 일을 상대로 언제나 태도변화를 할 수 있는 개연성 내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봉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분위기에서 강경파의 현재적 위치를 보다 강화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지만 동유럽의 변화 자체가 과거로의 복귀는 절대로 아닙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과거세력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자체를 돌려놓지는 못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구정권에 급한 것은 경제문제기 때문에 북한과 과거처럼 사회주의 동맹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의연한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위해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의 적극적인 선전공세를 취하는 것이 북한의 집권세력을 고립화시키는데 유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책은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조덕송 위원 :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남·북협상구도로의 전환은 우리 내부의 정리가 절대적인 선행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남북대화의 정상화는 백년하청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때는 남한이 어떠한 제안을 하든 북한은 거부할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북한의 대남자세는 더욱더 강경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사정도 큰 변수의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97년 대선 결과까지 변수가 됩니다.

결국 98년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까지는 남북관계의 구도변화는 거의 바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선행과제를 접어두고라도 북한의 대화거부의 표면상 이유는 조문과



동과 균통수권이 없다는 2가지입니다. 난처하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상반기에 워싱턴에 인공기가 게양되게 되면 북한은 대미일변도의 협상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동안 우리는 안보위주의 정책관을 가지고 북한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전선전략을 경계하면서 새로 구성된 국회와 교섭단체를 구성한 각 정당이 합의해서 대북 국회회담을 제의해서 성사를 지켜 보고 국회의원 교류를 먼저 내세우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정상회담 실현 등을 쌍방 정부에 건의키로 남북국회회담간에 합의를 유도해 내는 시도를 해 봄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공한 쌀 15만톤을 합쳐서 장기적인 안목의 통일비용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성실한 대화호응을 전제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북지원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할 때 북한의 2가지 대화거부 명분 중 하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6.25의 비극을 언급하고 동족간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주석의 유고가 발생하여 정상회담이 무기연기되었음을 애석하기 짝이 없는 민족적인 비극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조문과동 사과 요구를 희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동시에 5백만불 이상으로 규모를 늘린 경제교류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자면 정부 당국간의 지불보증협정 등 당국간의 협정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당국간의 협상을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는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붕괴할 경우를 동시에 구상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한가지 남북간의 비밀접촉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에게 어떠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든간에 모종의 호응을 얻은 다음에 남북, 미, 중 4자회담에 의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우리가 먼저 제창한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북미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개선과 보조를 맞추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북수교협정 3원칙을 내놓기는 했지만 해방 50년, 광복 50년을 두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 분할지배를 해야 된다는 기본정책, 기본인식이 확고부동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3원칙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믿음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독도 문제, 일본망언문제 등이 나오면 남한과 북한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민단과 조총련이라도 공동으로 민족을 대표해서 일본당국에 항의하는 민족공동의 목소리를 모색해 볼 필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북우회전략 추진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을 너무 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주제인 북한의 대미·일 급격한 태도변화 가능성문제는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에서는 북한은 그럴 개연성이 큼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미국에 이끌려가는 KEDO 사업에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이 KEDO 사업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면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해서 폐연료봉처리문제를 미국에게 전적으로 이관시키고 IAEA의 요구 등을 수용하는 것을 미끼로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경제제재의 완전철폐, 대사관급의 수교 격상을 얻어 내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적극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미 이간책이 되기도 합니다.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사활의 기로에 있는 식량난과 경제파탄에서 탈피하고 또한 대남일변도적인 일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40-60억달러의 배상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대미관계의 가속화보다도 앞선 순위로 대일관계 개선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 문제는 시장경제원리를 피하고 전체주의체제로의 복귀는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의 대내선전자료 제공으로 그칠 것입니다.

유득환 위원 : 남북문제에 큰 요소가 있다면 주변국과의 문제, 당사자인 북한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북한의 문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은 어렵고 다만 주변국과 우리의 문제에 국한시켜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문제는 결국 동북아 정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문제를 볼 때 미국의 세계화전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평화, 개방, 시장개척 문제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불안정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3가지 기본문제를 조정하고 있는데, 틀림없는 것은 미국도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익이라는 것은 2천3백만이라는 북한인구가 있고 북한의 인프라구축에 서방기업이 진출하고 있는데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함께 다루어 가기에 는 힘들고 잘 관찰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북문제의 해결책은 복잡함을 뚫기 보다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정책, 손이 안으로 굽도록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투자를 해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개방 문제 등 국내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도 몇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도 연구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미국을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일본에 관한 것은 너무 일본에 대해서 과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이 남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느냐, 주변국가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과 싸우는 형식의 관계를 맺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겠느냐? 이러한 과거문제는 아프더라도 막을 내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중국도 강택민 주석의 방한시 우리에게 기울어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변국가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북한이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일 접근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접근할 것이 예상되나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없습니다. 민간채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면서 남북문제를 해결

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하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봉식 위원 : 내년을 전망하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북한에 접근하는 문제보다도 북한의 책동에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하나의 방안은 봉쇄적인 대책보다는 방어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북한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발산시키려고 합니다. 북한은 정권안정 내지 체제안정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시간이 되면 그들의 태도도 정리되어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경기의 하강속도가 거세져서 금년에도 사실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내년에는 우리의 유일한 경쟁력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수출 15% 증가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물가도 불안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시기에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의 불안한 상황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져오고 이 시점에서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은 대남교란 작전일 것입니다. 또 만일 북한의 정치적인 안정책략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자칫하면 전면도발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안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체가 안보태세의 증가를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느냐. 북한의 강경과가 걱정하는 것도 항상 미국의 태도니까 미국이 절대로 변심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문제가 있고 한국에서도 전후세대 70%가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미국이 오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미홍보와 안보유대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주제인 동유럽 사회주의 복귀현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강경노선이 이것을 잘 활용하여 자기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데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개방론자들의 입지는 이로 인해서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차상필 위원 : 다른 각도에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원에 오면 너무 정부간의 논의에 집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북문제를 다루는 것은 전쟁방지, 긴장완화, 개방촉진, 자체붕괴를 촉진한다든가 하는 각도에서 하기 때

문에 정부간의 대화든 협상이든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간에 안 되니까 민간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미국, 구라파, 월남 등에 진출해 있고 민간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북한에 가서도 충분히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북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민간기업에게 맡기면 민간기업은 길게 보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업진출이 북한의 전략증강에 도움이 되거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안 되겠지만 개방을 촉진한다든가 자체붕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가 판단해서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관여없이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면 놔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막혔을 때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놔두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이 다른 각도에서 볼때 협상창구를 트고 북한에게 이익이 되면 경제협상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 : 최근 남북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3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 특히 식량문제가 내년도에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극도의 식량위기 발생시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북한측의 군사적 도발, 테러, 대량난민 발생등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김정일이 과연 북한 통치권자로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김정일이 김일성처럼 안착(安着)하지 못하고 체제의 안정을 이룩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비무장지대 관리문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입니다.

다음번 회의에서는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주제로 다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최근 군사동향이 80여대의 진폭기와 장거리포를 전진배치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방지역에서 활발한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유엔대표부 참사관인 한성렬은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금년까지는 핵과 경수로 문제에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과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미·북협상구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정위를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유엔사측에 호응해 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DMZ내 사전 예고없는 행동은 물론 표지훼손, 군사분계선 월경, 판문점 인원통과시 사전통보를 앓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측은 속수무책입니다. 최근 북한의 긴장조성이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우리의 고민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우리 내부분제와 관련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의 책략이 많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혼란을 가중시키는 책략을 할 것인데 어떤 것이 있겠는가? 뜻밖에 회담을 제의해올 가능성은 없는가? 과거 10.26 사건후 북한에서 우리 혼란기에 접촉과 대화를 파상적으로 제의해온적이 있었고 총리회담 예비접촉을 10개월간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역으로 북한측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책략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예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세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는 연변, 심양 등지에서 이산가족들이 서신교환, 상봉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북한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만주지역 등 제3국에서 상봉하는 문제를 개개인이하도록 방치해둘 것인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할 일은 없겠는가? 통일원에서 소문없이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봉하도록 지원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봉을 이루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을 지원한다면 문제는 없겠는지 검토해보았으면 합니다.

기획부장 :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11. 제26차 회의

## < 목 차 >

### 1. 일반사항

### 2. 회 의 록

- \* 주제 : ① 평화체제 구축문제
- ② 내년도 총선정국과 관련 우리 내부의 혼란을 노린 북한의 예상되는 대남책략
- ③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지원문제





#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5. 12. 12(화) 13:30 ~ 16:0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① 평화체제 구축문제

② 내년도 총선정국과 관련 우리 내부의 혼란을 노린 북한의 예상  
되는 대남책략

③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지원문제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6명) : 정홍진, 강인덕,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송응섭,  
차영구, 이영호, 이서향,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26차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수해상황 관련 VTR과 주간북한 TV동향을 시청한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장 : 회담사무국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문제 3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군사분야 위원부터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서항 위원 : 외교안보연구원에서 11.20~21 미·일·러·중 4개국 외무성 한국과장를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미·일과 러시아·중국의 의견이 확연히 구별되었는데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요약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의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가. 즉 김정일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김정일이 북한체제를 통솔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집단이 한국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권력집단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과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 『2+2』, 『2+4』 공식(Formula)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새로운 결론에 도달한 것은 『2+2』, 『2+4』 등은 과거의 냉전체제 속에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때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냉전상황 속의 공식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로는 북한이 한국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할 능력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을 내놓더라도 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공식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러·중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개방, 변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과거에 『2+2』 공식 등은 도저히 되지 않고 평화체제 구축문제라는 것이 남북간의 상반된 주장이 절충돼서는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 4강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을 개방, 개혁시켜서 한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접근이 평화체제의 첩경이고 그것만이 앞으로 진정한 평화구축의 접근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모이세예프 러시아 외무성 한국과장이 3단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1단계는 군사문제에 대해서 미·북간의 협의를 먼저 하고 2단계로 남북고위급회담, 3단계로 남북한 및 4강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브라운 미국 국무성 한국과장은 절대로 한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군사문제 또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미·북간의 협의가 첫단계로 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북한이 의사와 능력이 없지만 북한과 한국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남북대화 재개라든지 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미·일·러·중 4강국이 집단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서 남북대화 재개 촉구를 공동으로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자는 안(案)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공동선언문이 효력을 나타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효력이 발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무성 담당자는 4강국이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경우는 북한은 한국과 4강국이 자기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획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동안 아무 것도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한 방법이 KEDO 협상을 통해서 남북간의 교류, 한국의 지원을 늘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난관이 있더라도 KEDO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KEDO 협상이 성사될 경

우는 미·북 제네바 합의문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DMZ에서의 병력철수, 미사일 후방철수 문제 등이 KEDO 협상, 미·북제네바 합의의 이행단계에 따라서 서서히나마 이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것을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할 것인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 채널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하고 군정위박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할 위험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이 형식적으로 참여한 가운데서 미·북이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미사일 후방철수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을 한다면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남북간의 상반된 접근방법을 절충, 타협해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2+2』, 『2+4』 공식(Formula)은 냉전체제 때에나 타당한 방법이고 이제는 한국과 주변 4강이 합심해서 가급적이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의 지름길이 아니냐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핵확산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북한 군축문제연구소에서 한 사람 오고 말레이시아 공판원이 한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북한의 태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북한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행되고 있다고 우겼습니다. 어떻게 이행되느냐 했더니 비핵화 공동선언 3항에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미·북 제네바합의에 의해서 불보유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행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김일성 뺏지를 아직까지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더니 돌아가신 분을 흠모하기 위해서 차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론은 과거의 『2+2』, 『2+4』 보다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변화시키고 개방시키느냐 하는 것이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 4강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호 위원 : 평화체제문제가 내년도 남북문제의 중요한 의제로 될 것이라는 데는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북한이 들고 나올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다시 만든다든지 또는 남·북, 미·북간의 협의를 거쳐서 무엇을 만든다든지 하는 제도화된 개념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화체제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지속되어야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지 조약,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었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평화체제는 평화를 지켜 나가는 남북한의 관행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자체를 그대로 실천만 한다면 평화체제는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체제를 만든다든지, 법적인 절차를 구상하는 것보다는 남북간에 기존 합의의 틀 속에서 실천방향을 강구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들고 나오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북한이 들고 나오고 있는 『새로운 신평화체제』는 그 내용으로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정전협정을 폐기시킨다는 개념이고 남북간에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동결시킨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킨 상태이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해서 미·북 정상급 회담을 하자는 식의 전술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는 내년에도 집요하게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전위원회는 중단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고 중립국감독위원회도 현상태대로 지속될 것이고 정전협정을 폐기시킨다든지 또는 일방적으로 말로만 떠들 것이고 또는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전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 해 왔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미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또 미국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누차 언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미외교나 주변국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데로 되돌아오게 하느냐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소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전반적인 남북문제와 기본전략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방향설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군대가 확실하게 평화체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국민적인 뒷받침, 정부의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북한의 전략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남한의 총선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를 구상해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여러가지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남한 정권에 대해서 각종 모략선전, 선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남한내에 있는 북한 동조세력들에 대한 고무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금년도에 무장간첩이 들어와서 신분을 밝히고 접근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국민의 무관심에 편승해서 새로운 침투전술을 북한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서건 비공식적으로 나서건간에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한다면 북한에 탐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 북한에게 노출된다고 볼 때 북한이 역이용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지원한다는 흔적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내버려두면 불법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면서 방관하는 것도 불법이 되니까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조치를 지원해 주되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한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영구 위원 :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금년 들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왜 현시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느냐를 의아해 하는 심정입니다. 북한과 평화체제가 없어서 평화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적대국간에 평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안정화시키는 체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은 북한의 장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전위원회를 무실화시키고 DMZ내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지난 2년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전협정체제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필요성 때문에 평화체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북한은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없앴고 북한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같은 무모한 짓을 해 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첫번째는 미국과의 장군급 또는 고위급의 군사접촉라인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안보보장을 확약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해서 한국의 존재가치를 무시해 버리고 한국 군대가 미국 군대의 허수아비임을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한국을 배제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만약 미국으로부터 이와같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UNC 폐지를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이미 한반도에는 평화가 안착되었기 때문

에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부질없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국내외에 선전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네번째는 이러한 것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국과 미국간에는 의견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한·미간의 동맹을 와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위와같은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북한은 2~3년 동안 꾸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나?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는 정전협정이 완전하지 않고 정전협정의 상당부분이 이미 실효되었거나 효과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살려야 합니다. 남북간에 진심으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정립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북한이 일방적인 행동을 저지르면 우리는 따라가서 해결하려는 수동적인 정책은 그만 두어야 됩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국제법 위반, 위법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정전협정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유엔의 지지까지도 확보해야만 합니다.

네번째는 미·북간의 다른 접촉은 가능하지만 군사적인 고위당국자간의 직접접촉이나 회담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점에 대해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우리는 북한의 기본구도에 완전히 말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북간에는 핵문제를 놓고 정치접촉, 경제접촉, 외교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넘겨주면 북한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번째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의 대화채널을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5가지의 기본원칙 중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의 이 모든 것들은 북한과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도 충돌이 있습니다. 평화협정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는 20~30%이고 미국과의 문제가 70~80%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이 있는 부분이 DMZ 내에서의 군사적인 긴장문제입니다. 미국은 DMZ내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미·북간에 고위회담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정전협정에서 MAC으로 위기를 관리했습니까? 과거에 남북간에 많은 위기가 있을 때 힘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DMZ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하면 안되며 정상적인 채널이 없으면 힘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서 해결해야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유의할 사항은 미국과 이와같은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미공조가 북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유엔이나 대주변국과의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시 위법행위를 거두어 들이든지 타협점을 찾아 오도록 우리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평화협정체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지만 우리의 원칙이 포함된 미래지향적인 안을 북한이 받아들여건 안받아들이건간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정전협정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들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 미국과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북한이 받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입장정리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이렇게 하면 안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받을 것이다, 『2+2』, 『2+4』 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마련되었을

때 주변국이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은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간에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응섭 위원 :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체제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다른 것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기본합의서의 내용들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겠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에 한국의 내부분제를 거론하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대화상대가 없다는 논평이 있고 엄청난 대남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남북대화는 장기화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본합의서체제를 끝까지 주장했으면 합니다.

금년이 기본합의서 체결 4주년이 되는데 기본합의서가 잘 되어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해서 대국민홍보, 대북메시지가 될 정도의 언론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대적인 행사는 아니더라도 간소한 행사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도 선거가 있는데 선거시기에는 어느 나라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책략을 계속해 왔지만 남한내의 혼란을 위해서 대남책략을 더욱 강화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접근, 다시 말해서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일본과의 수교문제에 대해서 더욱 서두르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간의 이간, 한·일간의 이간을 기도하는 책략을 더욱 더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는 미·일과의 외교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가족을 위한 지원문제는 강화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곽희정 위원 : 평화체제문제에 대해서는 차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분석해 주신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정전협정체제가 시작된 것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책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유의

해야 하고 또 가장 긴요한 것은 군사외교에 대한 경험이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군사적인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외무부도 이러한 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엔외교, 경제외교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군사적인 외교 노력은 외무부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공조를 위한 군사외교, 유엔·중국·일본을 포함해서 외교적인 노력이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경험했고 부여간첩 사건 등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87년 6월의 경험을 상기해 보면 6.18에 전국적으로 8만명의 데모인원이 동원되었을 때 경찰력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군대가 비상사태시 시위진압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전국적으로 데모인원이 8만명 이상 동원되면 무정부상태가 됩니다.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실책, 명분없는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불순세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유도한다고 할 때는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전복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고비로 해서 매우 집요하고 악랄한 도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미리미리 대국민 홍보, 여러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70년대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이남순이라는 화교로 가장된 친북인물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토론토에서는 전충림이라는 사람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해 왔는데 그들은 공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상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산가족의 제3국에서의 상봉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염원 등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정부가 무조건 못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작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고령자들을 선정해서 시험적으로나마 적십자사를 통해서 계속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문현 위원 : 평화체제문제에 대해서 차위원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첨가

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북한의 평화협정 용어와 논리의 최면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면술에서 벗어나야 국민홍보도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배제된 미·북간의 협상은 한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이유가 없고, 또 미국이 복침을 했고 남한을 강점해서 분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는 평화협정을 미국이 동의할 리가 없고 또 한국·중국·러시아를 배제한 미·북평화협정은 중국, 러시아도 년센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체제위기에 쫓기고 있고 협상의 조건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민주화되어서 국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보장을 받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을 이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중간단계조치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목표같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대미투쟁에서, 통일문제 여건조성에서 획기적인 공적을 쌓았다 해서 김정일의 공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김정일의 통치공적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중간단계조치라도 관철해서 대미투쟁, 평화통일의 여건조성에서 전제를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김정일이 이것을 통해서 군부를 장악하는데 활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평화체제라는 최면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북한의 이러한 기도를 봉쇄하는 대국민, 대국제사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공조, 대국민 홍보입니다. 북한과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를 정리해서 내년초부터 북한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의 반평화적인 본성,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법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 진정한 평화보장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96년도를 말하기 전에 95년도의 남북관계를 총평가한 다음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95년도의 남북관계를 총평가한다면 북한의 『반김영삼정부』 통일전선전술 공세에 대해서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한 화해지향적인 민족발전공동계획 기조하에 대북정책을 전개했다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당국간의 대화는 쌀회담이 있었지만 거의 중단되었고, 그러나 직간접적인 남북간의 상호관계는 아주 활발했던 한 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우성호 납치, 무장간첩 납파, 재야인사에 대한 편지공세, 8.15범민족대회를 개최했고, 우리는 대북경수로지원, 쌀 15만톤 지원,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방북인사들이 많았고, 남북물자교류가 약 3억불에 달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1,850억원을 쌀지원하는데 썼습니다.

북한은 비방과 도발행위로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1,850억원이라는 통일비용을 사용하고 동포애적인 손길로 베푸는 행동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남북대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국민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나타내 주었으면 합니다.

96년도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김정일의 공식승계가 있을지 없을지 또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악화될지 등 북한 내부의 변수가 있고, 우리는 내년도 총선 등 국내적인 변수가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 등도 변수입니다. 이러한 변수가 있지만 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금년과 똑같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마지막 체계적인 교시인 10대강령에 기초한 『반김영삼정부』 통일전선공세는 내년에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당면 투쟁목표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북평화협정 공세입니다. 이것은 위기관리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장성급 대화접촉에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김영삼정부의 고립화입니다. 가능하면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통일애국인사의 석방운동, 미전향장기수 석방운동 등 3가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투쟁목표는 그대로 계속 되

라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반김영삼정부』 통일전선공세와 대남긴장조성책동 등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화해지향적인 민족발전공동계획 기초하에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치고, 그러나 경수로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평화협정과 결부시키는 책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무부와 우리의 전략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식량사정 등 경제의 악화가 금년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적이고 동포애적인 우리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쌀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면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는 정면으로 쌀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남북당국간에 유상으로, 공개원칙하에 쌀을 비롯한 식량, 경제원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회담으로 유도해서 회담에서 처리해 버리는 여유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교역, 투자, 기업인 방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데 법적인 규제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금년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면 북한이 정치협상 공세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국회 회담 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선불리 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회담, 정치협상을 하자면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치협상은 절대로 반대해야 하지만 국회회담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교류는 적극적으로 끌어 들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 기초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15 범민족대회를 통해서 또한번 소란을 피울텐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애국인사 석방운동도 일촉해야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는 91년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제3국에서 남북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은 물론 편지왕

래하는 것도 허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북경, 만주 등지에서 만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우리에게서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말려들 가능성도 관례를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제를 잘하고 안기부 등에서 보안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가능하면 중국 만주에서는 상봉, 편지왕래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만 제3국 현지법에 저촉이나 외교적인 마찰만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한호 위원 : 평화체제문제는 작년 4월이래 북한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내년 도에도 공세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병력을 전진배치하는 것도 그들 주장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관철해 보려는 속셈이 내재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견지해 준다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미외교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외교공세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로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미교섭에 활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서 평화보장을 위한 3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미국에 갔다오셔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과 어느정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입장을 지키면서 대미교섭에 임한다면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을 내년도에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미국에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나타난다면 과거 북한이 6공 초기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회담을 하자든가 하는 대화공세를 전개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최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설사 여소야대가 된다 하더라도 국회회담 제의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북한이 국회회담을 하면서 재미를 못봤습니다. 야

당도 여당도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주장을 했고 북한의 여러가지 기도가 사실상 어떠한 면에서는 좌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회담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희망을 했고 북한에서는 오히려 원하지 않았 습니다. 북한이 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이루어진다면 다른 남북당국간의 회담도 열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을 겨냥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의에 무조 건 지지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회담은 북한이 제의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부가 뒤에서 체 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때 정부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을 한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 제라고 해 왔지만 사실상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제3국에서의 상봉을 지원한 다면 이산가족들로부터 상당한 호응과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전상과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주민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자유의 바 람을 투입시킬 수 있고 또한 북한정보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공식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 에서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현지 미군사령관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접촉하겠다는 것만 막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평화 체제문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이 없고 힘에 의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립화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미국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말려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군사령관이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나자고 한다면 중간단계가 되는 장성급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휴전선상에서 접촉의 필요성,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의 근거를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면대응해서 사



건을 확대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2』, 『2+4』 공식 (Formula)으로는 안되고 『1+4+1』 외교, 우리가 4강국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외교를 취하면서 성과가 있을 때 북한이 뛰어들어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군사외교를 펴나가는 것이 기본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북한의 정세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특히 유훈통치를 끝마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대 경제목표의 94~96년 완충기가 끝나고, 3년상도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유훈통치 기간이 종료됩니다. 유훈통치 기간이 종료되면 김정일이 정면에 등장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개편문제를 김정일로서는 생각해야 되는데, 권력구조 개편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노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노·장·청』 (老·壯·靑) 3자결합 위에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군부세력과 민간세력과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등 여러가지 권력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문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간의 대화, 국회회담이든 민간대화가든 특히 서울, 평양을 왕래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사상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화든 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없이도 지원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북한이 문제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남전략에서 특별한 제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국회회담을 제의한다면 우리가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내년도에 북한의 대남공작의 기본방향은 『반김영삼』 통일전선전략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틈타서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폭로될 경우에 남한 좌경세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잠복해 있는 간첩을 통해서 현정부의 의식을 줄이고 여소야대가 될 수 있도록 공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좌경세력을 잡아넣는 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는데, 사전에 이러한 조치만 취한다면 선거에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잘 넘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돌발적인 회담제외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옹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는 조창호씨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공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안승운 목사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이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만나는 것은 방치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변이나 시베리아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조직적으로 한다면 외교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시베리아에서 우리 목사들이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유인하는데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끌어내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은 중국지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저항을 일으키게 하고 북한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임하는 형식으로, 규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만 하지 않으면 상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운동단체에서 민간기금이 나간다면 몰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상필 위원 : 북한이 개방하겠다는 변화가 없는 한 종래에 진행되던 여러가지 협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동안 협상을 했지만 북한이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협상은 평화협상이라고 생각해서 덤벼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협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상을 보면 월남에서도 남북간에 파리에서 평화협상을 했고 잘 되니까 북쪽이 남침을 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는 평화라는 이름의 뒤에서 침략한 것이 과거에 해온 방법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수법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생각

합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육·해·공 3군이 전국적으로 군사훈련을 해서 북한에게 겁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의 우위를 과시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봉식 위원 : 평화체제 구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화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보장은 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힘과 미국의 힘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미간의 협정이 있더라도 영구적으로 주둔한다는 전제하에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증강과 국민결속을 계속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력증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무력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군사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보장체제와 관련해서 유엔의 주관하에서 군축문제를 계속 우리로서는 떠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담이 되니까 군비를 유엔의 감시하에서 공동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휴전선상에서의 미군의 납치입니다. 그래서 미군과 대화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특공대를 파견해서 대통령후보 몇 명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북한체제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강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같은 혼란시기에는 지역적으로 분열시키고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요인암살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조덕송 위원 : 휴전협정이건 정전협정이건 유엔군을 대표하는 우리측 장성이 도장을 찍은 것이고 북한, 중국이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UNC의 깃발아래 법적, 이론적으로 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판문점에서의 정전위 기능 파괴활동에 대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체라고 할 수 있는 UNC

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국민인식을 가져오게 하고 있고 무관심의 방향으로 돌리는 추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파견되고 7.27 휴전협정 당일날 참전 16개국 대표의 공동정책선언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유엔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UNC가 존재하는 한 유엔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을 동원해서 파괴되어 있는 정전위 기능의 회복, 나아가서는 평화체제보장 구도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돌릴 때가 벌써 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성급 접촉에 대해서 미·북간에 협상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헬리콥터 사건으로 인해서 선례가 성립되었습니다. UNC 이름아래 있는 미군인데 대응조치가 없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할 촉구의 태도 내지는 대북 표명, 국제적인 태도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동원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전에 대해서는 현정국의 상황을 틈타서 여소야대를 위한 공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자생적인 친북세력이나 고정간첩에 의한 공작에 의해서 상당수의 합법성을 가장한 정치인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대선으로 이어지는 내부의 사정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대거진출을 위한, 특정정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작을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내부사정이 어떻게 되건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는 국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적십자사를 내세워야 합니다. 생존과 거주지를 확인해서 만날 수 있다면 돈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 북한은 외화벌이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데까지 신경을 써야 할 북한의 실정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적십자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는지 해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나 적십자사가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보다도 우리의 언론기관이 자연히 알게 되어서 보도를 함과 동시에 통일원이나 적십자사에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산가족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했다는 식의 해명을 한다든

지해서 외교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후세의 기록에도 자료로 남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 위원 :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서는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하느냐 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서는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단기적으로 96년도만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히 기대할만한 진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 현재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 권투시합을 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코너에 몰려서 다운되기 직전에 결정타를 맞지 않으려고 잼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느냐? 쉬운 방법은 강력한 카운터블로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잼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대화하는 장으로 나와서 대화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더 이상 잼을 맞지 않는 방어태세를 갖추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못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부여간첩 사건때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일어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성명도 있었지만 이러한 성명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잼을 휘두르는 것인데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시했으면, 미국과 대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것 없이 우리와 대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 전제를 코너에 몰려서 잼을 휘두르고 있다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걱정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더 강력하게 코너에 있는 상대를 끌어내는 방법은 국제적인 압력, 내부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시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번째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야당 차원이 아니고 기성세력과 신진세력과의 관계에서 선거에서 신진세력들이 힘을 쓰게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신진세력들은 아직도 정체가 뚜렷하지 않고 입장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이 등장하는 신진세력들이 빠른 시일내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야당보다도 여당의 신진세력과 야당의 신진세력이 공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북한이 오판을 해서 동조세력으로 넘겨짚는 사태를 미리 예방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체를 밝혀내는 상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제3국에서의 상봉을 지원하는 문제를 설정하면 제3국을 공식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3국으로 하여금 이산가족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장소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제3국에서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는데 정부나 공식기구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반드시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문제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3국에서의 상봉이 빈번해질 때 적십자회담, 당국자회담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공식화한다든지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을 공식화한다든지 하는 공식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종서 위원 :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구도를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책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력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군사동맹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김일성의 강력한 리더쉽하에 지도층과 국민들이 단결되어 있었고, 경제력도 지금보다는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수모를 참아가면서 세력균형이 될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린 상황이 조성

되었습니다. 중국·소련과 수교했고, 김일성은 죽어서 정치리더쉽이 표류하고 있고 경제는 파탄상태이고 외교적으로는 극도의 고립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처럼 끌려 다니는 수세적인 대북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민족통일을 위한 전략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우리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저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과거에 북한이 남한에 취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에게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체제문제는 기대할 것이 못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평화가 위협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현재체제를 놔두면 될 것이고, 발전시키려면 남북기본합의서로 복귀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의 노력도 더이상의 최선의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전에 대해서는 장난은 있겠지만 우려할 바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장난을 쳐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간첩을 보낸다 해도 간첩이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장난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못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80년대에 좌경세력이 민주화세력과 당면 목표가 같고 전술이 같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화세력과 좌경세력이 구별되고 민주화세력이 도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선거 때 북한이 무엇을 하겠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이산가족문제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했던 판문점에서의 면회 등 공개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계속 북한에게 요구해서 안되면 마는 것이고 하게되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은 없지만 준비는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홍진 위원장께서 전쟁가능성은 1%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준비는 100%가 되어야 된다. 그 1% 때문에 100%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안보자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준비는 100% 하되 기대는 하지 말고 서둘지 말고 의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우 위원 : 지난 봄 북한이 회담과 관련해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엔외교가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유엔의 확고한 입장이 밝혀지면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주장이 국제적인 호응을 못받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유엔이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 북한의 주장이 메아리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유엔을 활용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평화체제에 대해서 당사자문제는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문제에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주었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야당후보를 암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여간첩사건에서 만년필총을 보면 성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부에게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제3국 상봉이 커나갈수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반대로 북한에서는 움추려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다만 중국 『홍십자』와의 비공식적인 협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주선에 의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좀더 촉진되려면 가장 가능하고 편리한 장소가 중국 연변입니다. 북한동포가 일본 등 외국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연맹과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중국 『홍십자』와 협의해서 만약 중국이 협조를 한다면 중국 『홍십자』 연변 길림성 지소에 창구로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우리가 가서 사무실을 차리면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중국기관이나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면 좋은데, 그 경우에 중국 『홍십자』와 비공식적인 협의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중국에 사는 동포로서 공신력있는 있는 조직을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군축을 전제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제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내년 중반 이후쯤이라고 봅니다. 대화를 유도하는 방편으로 평화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 군축을 앞세우면 북한에서 호응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좋은 말씀들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송용섭 위원이 말씀하신 기본합의서 채택 4주년이 될 때에는 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성명을 낸다든지 해서 구체화시켜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문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예산은 공개되어야 하고 몇몇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목표가 인도적이라고 절차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획부장 :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담사무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 금년에 남북대화유경험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를 26차례 진행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입력차원에서 진행했고 후반기에는 자체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부터는 더욱 취지에 맞게 회의가 운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내년도의 첫회의를 위해서 과제를 미리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수로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수로문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부지확정문제, 경수로공급협정 체결문제가 병행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부지문제와 경수로공급협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태도는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 한국형이 들어온다는 것은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사실상 배제하고 미

국을 상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그 태도를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급진화된 것입니다. 현 상황은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96년도에도 북한의 한국배제전략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경수로문제가 진전된다는 것과 한국배제는 이율배반인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경수로공급협정이 연내에 체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경수로공급협정에 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어서는 사업이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술자를 파견하고 훈련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남북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경수로공급협정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것 하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묘수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내년도에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고집을 꺾고 KEDO와의 협상에서 합의쪽으로 들어온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KEDO와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약속된 중유가 차질없이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유가 북한에 주는 영향이 당초보다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50만톤씩 들어오는 중유에 대해서 생명선처럼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경수로문제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더 이상 진척시킬 수가 없고,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더 이상 진척시킬 수가 없다는 답을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경제난 해결은 96년에는 완충기가 종료되고 97년부터는 차기전망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차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차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텐데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놓고 앞뒤를 짜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계산도 북한이 했으면 좋겠



